

인권정보자료실
R1.1.14

인권하루소식

합본 14호
(2000년 1월 ~ 6월)

인권하루소식

합본 14호
2000년
1월 ~ 6월

인권정보자료실
R1.1.14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사랑방

110-522 서울시 중로구 명륜2가 8-29 (4층) 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일지

1. 의정부 환경미화원, 시설관리 위탁반대하며 파업, 경찰 업무방해로 대거 연행 (4/1, 15)
2.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김대중 정권 규탄!" 2000년 첫 민중대회 7천명 참가, 열기 후끈 (4/1)
3. 강제송환 위기 버마 민주화운동가 사린, 인권단체 "보낼 수 없다" 대응 모색 (4/5)
4. 헌법소원 의식했나 법무부 '미결수 구치감에서 수감 못 채우게' 계호근 무준치 개정 (4/7)
5. 불법체류자 자녀 학교 입학 가능, 신분탄포 시 입학 취소 가능성 (4/7)
6. 삼부커뮤니티스, 43살 이상 여사원 무더기 해고 (4/8)
7. 최춘마을 강제철거, 여중생마저 반대 시위 (4/8)
8. 여성 피의자 알몸수색 사회적 관심 지속, 토론회 개최, 공대위 구성 (4/11, 15)
9. 여전한 대학가 학생사찰, 한신대 건국대 비밀 문서 발각 충격 (4/12)
10. 인터넷 기업 개인정보 유출에 네티즌 제동, 네이버컴·삼보컴퓨터 상대 손해배상 1억 청구 (4/13)
11. '등록금 인상 반대' 교육부 점거투쟁, 시민단체 "담연한 저항" 지지 표명 (4/13) / 전국 10개 이상 대학, 한달 넘게 본관 점거 투쟁 (4/22)
12. 이주노동자 가정, 정부의 외국인 차별정책으로 생이별의 고통 (4/15)
13. 울산중앙택시 간부 파업 노동자 반나절 폭행, 경찰 보고도 모른척 (4/18)
14. 에바다 국·공립화 요구하며 대학생들 단식농성 (4/20)
15. 재판 중 이감은 불법, 한총련 전 의장 감위원 씨 2년제 법정 투쟁 (4/22)
16. 법원, 포털의 인터넷 홈페이지 배경화면의 지적소유권 인정, 삼미특수감 등 국내의 노동자, 미러사이트 만들어 항의 (4/25)
17. 구속·수배 노동자 50여명, 부부 활동가 함께 구속되기도 (4/26)
18. 남경남 전철연 의장, 사제총포제작 배후조정 혐의, 2년 6개월 실형 선고 (4/26)
19. 미국이 SOFA 개정 협상 계속 연기하자 시민사회단체 협상 재개 촉구, 대한변협, 토론회 열고 SOFA개정 필요성 재확인 (4/28, 17)
20.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투표 못한 장애인, 관할 선관위 고소 (4/28)
21. 인혁당 희생자 유족들, 25년 추모제 열고 올바른 진상규명 촉구 (4/28)

나라밖 소식

- 제네바 인권소식
- 발전권 개념을 넘어 이행으로- 불평등한 국제경제구조가 걸림돌 (4/5)
- 전쟁의 광기, 죽어가는 인권- 체첸 지역 인권침해 조사 촉구 (4/12)
- 폭력의 공포에 시달리는 소수자들- 국가의 적극적 보호 조치 촉구 (4/19)
- '주거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신설- 강대국들 다름에 빛바랜 중국 인권문제 (4/26)
- 헬기 소음과 최루가스 속 전원 연행- 국제금융기구 반대 시위, 워싱턴 경찰 감경대응 (4/19)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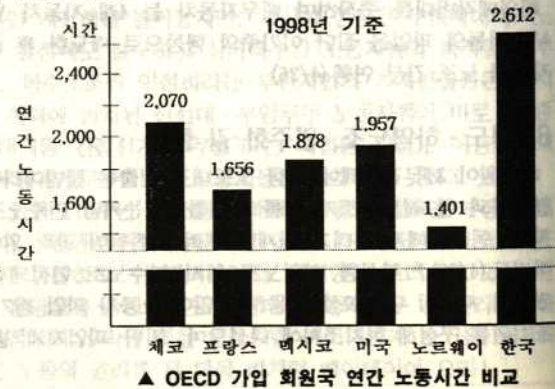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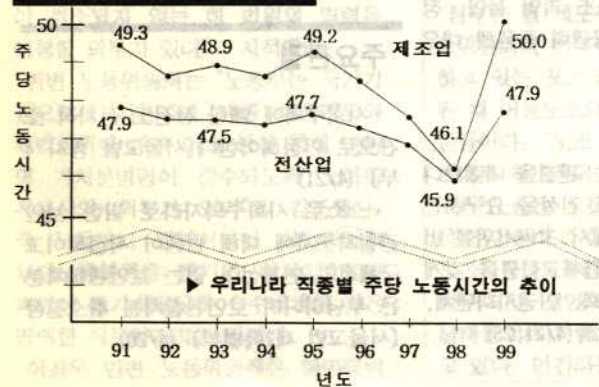
- 국제인권봉사회 부소장 마크 톰슨 씨를 만나 "인권운동가 보호를 위한 특별보고관 임명 필요" (4/12)

인권간행물

-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철폐 및 조직화 방안 (민주노총 펴냄, 4/5)
- 국제인권법의 국내적용에 관한 연구 (정경수 석사논문, 4/12)
- 연변으로 간 아이들 (김지연 사진집, 4/19)
- 주한미군범죄백서,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미군범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펴냄, 4/26)

통계로 보는 인권

[자료제공 : 민주노총, 관련기사 본지 4/26]



인권하루소식

2000년 5월

(제1606호 ~ 제1625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2000년 5월 2일(화)

제 1606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파업 끝나자 무더기 징계

신선대·우암부두 - 노동계, 총파업 경고 반발

신선대·우암부두 노동자들이 65일간 파업을 풀고 현장에 복귀하자 사측이 이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신선대·우암부두 노동자들은 28일 조합원 총회를 갖고 "현장에 들어가 싸우겠다"며 두달 넘게 계속해온 파업을 정리하고 5월 1일부터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측과 우암터미널측은 29일 불법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상영 우암부두 노조 지부장과 김영수 신선대부두 노조 지부장을 해고하는 등 신선대·우암부두 노동자 12명을 해고하고 61명에게 3개월 정직, 견책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신선대·우암부두 노동자들은 유급휴일인 1일 회사로 출근해 징계철회와 원상복지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한편 「신선대·우암부두 정상화 촉구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원형은 등)는 1일 성명을 내고 △부당징계철회, 조합원 원직복직 △부당대체근로 방만한 노동부, 해양수산부 장관 사퇴 △신선대·우암부두 노조 인정 등을 촉구했다. 또한 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사측이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부당하게 해고 등 징계를 당한 조합원들을 위해 법적 조치와 항의시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역시 1일 성명을 통해 조업 복귀를 선언한 신선대·우암부두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 보복징계가 사태를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회사가 무리한 징계들을 고

집하고 정부당국이 회사의 불법 부당 행위를 방지한다면 민주노총은 5월 총파업과 별도로 노동부장관 퇴진 총파업을 즉각적으로 조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해정>

"근로기준법 완전적용!"

비정규직, 노동절 집회 경찰과 충돌

중소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110주년 노동절을 맞아 서울지역 부문노조들과 비정규직전국모임 등으로 구성된 「지역노조 연대회의」는 1일 오후 1시 30분 약 5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묘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사업장 내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업장이 잦다는 이유로 혹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휴일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있으며 작업 외 수당도

쟁겨받지 못한 때가 너무 많다"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업주를 구속하고 모든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집회를 마치고 문화행사에 참가하려던 노동자들은 경찰이 학생들을 대량 연행함으로써 문화행사가 무산되자 고려대에 집결해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연행된 학생들은 약 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대와 경찰과의 충돌이 밤 10시 30분 경까지 계속되었다. <남택진>

광운대 자주대오, '이적단체'

4명 전원 유죄, 집행유예

서울지법 형사 22부(재판장 최병덕)는 1일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된 안기현(광운대) 씨 등 4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씨 등이 지난 98년부터 광운대 내에 '자주대오'란 이적단체를 구성해 활동해온 혐의가 인정된다"며 안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구속자 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유해정>

주요공판안내

- ▶ 양지마을 민사소송 재판
 - 5월 2일(화) 오후 2시, 서울지법 559호, 결심예정
- ▶ '푸른학교' 관련 집시법 위반 사건
 - 이태영(경기동부연합 의장) 등 5명 - 99년 3월 경기도 성남시의 '푸른학교'(실업자 가족 어린이 학교)운영이 폐쇄되자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며 성남시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가 집시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5월 3일(수) 오후 2시 성남지원 1호, 속행

인권
시평

다시 인권을 생각한다.

이제훈 (한겨레 기자)

4·13총선을 치른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부산 북·강서갑 선거구에서 정형근 한나라당 후보가 76%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16대 국회 의원이 된 사실이다. 그 문제만 생각하면 아득해진다. 적어도 내 수준에서는 그 어떤 사회과학적 분석도 해석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의 바로 옆 부산 북·강서을 선거구에서 민주당의 노무현 의원이 지역감정의 된서리에 치명상을 입고 세 번 거꾸 낙마를 한 사실도 안타깝기는 하지만, 해석이나 분석은 가능하다. 선거 전의 여론조사와 판이한 선거 결과이지만, 전혀 예상 못한 바도 아니다. 또 울산 북구에서 민주노동당의 최영규 후보가 간발의 차이로 원내진출에 실패한 사실도 분석이나 해석은 가능하다. 아쉬움 안타까움, 슬픔과는 별도로 차분하게 생각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정 의원에 쏠린 부산 북·강서갑 지역 주민의 전폭적 지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이 선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정 의원이 총선시민연대의 집중낙선 대상자였는데 어떻게 그런 압도적 지지표가 나올 수 있느냐, 부산 시민의 시민의식은 도대체 어느 수준인가 라는 식의 의문이 드는 건 아니다.

다만 5.6공 시절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사람들을 짐승 다루듯, 아니 무슨 물건 다루듯 했던 대표적 반인권 인사적어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 의원의 정치적 색채와 비전, 위상에 대해 부산시민들이 어떻게 판단한 것인지, 내 감탄으로 도저히 생각이 미치지 않는다. 정 의원이 받은 76%라는 지지표는, 지역감정이나 부산시민의 '반(反)DJ'감정만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게 내 판단이다.

그 집단 무의식의 심연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 것일까. 그래서 다시 생각해본다, '인권'이 무엇인지. 인권을 부정하는 사람은,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인류에게, 범위를 좁힌다면, 한국사회엔 인권에 대한 광범한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듯하다. 그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인권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어디까지가 인권이고 어디서부터 인권이 아닌 것일까. 인권은 세상의 다른 것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까. 그 관계가 상충할 때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

민족과 인권,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과 인권, 정치와 인권... 그 수많은 함수관계에 대해 전에는 그래도 남들 수준만큼은 나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형근 의원 건에 맞닥뜨린 이후로는 머리 속이 하얗게 표백된 것처럼 아무 것도 모르겠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본다. 인권이 무엇인지.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23일 - 5월 1일)

1. 열심히 파업하는 사람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항만터미널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두 달째 파업을 벌여온 부산 신선대·우암부두 노동자들, "현장에 들어가 긴 싸움 준비하겠다"며 복귀결정. 그러나 복귀결정이 나자 항만터미널측이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 73명에게 징계조치를 내려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4/29) 한편 민변은 단체교섭을 거부한 항만터미널도, 이를 묵인하고 있는 노동부도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파업이 정당하다는 법률적 견해 밝혀(4/28)

2. 땅 위에서도 굴뚝 위에서도 "못살겠다!"
철도청이 근무지를 이탈해 대의원대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철도노동자 74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리자 노동자들은 철도청이 노동자들의 민주화 요구를 탄압하고 있다며 반발. 특히 부산철도 노조원 가족들은 굴뚝 위에서 징계에 반대하는 고공시위를 벌이기도(4/27)

3. 고문경찰관, "고문하라고 할 땐 언제고?"
국가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 당시 고문경찰관 등 관련자 9명을 상대로 2억 4천여만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한 것에 대해 서울지법 민사합의 26부가 경찰들이 고문사건과 관련해 직무를 유기하거나 범인을 도주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가 구상권 행사를 요청할 수 있다며 고문경찰관 등에게 1억 9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4/26)

4. 광주 선관위는 내년에도 국회의원선거 합니다
광주 선관위가 지난 4·13총선 시 투표소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마련하지 않은 채 투표를 하려는 장애인에게 '내년에 투표하라'며 모욕을 주자 이에 피해 장애인과 장애인단체가 광주 선관위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4/28)

5. 예술도 아닌 것이 무슨 "저작권?"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안티 포털 사이트를 만들자 포항제철이 법원에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사용금지 처분을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국제 노동자·정보통신 조직, 미러사이트 만들어 "노동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항의(4/24)

<수치로 보는 인권>

1. 자랑스런 대한민국 - 세계 정상에 우뚝 서다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국제 노동기구(ILO) 회원국 중 7번째로 길고 경제협력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는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4/26) 또한 전쟁같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비율 역시 세계 최고 수준.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전·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5월 3일(수)

제 1607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국가 불법행위 조직적 은폐”

검찰, 정보공개소송 진행 중 문서 파기 주장했다.

한 시민이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검찰이 관련 문서를 파기해버려 파관을 일으키고 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철준 변호사)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검찰청이 공안출조사 동향파악 관련 문서를 정보공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파기토록 지시했다며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요청함과 동시에 법무부에 대하여는 대검찰청 및 서울지검 관련자 전원에게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과거 시위 전력 때문에 검찰의 '공안사범 동향파악 지침'에 의해 10년동안 동향파악을 당해온 음영천(39, 서울 서초구) 씨와 함께 지난해 7월 서울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정보는 ▷'공안출조사 동향파악지침'의 내용 ▷음 씨에 대한 동향파악 관리카드 ▷동향파악 대상자의 각 등급별 숫자 등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9월 이들 공개대상 문서를 모두 파기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검찰이 1심에서 패소한 후에 법원에 낸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은 이 '지침'이 '99. 9. 10자로 폐지됨과 아울러 '즉시 파기'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는 문서'이며 따라서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참여연대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진상조사 요청서' 및 '징계청원서'를 통해 이 같은 행위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과거 진상규명'과 '인권존중'이라는 현 정부의 시책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광희 변호사는 이를 "국민의 알권리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비난하면서 "검찰이 문서를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관용 문서 및 관련 정보는 존재할 것이므로 이 자료라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7년 민주항쟁 당시 시위에 참가했다

가 기소유에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음 씨는 지난해 초 '경찰에 의해 지난 10년 동안 불법사찰을 당해왔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의혹이 높아지자 검찰은 '공안사범 동향파악 지침'에 따라 음 씨의 동향을 파악해온 사실을 시인했으며 이에 음 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지난해 6월 1심에서 승소했다. 곧 이어 음 씨는 서울지방검찰청에 '공안출조사 동향파악 지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검찰이 '대외비'라며 공개를 거부하자 참여연대와 함께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해정)

집시법 또다시 개악위기

노동절집회 화염병 등장하자 기다렸다는 듯

경찰이 노동절집회에서 화염병이 등장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악방향을 발표해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무영 경찰청장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집회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이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진 '개정'안 주요골자는 ▶폭력시위 전력 이 있는 특정인 혹은 특정단체의 집회 참가 배제 의무화 ▶주말, 공휴일 도심지에서 대규모 집회·시위 제한 ▶'질서유지 각서'를 집회 신고 시 제출할 것을 법에 규정 등이다.

한편 이번 이무영 청장의 발표는 작년 5월 24일 집시법이 개악된 지 불과 1년만에 나온 것이어서 시민·사회단

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당시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의 항의를 따돌린 채 일방적으로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해산명령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악을 추진한 바 있다. 가뜰이나 '주요도로'와 법원, 외국 공관 등 공공기관 1백미터 이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등 외국에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가혹한 우리 집시법이 비판을 받아온 조건에서 이번 경찰청의 '개정'방침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어떤 대응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이날 민주노총은 성명을 발표하고 "웬만한 곳은 대사관이 입주해 있어 집회를 할 수 없고, 사전신고 시 참가인원의 제한을 요구하는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집시법을 개악한다면 한국의 집회·시위의 자유는 아예 사라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희)

제네바 인권소식 ⑦ <끝>

제 56차 유엔인권위 폐막

특별사절 설치, 아동권조약 선택의정서 결실

지난 4월 28일, 제56차 유엔인권위원회(인권위)가 6주간의 일정을 마쳤다. 평화롭고 아름답기 그지없는 제네바에서 궁리된 인권 사안들, 87개 결의안을 채택한 정부들의 의지가 빈곤과 분쟁으로 신음하는 세계 곳곳의 인권현장과 어떤 식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가 남겨진 과제일 것이다. 이번 인권위의 주요 결의안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인권운동가 보호를 위한 특별사절 설치

올 인권위의 최대 결실은 지난 26일 인권운동가를 위한 특별사절(Special Representative)을 설치하는 결의안이 찬성 50, 기권 3으로 채택된 것이다. 기권한 국가는 중국, 르완다, 쿠바다. 3년 임기의 특별사절의 임무는 전세계 인권운동가들이 처한 상황을 감시하고, 이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결의안의 채택을 위해 민간단체들은 협박·고문·살해의 위협에 시달리는 인권운동가들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 결의안을 집한 민간단체들의 반색은 국제인권봉사회가 "역사적 결정"이라며 환영한데서 잘 드러난다. 하지만 "인권위원회에 참석했으니 나는 내 고국에서 정치 탄압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한 인권운동가의 말은 특별사절 앞에 놓인 과제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특별보고관이 유엔인권위의 사무국을 구성하는 국가의 대표들에 의해 임명되는 것과 달리 특별사절은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유엔사무총장이 임명한다.

18세 미만 소년병 금지

26일,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에 대한 두개의 선택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그중 하나는 '무장분쟁 하 아동'에 관한 선택의정서로 18세 미만의 아동을 무력분쟁에 전투원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일면 당연하게 보

을 명시하고 있다.

두 의정서는 오는 6월 유엔총회 특별회기 때부터 각국의 서명을 받게되며, 2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발효된다.

체첸 분쟁, 무력 사용을 중단하라

25일, '체첸'에 대한 결의안이 찬성 25, 반대 7, 기권 19로 통과되었다. 파키스탄 등 이슬람 세력과 서유럽의 주도하에 상정된 이번 결의안은 모든 분쟁당사자들에게 무력 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결의안에 따라 고문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등이 체첸 지역을 방문해 인권 상황을 조사하게 된다. 표결에 앞서 러시아 정부 대표는 "반약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러시아 정부는 인권위원회와의 협력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협박성 발언을 해, 인권활동가들의 비난을 샀다. (제네바: 최은아)

이는 18세미만 아동의 징집금지가 새삼 논의된 것은 조약 제정 당시 미국을 위시한 몇몇 정부대표가 연령을 낮출 것을 고집하여 15세미만 연령 제한에 그쳤었기 때문이다. 18세미만 아동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많은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조약의 빠른 채택을 위해 넘어갔던 문제가 선택의 정서의 채택으로 바로잡힌 것이다.

다른 하나의 선택의정서는 '아동매매·아동매춘·아동포르노그라피' 금지에 관한 것으로 아동의 성적착취·강제노동·이익을 목적으로 한 아동의 양도를 자국내 형법으로 금지할 것 등

새로 나온 책 『현대사상과 인권』

스티븐 슈트, 수잔 헐리 엮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옮김/ 사람생각 펴냄/ 304쪽

『현대사상과 인권』은 국제 엠네스티의 교육프로그램의 하나로서 기획된 것이다. 그러나 엠네스티의 활동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에 비하여 이 책은 아주 사변적이며 인권에 대한 깊은 철학적 고찰들을 담고 있다. 저자들도 모두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는 철학자나 사상가들이다.

이 책은 서론과 7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논문은 정치이론가인 루스의 '인권'에 관한 다섯 가지의 우화들인데, 그는 공리주의, 공동체주의,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에서 인권을 구하고자 한다. 둘째 논문은 사회정의론으로 유명한 롤즈의 '만민법'인데, 그는 인권이 국제질서의 보편적인 척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논문은 페미니즘의 열렬한 옹호자인 매किन의 '전쟁범죄와 평화범죄'인데, 그녀는 보스니아에서의 여성에 대한 참혹한 범죄에 대한 단죄는 궁극적으로는 여성을 배제하는 남성중심적인 법개념을 해파하는 것임을 역설한다. 넷째 논문은 현대 미국의 신실용주의 사상가인 로터의 '인권, 합리성, 감정'인데, 그는 인권의 옹호는 합리주의적인 정당화가 아니라 감정적인 호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다섯째 논문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상가로 유명한 리오타르의 '타자의 권리'인데, 그는 인권의 기초를 대화의 상대방이라는 타자의 존재에서 구한다. 여섯째 논문은 형가리 출신의 정치사상가인 헬러의 '자연법의 한계와 악의 역설'인데, 그녀는 악에 대한 근본적인 저항을 강조하였다. 일곱째 논문은 합리적 선택론의 대표적 사상가인 엘스터의 '다수결의 원칙과 개인적 권리'인데, 그는 권리보호에 있어서의 다수결원칙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철학적이고 사변적이라고 해서 이책에 실천적 효용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은 우리로 하여금 인권을 대하는 근본적 태도 그리고 인권옹호를 위한 이념적 전제를 되새겨 보게 한다. 이것이 이 책의 최고의 미덕이다.

(정태욱,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영남대 법학과 교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5월 4일(목)

제 1608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군대 아니면 노예를 선택하라?

한 벤처기업, '병역특례' 약점 삼아 노조탄압

병역특례자라는 신분을 약점 잡아 노조를 말살하려는 벤처기업이 있다.

(주)멀티데이타시스템(대표 이태호) 노동조합(위원장 이상호)은 3일 "단체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가 노동쟁의조정신청을 내자, 사측이 병역특례라는 노동자들의 신분을 악용해 병역특례업체 철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 노조 조합원 15명 가운데 병역특례자는 모두 9명으로 병역특례업체 철회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병역특례자들이 모두 회사를 떠나야한다. 또 이

들은 일정기간 내에 다른 병역특례업체에 재취업하지 못할 경우 군에 입대해야 하는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

지난 2월 결성된 노조는 실질적인 노동활동 인정 및 고용안정 보장, 저임금·과노동 해결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단체 교섭을 벌여왔다. 그러나 10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은 모두 사장의 거부로 결렬됐으며 이에 노조는 지난 달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냈다. 노조의 쟁의조정신청이 있자 회사측은 다음날인 지난

달 28일 병무청에 병역특례업체 철회를 신청했다.

이상호 위원장은 "나를 비롯해 핵심노조간부 6명이 병역특례자"라며 회사측의 행위는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3일 '병역특례업체 철회신청'의 철회를 요구하는 구제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했으며, 다음 주 중 노동위원회의 결정여부에 따라 쟁의행위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의 문영만 부산지역본부 부장은 "사측이 병역특례업체 철회를 신청하는 이유가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이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병역특례업체 철회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라며 "병무청의 신중한 자세와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관 파견으로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멀티데이타시스템 노동자들은 수습 3개월 임금이 40만원, 입사 2년차 임금이 65만원에 불과한 저임금을 받아왔으며, 연장근로가 관행으로 굳어져 '월요일에 출근해서 토요일에 퇴근'하는 등 극도의 초과노동에 시달려왔다. (유해정)

없는 설움...이웃 '민원'에 빼앗긴 삶터

붕어빵 노점상 "살길 막막해요"

'가진 사람'의 이기주의가 한 노점상을 삶터에서 내몰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사거리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던 박씨(58) 씨는 지난 28일 자신의 노점좌판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말했다. 구형 단속반원들이 들이닥쳐 노점좌판의 지붕을 무너뜨리고 쇠사슬로 매어놓은 리어카를 떼어가 버린 것. 그 전날 구형 직원으로부터 "장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당장 물건을 신고 가겠다"는 경고를 받은 박 씨는 노점을 치우러 나가던 길이었지만, 단속반원들보다 한 발 늦게 도착한 것이다.

이날 단속이 진행된 것은 박 씨의 노점 뒤편에 위치한 건물 쪽에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었다. 강남구청 건설관리과 환경일 가로정비계장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속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박 씨에 따르면, 단속이 벌어지기 전날 건물주인이 찾아와 "포장마차를 여기서 하면 내가 과태료를 물게 되니 당장 노점을 치우라"고 말했다. 박 씨는 건물주에게 "팔다 남은 재료만이라도 처분할 때까지 말미를 달라"고 사정했지만, 결국 하루만에 단속반이 들이닥친 것이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건물주는 단속이 벌어진 지 이틀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여섯 시구의 생계를 책임져 온 박 씨는 이제 앞일이 캄캄하기만 하다. "당장 어디로 가야할지도 모르겠고, 손에 돈 백만원만 쥐어져 있어도 뭘가 해보려 할 텐데 너무 막막합니다."

사거리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신희정 씨는 "없는 사람이 벌어들여 먹고 살겠다는 데 도와주는 것 못할 망정 민원까지 넣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있는 사람'들의 처사에 혀를 찼다. (이창조)

행사와 동정

■ <토론회> 복수노조 교섭권과 노동조합 활동에 관해

-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신선대 · 우암지부 건물 중심으로

· 때: 5월 4일(목) 오후 2시
· 곳: 서울 종로성당 회의실
· 주최: 부산항 부두과업 진상조사단
· 문의: 박석운, 017-256-6053

■ 제2회 불교인권문화제

· 때: 5월 7일(일) 오후 4시
· 곳: 종각역 국제청 앞
· 취지: 비전향장기수들을 생각하며
· 주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어린이날 특집 기획 ①>

함께 살아가야 할 아이들

다시 어린이날이 다가왔다. 일년에 단 하루 선물공세로 아이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사회가 아니라, 일년 내내 아이들의 소망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인권의 현주소를 2회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주).

우리 사회의 어린이들 역시 가난과 차별, 소외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그들의 부모와 가정의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사회와 국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세상 속으로' 들어간 현이

올 봄부터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다니는 현이(가명, 6살)는 정신지체 장애아동이다. 현이의 어머니 신 씨는 특수교육 대신 일반 아이들과의 통합 교육을 선택했다. 현이가 일반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우리 사회의 성원으로 커나가기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 씨는 지금 현이가 일반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다.

하지만, 그러한 기쁨의 반대편에서 어머니 신 씨는 힘겨운 싸움을 각오할 수밖에 없다. 장애아동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부대끼며 사는 길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신 씨는 "일반 아이들의 부모와 선생님을 이해시키는 문제,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과 환경을 갖추도록 하는 일 모두, 장애아동을 둔 부모가 직접 발로 뛰어야 하는 일"이라며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몰이해를 안타까워했다. 심지어 장애아동이 없는 학교를 자랑스러운 듯 말하는 학교장을 볼 때면 우리사회가 장애아동에 대해 얼마나 배타적인지 여실히 드러난다고 신 씨는 말한다.

이제 막 '세상 속으로' 들어간 현이의 미래가 '우리 모두'의 일로 여겨지기를 현이의 어머니는 기대하고 있다.

글방을 찾아서

30여명 아이들의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설새없이 흘러나오는 서울 봉천3동의 한 글방. 거기서 만난 주희(가명, 10세)는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철거민원들이랑 싸우는 게 싫어요. 근데 엄마는 지금 싸울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라며 제법 어른스러운 말투로 엄마를 걱정한다. 봉천3동은 지

난해 내내 강제철거의 소용돌이 속에 주민들과 철거용역 간의 싸움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집이 부서져 동네가 없어지는 것도 싫고 포크레인 소리도 싫지만, 친구들이 이사가는 것이 제일 싫어요"라고 말하는 옥이(가명, 12살)의 이야기 속에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들이 묻어난다.

넓은 운동장도 놀이터도 아닌 비탈길과 철거의 잔해 속에서 자라나는 철거촌 아이들. 그래서인지 이들은 먼길을 마다 않고 글방을 찾아온다. 하나둘 이사가는 친구를 그리워하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라도 하려는 듯...

장애만으로도 힘든 아이들에게 편견의 짐까지 지우는 사회, 가난에 지친 아이들에게 어두운 상처를 주는 현실, 우리 앞에 놓인 숙제다. [고근에]

'학교에 가고 싶어요'

"나도 친구들처럼 학교 다니고 싶어요. 근데 내가 외국사람이라서 안되네요."

또래 친구들이 모두 학교에 있을 시간, 빌랄(12, 파키스탄)은 안산의 한 공부방에서 혼자 논다. 3년전 아버지 키르마니 씨와 형과 함께 한국으로 온 이후, 빌랄은 학교에 다니려고 여러 곳에 입학신청을 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의 자녀란 이유로 빌랄에게 학교의 문은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빌랄은 이제 한국말도 곧잘 하고 공부방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 논다. 한글도 열심히 배운다. 빌랄의 장래희망은 발명가다. 하지만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탓인지 에디슨이라는 인물이 누군지는 알지 못한다.

친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빌랄은 공부방에 남아 아버지를 기다린다. 저녁 8시가 넘어야야 공장에서 일하는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러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혼자 기다려야 할 때 빌랄은 더욱 엄마와 누나가 있는 파키스탄이 그리운다.

"엄마랑 누나는 파키스탄에서 살아요. 엄마랑 누나랑 같이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파키스탄에는 갈 수 없어요. 가면 아버지가 붙잡혀 가거든요." 빌랄의 아버지는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더라도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한다.

현재 성남에서 불법체류 상태임을 숨긴 채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6명의 아이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은 모두 빌랄처럼 학교에 가고 싶은 꿈을 접어야 한다. 최근 가족단위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가 점차 늘어나고 국내 이주노동자의 3분의 2이상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아이들의 수는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이유로도 아이들이 제때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반기를 들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내일이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아 좋아할 어린이날이다. 3년째 학교에 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빌랄이 여느 아이들처럼 어린이날을 손꼽아 기다릴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 [백은관]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5월 5일(금)

제 1609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ILO, 삼특 고용승계 촉구

포항제철 버티기 속, 대법 판결 관심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가 삼미특 수감 해고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촉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ILO의 결정은 잇따른 복지 명령에 불복하고 있는 포항제철에 큰 압력이 될뿐더러, 앞으로 있을 대법원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관련기사 본지 3월 21일자 참조).

지난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제277차 이사회는 "1백82명의 삼미특수감노조 조합원들이 (포철이 삼미를 인수해 설립한) 창원특수감에 복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단행하라"고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이같은 사실은 민주노총이 지난 4월 노동부가 편낸 「제277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결과보고서」 영문자료집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해고자들, 1천2백42일째 투쟁

오늘로 1천2백42일째 고용승계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삼미특수감 노동자들이 해고된 것은 지난 97년 2월 17일. 포항제철이 삼미특수감을 인수하면서 전체 2천3백42명의 노동자 중 노조 간부 등 5백87명의 고용승계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97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삼미특수감 인수는 영업양도의 일종이기 때문에 포철의 고용승계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복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99년 1월 서울고등법원도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재확인했지만 포철은 이를 계속 무시해왔다. 현재 이 사건은 포항제철

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ILO 이사회는 삼미특수감과 같이 '자산인수' 방식을 내세워 6명의 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주)오트론(한화 계열)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이주영)

'공교육 정상화' 촉구

전교조 위원장 식발 단행

과의 급지 위험 판결 이후 사교육비의 급증이 우려되는 가운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은 4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의 급지 위험 판결 이후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은 커져 가는데,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라고는 고액과의 기준이나 교사관리 대책 등 단기적 미봉책 뿐"이라고 비난했다. 덧붙여 "뒤늦게 교육부가 내놓은 공교육 내실화 방안 역시 교육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공교육의 실질적인 내실화를 통해서만 국민들의 위기감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재정 GNP대비 6% 확보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 실시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하 감축 △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공교육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6일자 하루소식은 쉽니다

기자회견에 이어 이부영 전교조 위원장은 사발식을 갖고 공교육 정상화 투쟁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주영)

'민주화관련법 제대로'

사회원로 성명 채택

사회 원로급 인사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4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공동대표 단병호 등, 국민연대)가 마련한 '월로 및 사회각계 대표인사 조찬모임'에서 김관석 목사, 이효재 전 이화여대 교수 등 월로 13명과 국민연대 공동대표들은 민주화 관련법 시행령의 올바른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채택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명예회복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법'(의문사진상규명법)의 시행이 오는 16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들은 "법 제정 취지에 맞는 시행령의 제정과 위원회 구성 시 민주세력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또 "명예회복보상법 시행령에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규정할 것"과 "의문사진상규명법 시행령에 의문사의 실체를 밝힐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요원을 배치하는 것을 명시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외에도 민주화운동의 경험이나 이해가 충분한 사람으로 위원을 구성할 것, 증인의 보호와 양심선언의 적극적인 유도조치 등을 시행령에 담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조찬모임 뒤 단병호, 최영도, 박정기 공동대표 등 대표단 5명은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시행령에 대한 국민연대의 입장을 전달했다. (박대균)

어린이날 특집 기획 ② <끝>

아이들의 외침에 귀기울이는 사회

총알받이로 전쟁에 동원되는 아이들, 교육은커녕 하루종일 노동에 혹사당하는 아이들, 매매춘과 포르노 시장에 팔려나오는 아이들... 이러한 착취와 폭력 속에 신음하는 제3세계 어린이의 삶에 비하면 우리 아이들은 그나마 낫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우리 사회에도 점심을 굶거나 부모로부터 학대받고 버림받는 아이들이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다고 자위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나머지 아이들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요즘 아이들이 예전보다 많은 관심과 풍요 속에서 성장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과 풍요로움이 아이들의 행복과 직결되지는 않는다.

무한경쟁은 싫어!

"학교 갔다오면요 바로 보습학원 가야돼요. 학원에선 전과목 다 배워요. 저녁 먹고 또 미술학원 가요. 밥엔 시간이 없으니까 숙제는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틈틈이 해야 돼요. 친구들과 중에 학원 하나이상씩 안 다니는 애는 없어요." 초등학교 5학년 예슬이는 하루가 너무 힘들다며 아이답지 않은 한숨을 내뿜는다. 남보다 잘난 아이, 똑똑한 아이로 만들어내려는 어른들의 경쟁 속에서 아이들이 뛰놀 자리엔 학원만이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부모들은 "그게 다 너희들을 위해서야"라는 말로 아이들의 숨겨진 현실을 외면한다. 아이들 대신 미래를 설계하면서 그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라고 강요한다. 그 이면에는 자신의 욕망을 아이들을 통해 대리 실현하려는 욕심마저 자리잡고 있다.

어린이신문 '쿨링쇼'의 발행인 김찬근 씨는 "자본주의 경쟁체제와 내 가족 이기주의가 아이들의 삶을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또 한편에선 '동심'을 강조하며 어린 고객을 상대로 거대한 이익을 챙긴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무한 경쟁체제와 내 아이만 생각하는 가족이기주의는 '돈이 전부이며 남의 고

통은 등한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아이들을 재생산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 아이들에게 '자기 삶의 주인으로, 더불어 살아가고 배려할 줄 아는 존재로 성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는지 모른다.

'권리'를 돌려주자!

"어른들은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쪼그만 게 뭘 안다고 대드냐고 그러세요. 선생님이 시키면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도 그대로 따라야돼요." 초등학교 6학년 지원은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어른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한다.

이러한 성인중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는 아이들의 권리를 쉽게 무시하고 박탈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해왔다. 부모의 이혼이나 입양 등 아이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를 결정할 때도 아이들의 의견은 고려되지 않는다. 술 취한 아버지에게 맞고 살아도 제대로 도움을 청할 곳은 없다. 아이의 양육과 성장은 가족의 책임에만 맡겨질 뿐, 밤늦도록 혼자서

부모를 기다려야 하는 아이들에 대해 사회 전체가 책임지려는 자세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한편에선 과잉보호와 통제, 다른 한편에선 방임과 학대가 아이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기에 그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에게 자율적 판단과 행동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지금의 아이들은 늘 어른에게 의존하려는 미성숙한 존재로 남아있을 뿐,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고도 "안된다"고 외칠 줄 모른 채 자라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선물

부모들은 선물공세로 아이들의 자전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어린이날 한뫼 잡아보려는 알뜰한 상흔마저 부모들의 착각을 부채질한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선물만이 아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건 아이들의 의견과 선택에 격려를 보내고 아이들의 소망에 귀기울여주는 어른과 사회의 모습이다.

가족이기주의의 굴레를 넘어 다른 아이의 고통까지 껴안을 수 있는 넉넉함도 필요하다. 비오는 날, 내 아이만이 아니라 누군가 혼자 비를 맞고 갈 아이를 생각하며 우산을 챙겨 나오는 부모를 통해 아이들은 세상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배경내]

만화사랑방

이동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5월 9일(화)

제 1610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수배자 검거가 법보다 우선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 불법검문 말성

경찰이 수배자 검거를 내세워 불법 검문을 자행해 비난을 사고있다. 지난 6일 밤 11시경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이하 민청노회) 회원 5명은 인천대 정문 앞에서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들이 타고 있던 차량 5대에 에워싸였다. 민청노회에 따르면, 당시 경찰들은 사복차림인 데다가 소속과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회원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강요했다.

이후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회원과 가족 20여명까지 불법 검문에 항의하자, 보안수사대 감삼휘 경위가 뒤늦게 자신이 책임자라며 신분증과 수배중인 민청노회 회장 오해란 씨에 대한 영장을 제시했다. 2시간 동안 계속되던 실랑이는 결국 경찰의 철수로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민청노회 사무국장 유한경 씨(31)는 "경찰이 신분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검문을 자행하고 신분증 제시를 강요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안수사대 감삼휘 경위는 "차량에 오해란 씨가 탄 것을 확인하고 신분증과 영장을 제시한 후 검문에 응할 것을 요청했던 것"이라며 불법 검문 사실을 부인했다.

김 경위는 또 "차량에 타고 있던 오 씨를 회원들의 방해로 체포하지 못했으므로, 오히려 민청노회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사무국장은 "당시 오해란 씨는 차량에 타고 있지도 않았고, 당시 상황은 모두 비디오로 녹화되어 있다"며 김경위의 주장을 일축했다.

<인권시평>은 한 주입니다

한편 민청노회는 오늘 오전 10시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을 비롯한 20여개 지역단체와 함께 인천경찰청을 항의방문하고 경찰측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민청노회는 인천지역 청년노동단체로 지난 98년 12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회원 6명이 구속된 바 있으며,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김보영]

한국계이츠 노조 파업

해외자본, 저임금·장시간노동 강요

해외자본 기업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맞서 한국 노동자들이 한달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자동차 엔진부품 중 하나인 타이밍벨트를 생산하는 한국계이츠(사장 브라이언 코레스, 대구시 달성공단 소재)

주요공판안내

- ▶ 김삼석 씨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
 - 94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구속, 97년 출소한 김 씨는 보안관찰처분자로서 관할 경찰서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자 99년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소송제기. 한편 김 씨는 같은해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 5월 9일(화) 오전 11시, 수원지법 208호, 속행
- ▶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 하영욱/5월 12일(금) 오후 2시, 서울고법 302호, 항소심 속행
- ▶ 중증장애인 유순자씨, 상습폭력 남편 살해사건
 - 5월 12일(금) 오후 4시, 수원지법 110호, 속행

노동자들은 지난달 14일부터 '저임금 장시간 노동 해결'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총 1백6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한국계이츠의 지난 한해 매출액만 4백55억원. 높은 매출액에도 불구하고 이곳 노동자들은 하루 13시간에 달하는 노동과 한달 평균 80~120만원에 불과한 임금으로 고통받아왔다. 게다가 회사측은 올해부터 연봉제를 도입, 10년차 과공의 연봉도 고작 1천5백만원으로 책정하는 한편 퇴직금의 중간 청산까지 강요했다. 이에 노조(위원장 권구목)가 지난 2월부터 연봉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단체협약 요구안을 작성해 교섭을 요구해왔으나, 사측은 이사진 개편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교섭에 임하지 않고 있다.

또한 노조의 자체조사 결과, 파업 이후 사측이 해외에서 공수해 납품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의 30%가 불량품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상준 노조 사무국장은 "사장이 돈에 열안이 돼 한국인노동자의 생존은 물론 한국인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17개국에 지사를 두고있는 다국적 기업 계이츠는 지난 89년 한·미·일 등의 합작으로 국내에 설립됐다. <관련기사 본지 3월 15일자> [유해정]

<판결문 요약> '우리통신'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지난 4월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는 '우리통신' 등의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기소(사건번호 98노1497)된 백성기 씨의 3명에 대해 원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명백하게 위협하지 않는 한 사회주의에 관한 표현의 자유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편집자주>

(중략)

2. 판단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의 판단 기준...이적표현물은 그 내용이 단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표현이어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희망의 타전 우리통신 제1호 내지 3호', '희망의 네트워크를 향하여 미래통신 제4,5호'를 각 제작, 반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그 내용이 ①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 몰락 이후 새로운 사회주의 이론의 모색가능성에 대하여...학계 및 진보단체 등의 주장들을 소개 내지 인용하고, 과거 사회주의운동의 여러 흐름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다음 새로운 사회주의 이념의 재정립을 위한 하나의 서론을 주장한 데 불과하거나 ②1997년 초 노동법 개정, 한보사태 등에...관하여 강도높게 비판하고...해결방안으로...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 내지 정당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정치적 소견을 피력하거나 ③...소위 운동권 단체의 동향에 관한 정세분석을 함에 있어..."반파쇼타도투쟁", "연방제통일", "반미자주화투쟁"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그 구체적 주장내용을 기술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는 없으며, ④새로운 사회운동이나 진보이론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와 논쟁 등을...정리하거나 이에 관하여 약간의 평석을 부연하여 기술한데 불과하여...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각 표현물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위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후략)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1일 - 5월 7일)

1. 경찰 '인권보장' 각서부터 제출하라

노동절에 발생한 '화염병 시위'와 관련 경찰이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특정인의 집회 참가 배제' 등을 골자로 집시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 주말, 공휴일 등의 집회 불허는 물론 집회 시 '질서유지 각서'까지 요구할 태세 보여. 이에 시민노동단체가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 (5/2)

2. 우리는 너희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대검찰청이 '공안출소자 동향 파악 지침'과 관련한 정보 공개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지침서와 관련문서를 파기토록 지시한 것이 밝혀져.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 촉구 (5/2)

3. 벤처기업, 노조탄압에도 벤처

벤처기업 멀티미디어시스템, 병역특례자라는 노조원의 신분을 약점삼아 노동쟁의가 발생하자 병역특례업체 철폐를 신청. 사실이 알려져 비난이 거세어지자 병역특례업체 철폐신청을 철회하고 단체교섭에 나서 (5/3)

4. 사람잡는 근로복지공단

97년 산업재해로 정신질환을 앓게된 위성태 씨가 지난달 산재인정 받지 못한 처지를 비판해 자살하자, 유족과 노동계 거세게 반발. 이에 근로복지공단측이 뒤늦게 위 씨의 재해를 산재로 인정. 무형설 괴사증에 걸려 고통받던 김광수 씨 역시 끈질긴 투쟁으로 3년만에 산재인정 받아 (5/7) <관련기사 본지 4월 21일자>

5. 110주년 노동절의 외침

110주년 노동절 맞아 전국에서 주5일 근무, 구조조정 중단,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시위 잇따라 (5/1)

6. <모내기>, 유엔 제소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확정판결 받은 그림 <모내기>의 화가 신학철 씨, 본 사건 유엔에 제소 (5/4)

7. 메마른 노동자 인권에 단비

서울고법 민사 15부 "채용 늦어진 입사예정자도 노동자"라며 채용 취소된 현대전자 합격자들에게 임금지급 하라고 판결 (5/1) / 파업중인 노조원 폭행했던 울산중앙택시 간부 폭행 혐의로 구속돼 (5/1) <관련기사 본지 4월 18일자> / 지난달 19일부터 서울대측과의 단체교섭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서울대 시설노조, 단체교섭 통해 용역소장 해임, 밀린 임금지급 등 약속 받아내 (5/1) <관련기사 본지 4월 20일자> / 중앙노동위원회, "파업기간 중 휴일을 결근일에 포함시켜 직권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4월 파업으로 해고된 서울지하철 노조원 39명에 대해 원직복직 판정 (5/3)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5월 10일(수)

제 1611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집회 금지에 바쁜 집시법

경찰, 범대위 집회 전면 불허

경찰이 집시법을 악용해 특정단체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반개혁적 통합농협법 철폐와 전면 재논의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오충일 목사, 범대위)는 5월 2일 집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지난달 말 서울역 등 서울 시내 6곳에 대한 집회 신고를 냈다. 그러나 범대위는 집회 개최를 불과 2시간 앞둔 2일 새벽 6시, 경찰로부터 집회 불허를 통보 받았다. 지난달 17일 범대위가 주최했던

서울교육문화회관 앞 집회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한 전례가 있기때문에 이번 범대위의 집회도 허가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범대위측은 "우발적인 폭력사태를 발미삼아 집회 자체를 불허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히 항의했지만 경찰은 집회장소를 원천봉쇄해 이날 집회를 무산시켰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집시법에 따르면 폭행을 저지른 것이 명백할 경우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범대위의 경우 "폭력을 사용한 전력이 있어 이날 역시 폭력사태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도형 변호사는 "폭행을 저지른 것이 명백하다"는 판단의 기준이 뭐냐"고 반문하며 "현 집시법이 독소조항을 많이 가지고 있어 이번 경우처럼 경찰의 집시법 악용과 확대해석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철폐와의 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범대위 집회와 혼동해 무역협정 반대 집회에 참가하려던 축협노조와 농민회 소속 회원들의 집회 참가를 방해하기도 했다. 공주농민회에 따르면 공주경찰서측은 1일 농민회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2일 집회에 참여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 나아가 2일 날 아침에는 경찰 20여명이 몰려와 농민회 차량을 에워싸고 집회 참석을 저지하기도 했다. 축협노조의 현미선 홍보부장은 "축협노조 대부분의 지부에도 이날 집회에 참석하면 구속된다는 경찰의 협박성 전화가 걸려왔다"며 "경찰의 행위와 관련해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보영)

☞ 새로 나온 자료집

『21세기 법과 민주주의』 -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2000. 4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엮음 / 도서출판 관악사 펴냄 / 198쪽

새로운 천년을 설계할 법학과 민주주의의 과제는 무엇인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지난 4월 29일 이 과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개최한 심포지움 자료집이 묶여져 나왔다.

『21세기 법과 민주주의』는 △시민사회적 민주주의 구축을 위한 헌법전라 (이경주) △정보사회와 평등문제 (김도현) △주권과 인권 (강경선) △여성인권의 보장 (김엘립) △21세기 노동법의 과제 (박홍규) △21세기 소유구조의 변화와 민법개정 (조승현) △삼성그룹의 세금없는 사전상속 : 법적 분석과 대응 (곽노현) 등 총 7가지 주제에 관한 발제문을 수록하고 있다.

이중 정보사회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평등의 문제를 고찰한 김도현(서경대) 교수의 논문이 눈에 띈다. 김도현 교수는 인터넷이 자본주의와 관료체제에 의해 '식민화'됨으로써 없는 자들은 더욱 정보의 바다로부터 격리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는 지적 재산권의 개념을 뛰어넘어 '지적 인격권'의 개념을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정보의 보편적 접근이 가능한 사회를 꿈꾼다.

국가주권의 대내적 최고성과 대외적 독립성이라는 독점적 지위의 위협성을 경고하고 있는 강경선(방송대) 교수의 글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국가주권이 아닌 '국민주권'의 개념이 풍부해지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인권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인권이 실현됨으로써만 자율적 입법권으로 압축되는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자율사회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문의 민주법연 02-324-3724> (배경내)

최저임금 OECD국가 중 꼴찌

평균임금의 50%대로 올라야

법정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 저임금 노동자 보호에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9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기초발제에 나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98년 OECD 고용통계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05달러로서 서유럽 국가의 6.4~7.2달러, 미국의 4.1~5.2달러에 비해

▶ 2면으로 이어짐

“무미아, 반인종차별운동의 들불로”

뉴욕, 6천여명 운집해 공정한 재심 촉구

미국의 대표적인 양심수 무미아 아부 자말의 석방운동이 미국 전역에서 다시 불붙고 있다.

7일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 극장에서는 무미아의 공정한 재심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4시간 동안 진행된 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약 6천여명. 이날 집회는 억압받는 소수자들에게 다시 한번 연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지만 인종차별주의자들에게 쫓겨나기를 사냥개 하는 으름장이 됐다.

배우 오세 데이비스를 비롯해 전 뉴욕시장 데이비드 단킨스, 흑표범당의 리더였던 케더린 클레버가 집회에 참석했으며, 이번 집회를 주최한 국제행동센터의 램시 클락과 무미아 석방운동의 거물 팝 아프리카 등 30명이 넘는 연사들은 무미아의 석방을 주장하며 인종차별주의자들과의 한판 승부를 다짐했다.

사형집행 임박한 무미아

주정부는 지난해 12월 현재 펜실베이니아 교도소에 수감중인 무미아 아부자말의 사형집행일을 공고했다. 이에 무미아는 연방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윌리엄 요한 연방 판사는 무미아에게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진술 기회를 줄 것인지 여부를 이달 안으로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진술 결과에 따라 무미아의 재심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연방 판사가 진술 기회를 묵살한다면 무미아의 사형은 확정되고 만다. 이러한 급박성은 무미아의 재심 촉구 운동을 긴급하게 그리고 거세게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라디오 저널리스트였던 무미아 사건은 1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필라델피아 매거진 ‘시민감시’(people to watch)상을 수상한 1981년 12월 9일 무미아는 필라델피아 거리에서 경찰이 그의 동생을 구타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던 중 경관 다니엘 파우크너

가 쓴 총에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그러나 경관 다니엘 역시 의문의 총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다. 무미아는 이후 응급실에 실려와서야 그 사실을 알게됐다고 진술한다. 하지만 검찰은 무미아를 살인범으로 기소했다. 무미아가 병원 응급실에서 다니엘을 쏜 범인이라고 자백했다는 것이다. 이후 펜실베이니아 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그날 이후 무미아는 18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다.

속속 드러난 조작의 증거들

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선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무미아의 유죄를 주장한 증인들이 모두 경찰의 협박과 회유에 의해 무미아가 범인이라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양심선언을 한 상태이며 △다니엘이 맞은 총알과 무미아가 가지고 있던 권총의 총알이 일치하지 않고 △재판과정에서 무미아의 법정진술은 허락조차 되지 않았고 △검찰은 무미아의 병원 자백을 증명하지 못했다. 게다가 무미아가 당시 흑인민권운동을 주도하고 있었기에 의혹의 무게는 더 크다. 무미아는 흑인의 자위권 확보를 표방하는 ‘흑표범당’(Black Panther Party)에서 활동한 바 있다. 또 1981년 당시 약명 높은 인종주의자 프랭크 리조 주지사와 경찰들이 저지르는 폭력을 강력히 비난했고, 흑인민권운동 단체인 무브의 강력한 지지자였기 때문에 인종차별주의자들에게 더할 나위없는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다. FBI가 그에 대해 800쪽 분량의 자료를 모았고, 흑인민권운동 단체인 무브 사무실 폭격 시점이 이 사건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의혹을 더욱 뒷받침한다. 당시 찍은 자료 화면이 이날 집회에서 상영되었을 때 참석한 사람들이 표현한 분노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의 모골을 송연하게 했을 것이다.

이들은 특히 오클라호마시 폭탄테러

이후 1996년 제정된 ‘반테러법안’이 많은 소수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에 따르면 사형수가 연방법원에 항소하려면 선고 후 180일 내에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명백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레너드 변호사는 피의자가 이런 자료를 모으는 데는 종종 10년 넘는 세월이 걸리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 법은 주법원이 인정한 증거에 대해 연방법원도 사실로 가정하고 판단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사형집행이 예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무미아의 변호인단은 말한다.

이번 집회를 주도한 국제행동센터측은 무미아 사건이 가난한 유색인종들이 흔히 겪는 차별과 억압이 집적된 사례라고 설명한다. 1990년 이후 2천 명이 넘는 소수자들이 경찰폭력과 억압적인 사형제도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는 통계는 이들의 항변을 뒷받침하고 있다. 때문에 국제행동센터는 무미아 석방운동이 미국내 반인종차별운동은 물론 반제국주의 운동의 들불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 달 13일 샌프란시스코, 16일 뉴욕, 6월 29일과 8월 13일 공화당과 민주당 전당대회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이날 집회에 맞서 약 150명의 뉴욕 경찰은 극장 맞은 편에서 무미아가 살인범이라는 반대집회를 기쳤다. (워싱턴:김정아)

▶ 1면에서 이어짐

턱없이 났다. 폴란드·터키 등보다는 높다하더라도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OECD국가 중 가장 낮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도 1.1%로 프랑스(11%) 등 선진국은 물론 멕시코(17.6%), 포르투갈(4.7%) 등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들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부소장은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올리고 적용대상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8월까지 적용되는 월간 최저임금 금액은 36만1600원으로 평균임금의 30.6%이며 5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이주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5월 11일(목)

제 1612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석

편집인 : 유해정

버마 활동가 샤린 석방

난민신청 공식 접수, 난민인정 심사 고비

본국으로 강제송환돼 투옥될 위기에 처했던 버마인 활동가 샤린(29, 가명)이 풀려났다(관련기사 본지 4월 5일).

법무부는 10일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샤린의 보호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샤린의 난민신청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9일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 국인보호소에 구금됐던 샤린은 10일 오전 10시 버마 민족민주연맹(NLD) 한국지부 회원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샤린의 법정대리인인 박찬운 변호사는 과거 강제퇴거명령이 철회된 사례가 매우 희박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법무부의 이번 결정이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로부터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내려진 결정이라 할지라도 대단히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대

부분의 난민신청 희망자들이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난민신청서류 접수조차 거부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샤린의 경우는 새로운 전례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난민, 명백한 박해사실 증명해야

그러나 박 변호사는 “이번 결정이 샤린의 난민인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백한 박해의 공포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역시 이번 결정에 대해 특별한 의미부여를 거부했다. 체류심사과의 오주호 계장은 “불법체류자라는 불안한 신분 때문에 난민신청을 제때하지 못했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해 출

입국관리법에 따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난민신청 접수를 받은 것 뿐”이라며 난민인정은 이와 별도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샤린은 버마 민족민주연맹 한국지부 사무실에서 기거하고 있으며 앞으로 ‘부천의국인노동자의 집’의 도움을 받게될 예정이다.

NLD 한국지부, 집단 난민 신청 준비

한편 버마 민족민주연맹 한국지부 회원 20여명도 집단적으로 난민지위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한국사무소를 방문해 난민지위신청에 필요한 인터뷰를 마쳤으며, 이번 달 안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유해정)

민주화운동관련법 올바른 시행 촉구

국민연대, 정부 규탄집회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법’(민주화운동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의문사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민간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공동대표 박정기 외 16명)는 10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소속단체 회원 1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두 법의 올바른 시행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한 경우만을 민주화운동으로 보고 있다”며 “포괄적인 사회 민주화 운동들 역시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포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새로 제정될 민주화운동보상법 시행령에 ‘민주화운동’에 대한 해설

▶ 2면으로 이어짐

12일자 하루소식은 쉽니다

만화 사랑방



이동수

정신지체장애인, 8개월간 성폭행당해 가해자는 직장 상사, 장애인 간음죄 적용 시급

한 정신지체 여성 장애인이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성남 여성의 전화」와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는 10일 정신지체 3급(IQ 58)의 박 모양(21, 서울 송파구 거주)이 직장 상사로부터 8개월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자는 박 양이 일하던 성남 부성실업 회사 간부인 40대 후반의 정 모 부장으로, 그는 박 양이 회사에 입사한 지난해 3월부터 승용차로 출퇴근을 도와주겠다

며 박 양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그해 7월 물건을 가지러 가야한다며 자신의 집으로 박 양을 유인해 성폭행했다. 정 부장은 박 양이 성관계를 거부할 때마다 '20살이 넘으면 성관계를 당연히 알아야한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죽이겠다'며 협박을 가했고, 결국 정 부장의 파렴치한 행위는 올해 3월 박 양이 공장을 그만두게 될 때까지 계속됐다.

박 양과 가족들이 정 부장에 대한 처벌을 원함에 따라 「성남 여성의 전화」는 지난 9일 경찰서에 정 부장을

성폭행 혐의로 고발했다.

박 양을 상담한 「성남 여성의 전화」 측은 "박 양의 경우 둘째 여동생과 셋째 여동생 역시 각각 정신지체장애와 언어장애를 갖고 있어 이번 일로 박 양의 부모님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 측은 지능지수가 58정도인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 "사고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상황대처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찰이 이번 사건을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성폭력특별법에 근거해 '장애인에 대한 간음'죄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가해자는 가중처벌을 받게된다. (유혜정)

행사와 동정

-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 시민모임 결성 2주년 기념식
 - 때: 5월 13일(토) 오후 2시 · 장소: 군산 구 시청 사거리
 - 주최: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 시민모임 (0654-471-5346)
- 김용갑 열사 초혼장
 - 때: 5월 14일(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마석 모란공원 내 특지구 1가 1033
 - 사건소개: 90년 속초 동우대학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던 중 그해 3월 28일 새벽 의문사.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 사건이라고 발표했으나 학원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타살된 것으로 추정됨.
 - 주최: 동우대학 90년 총학생회장 고 김용갑 열사 묘역 조성 준비위
 - 문의: 고상만(02-708-5858, 016-219-6850)
- 국가인권기구 설치법(소위 '인권법')의 쟁점과 전망에 관한 16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민간인권단체와의 간담회
 - 때: 5월 15일(월) 오후 2시 · 장소: 성공회 성가수녀원 피정의 집
 - 주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 문의: 곽노현(02-3668-4596) / 배경내(02-741-5363)
- 조성만 열사 12주기 및 천주교 열사 합동추모미사
 - 때: 5월 15일(월) 오후 7시 · 장소: 명동성당 문화관 2층 강당입구
 - 사건소개: 88년 5월 15일, "조국통일" 등을 주장하며 명동성당 교육관에 서 활북투신. 현재 광주 망월동 묘역에 안장.
 - 주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02-747-2445)
- '장애인, 나이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워크숍
 - 때: 5월 17일(수) 오후 2시 · 장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
 - 주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02-521-8298)
-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연합)이 양심수 석방 기금 마련을 위한 장터를 오는 5월 16일(화)부터 19일(금)까지 서울대 교내 학생회관 앞에서 연다. 메뉴는 술과 안주거리 및 분식종류 (문의 02-763-2606)

▶ 1면에서 이어짐

조항을 삽입해 '직접적인 반독재민주화 투쟁' 뿐 아니라 민중들의 생존권투쟁을 비롯해 반외세자주화운동, 평화통일운동, 언론민주화운동 등 광범위한 분야의 모든 활동'들도 민주화운동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 축소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가자들은 또 정부측이 제시한 의문사특별법의 시행령으로는 "실효성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조사위원회에 민간인이 적극적으로 결합할 수 있어야 하고 △조사위원의 수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는 민간단체들의 이러한 요구를 법의 한계와 예산상의 문제를 들어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 참가자들은 △명예회복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할 것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풍부한 자를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15일 당정협의를 거쳐 5월말과 6월초에 각각 두 법의 시행령을 제정, 공포할 계획이다. 현 정부가 대표적 개혁입법으로 내세우고 있는 두 법이 진정한 과거청산으로 이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김정희)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5월 13일(토)

제 1613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혜정

민주노총 집회 잇따라 불허

경찰, 폭력전력 시비... 집시법 개악 전주곡

민주노총이 낸 집회신고가 폭력시위 전력을 이유로 연달아 불허돼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의 집회금지

역시 같은 이유로 금지된 점으로 미루어 경찰이 최근 추진중인 집회허가요건 강화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본지 5월 3일, 10일자). 서울 경찰청은 10일 민주노총이 5월

29일부터 서울역 광장 등에서 개최하기로 한 총파업 결의대회 집회 신고에 대해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경찰은 집회 금지 통고 공문에서 "주요 참가단체인 전국금속산업연맹의 불법·폭력시위와 지난 4월 1일 민중대회, 4월 29일 노동절 집회 등 불법·폭력 시위 전력이 있어 사회 안정과 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같은 이유로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가 14일 개최기로 한 5·18 민중항쟁 20주년 기념대회에도 불허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12일 서울경찰청을 항의방문 하는 한편 성명을 내고 "경찰의 집회금지 는 우리사회 소외된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이자,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의 집회불허 방침을 총파업을 강경 탄압하겠다는 선전포고로 규정해 이의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기로 했다.

"명백한 위험없는 집회금지 위법"

최근 경찰은 노동절에 발생한 화염병시위와 관련해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특정인의 집회 참가 배제' 등을 골자로 집시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5년, 당시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만큼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교통소통에 장애가 될 때에만 이를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폭력시위와 교통장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집회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유혜정)

<논평> 최저임금제도를 살려라

최근 한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법정최저임금이 너무 낮아 수혜자가 거의 없는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회에 최저임금제의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이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자유 계약을 통해 결정된다. 하지만 말이 자유계약이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자본가가 정하는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얼음장 같은 철칙이다. 그 결과 저임금 노동과 빈곤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자본주의적 재생산 자체를 위협하게되자 국가들은 보완 장치를 만들어냈다. 그것이 바로 최저임금제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률로써 강제하는 제도다. 이런 제도가 확립되는 데는 노동자의 눈물어린 투쟁도 물론 큰 몫을 했다.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는지에 있다. 이는 ILO 협약 제131호와 유엔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등이 모두 중요시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법정 최저임금은 평균 임금의 30.6%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소득불평등 완화는커녕 생계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이처럼 법정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너무 낮다보니 그 혜택을 받고 있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1.1%에 불과하다. 즉 이 제도는 그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 결국 저임금 노동자들은 생존권의 벼랑 끝에 간신히 발만 걸치고 있는 셈이다.

왜 우리는 저임금과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야만을 그냥 두고 보기만 해야 하는가? 최저임금수준의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때 최저임금의 수준은 단지 절대적 빈곤을 구제하는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생계비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임금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선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요구에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골프장 경기보조원 집단 폭행

부당처우 항의하자 남직원 동원

(주)88관광개발(대표이사 여명연) 노동조합(노동위원장 신윤자) 소속 여성 경기보조원(캐디)들이 사측에 의해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88관광개발 노조는 12일 지난 달 부당하게 출장금지조치를 당한 11명의 노동원이 회사 내에서 항의 집회를 벌이던 중 남자직원들에 의해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확인식 총무상무를 비롯해 남자직원 15명은 11일 낮 12시 30분경 노동원들이 집회를 벌이고 있는 로비로 들어닥쳤다. 남자직원들은 노동원들의 피켓 등 시위용품을 부숴으며 이에 반발하는 노동원들을 내동댕이치고 구둑발로 이들의 가슴과 온몸을 짓밟았다. 이 과정에서 노동원

최명임 씨가 심신해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했다. 총무과 소속 유영성 씨는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출장금지를 받은 캐디들은 "보통 여자들과는 달라서 때린다고 맞을 사람도 아니"라면서 이들이 손님들이 드나드는 회사 안까지 들어와 시비를 걸었으며 "이 때 발생한 몸싸움 과정에서 여자들이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국여성노조의 최순임 조직국장은 "사측이 구사대를 동원해 노동원들을 폭행한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와 관련해 관련자에 대한 징계는 물론 법적 대응 또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사태와 관련해 노동원들은

노동부를 항의방문했으며 사측과 한차례 협상을 가졌다. 협상은 오늘 또 한차례 열릴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로부터 위탁받아 골프장을 운영하는 88관광개발은 국가기관의 감독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경기보조원에게 조기정년 퇴직을 강요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일삼아 소속 노동자들은 물론 여성·노동단체들의 비난을 받아왔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노조간부 11명에게 출장금지 조치를 내려 물의를 빚어왔다(관련기사 4월 27일자).

(백은관)

해고 사업장, 우리가 간다

전해투, 22개 사업장 집중투쟁 선포

해고노동자들이 대표적인 해고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적인 타격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 해고자 복지투쟁 특별위원회(전해투) 소속 노동자 1백여명은 12일 낮 12시 국제청(서울 중로 2가) 건물 앞에서 집회를 갖고 수도권 지역내 대표적 해고 사업장에 대한 집중 투쟁을 선포했다.

참가자들은 "해고의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 문제"라고 강조하고 오는 20일까지 "부당 해고를 시정하지 않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선포식을 마친 참가자들은 첫 투쟁 대상으로 삼성그룹을 선정, 삼성특별경영해체와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삼성그룹은 지난 2월 노조 건설을 준비하던 삼성전관 노동자들을 집단 폭행해 물의를 산 바 있으며, 3월에는 해고자들의 집회를 막기 위해 삼성생명 본관 내에 대사관을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노동탄압을 벌이고 있다.

해고노동자들의 집중 포화를 받게될 사업장은 43세 이상의 여성들을 대량 해고해 물의를 빚은 바 있는 삼부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해 한화정보통신(구 오토론), 삼성그룹, 고려도시개발 등 22개 사업장이다. (유해정)

철거지역 폭력 난무

가정의 달이 무색한 무법천지

철거지역 주민들에게는 '가정의 달'도 없는가?

최근 철거민들에 대한 시청지원과 철거용역들의 폭력이 다시 기승을 부려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3월, 살던 집을 강제 철거당한 구리시 최촌마을 주민 4세대는 가수용 시설을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2달이 넘게 천막시위를 벌여왔다. 그러나 이들의 천막은 단 하루도 유지되기 힘든 실정이다. 더구나 시청 측과의 마찰로 아이들마저 크고 작은 부상을 입는 일이 허다하다.

은 종일 비가 내린 지난 10일, 최촌마을 주민들은 50여명이나 되는 시청지원들에 의해 3번씩이나 비닐천막 농성장을 공격받았다. 이 과정에서 구리시청 김경만 주택과장이 초등학교 4학년인 기승이의 손을 쥐고 마구 흔들어댈 기승이는 결국 온몸에 타박상을 입은 채 병원에 실려갔다. 또한 이에 항의하던 한 여성은 김과장에게 하복부를 견어차여 실신하기도 했다.

지난 4월말에도 시청지원들은 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을 향해 찬물을 퍼부어 다섯살짜리 현희는 귀에 물이 찼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지금도 귀에서 흘러나오는 피고름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한편 봉천 3동 철거지역에서도 용역에 의한 폭행 사건이 있었다. 어버이날인 지난 8일 오후 6시경 술에 만취한 다원용역의 김재립 본부장이 세입자대책위원회 사무실에 들어와 기물을 부수고 주민들을 폭행하는 난동을 부린 것이다. 더욱이 이날 김 본부장은 장애인인 주민 김진광 씨를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각목으로 때려 갈비뼈 2개가 부러지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혔다. 이에 따라 현재 김진광 씨는 관악성심병원에 입원중이며 주민들은 김 본부장을 경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다.

가정의 달이라는 오월 역시 한 칸 보금자리를 위해 폭력에 맞선 철거민들에게는 집 없는 설움과 한이 반복되는 잔인한 달일 뿐이다. (김보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5월 16일(화)

제 1614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완전월급제 쟁취 다시 앞으로

고려운수 택시 노동자 분신기도 계기로

12일, 고려운수 택시 노동자 서정호(41) 씨가 회사측의 일방적인 사납금 인상에 항의해 신나를 끼얹고 분신을 기도했으나 동료들에게 발견돼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동안 잠잠했던 고려운수 사태는 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려운수 노동조합(위원장 정지구)은 지난해 5월 완전 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벌어진 수입 중 일정액을 회사측에 납금한 후 남은 수입을 노동자가 임금으로 취하는 사납금제로는 임금이 턱없이 낮아 일정 임금을 정해놓는 완전 월급제 도입을 요구했던 것. 그러나 회사는 교섭을 회피했으며 결국 사업장을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9개월간 계속된 파업은 결국 고려운수노조가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송현준 사장의 각서와 서울시의 중재를 받아들인 지난 1월에야 끝이 났다. 그러나 회사측은 약속을 어기고 노조와의 교섭을 회피한 채 일방적으로 사납금을 인상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휴게실을 없애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

서 씨가 분신을 기도했던 배경에는 이런 절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분신 기도가 있자 노조는 그날 밤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무기한 건부파업과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매일 오후 3시 송현준 사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노조는 "사납금 인상 이후 임금이 채 40만원도 되지 않는다"며 "이전 월급에 비교했을 때 지난 3개월동안 회사측이 2억 5천여만원을 갈취해간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월 이후 사장이 회사에 나오지 않아 교섭조차

못했다"며 "지난해 장기적인 파업을 벌였던 터라 조금 더 참아보려 했지만 노동자들의 분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의 김성환 정책부장은 "서울시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서울시를 강력히 비난했다. (유해정)

"명예회복!" 민주당사 농성

시국사건 관련 교원 미임용자

80년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교사임용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명예회복과 임용을 촉구하며 민주당사 농성에 들어갔다.

"전국시국사건관련 교원미임용자 원상회복추진위원회" 회원 7명은 15일 오후 3시 천정배 민주당 제1정책조정 위원장과 만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 시행령에 교원임용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임용을 통한 명예회복조항 삽입을 요구했다. 그러나 천 위원장이 구체적 입장표명을 유보하자 3시 40분부터 농성을 시작했다.

지난해 9월 제정된 '시국사건 관련 등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

법'은 △89년 7월부터 90년 10월 사이에 △국립 사대·교대의 졸업자 가운데 △시국사건과 관련 임용 제외된 사람만을 구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된 시국사건 관련 미임용자는 90여명에 이른다. (유해정)

체벌없는 학교, 정부가 나서라

12일 집단체벌을 받던 여고생 박 모 양(15)이 숨진 사건과 관련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회장 유지희)는 성명을 내고 교육당국이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엔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최근 추락한 교사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 체벌이 허용돼야 한다는 논리와 함께 학생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사의 비이성적 체벌에 가슴 앓이하는 부모들의 호소가 줄을 잇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참교육 학부모회」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부적격교사 활동 중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학생 인권침해 해결을 위한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교사, 학생 등 정규 인권교육과정 이수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요일교(경북 구미시)에 다닌 박 양은 지난 12일 반 하업분위기가 불타는 이유로 엎드려 뺨치기 등의 전체 기합을 받던 중 사망했다. 박 양의 생활기록부에는 '숨이 차서 운동을 할 수 없다'고 기록돼 있었다. (유해정)

▶ 범민족대회 주도 혐의 박해전 씨 사건
- 5월 17일(수) 오후 2시, 서울지법 317호, 선고(결심에서 3년 구형)

▶ 매항리 미 폭격장 소음피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
- 매항리 전란구 씨 외 14인, 5월 18일(목) 오후 2시
- 한국방송공사에서 4월 13일 방영한 녹화 테이프 감정 및 현장 검증 실시

인권 시평

네팔여인

강금실 (변호사)

콜롬비아 출신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소설 중에 "난 전화를 걸려고 온 것 뿐이에요"라는 작품이 있다. 멕시코 출신 여성이 스페인에 살면서 남편을 만나러 가는 길에 자동차가 고장난다. 지나가는 차를 겨우 얻어타고서 남편에게 전화할 곳을 찾아가는데, 그 차는 정신병원으로 가는 환자들의 수송버스였다. "난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고 온 것 뿐이에요"라고 아무리 항변을 해도 그것은 전화에 대한 강박증으로 받아들여지고 정신병원에 수용된다. 천신만고 끝에 남편에게 연락이 닿았으나, 병원으로 찾아온 남편도 그 여성을 정신병자로 여긴다. 이에 좌절한 그 여성은 그때까지 살아왔으며, 앞으로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자신의 자유로운 삶을 포기하고 정신병원생활을 택해 여생을 보낸다는 내용이다. 마르케스의 이 작품은 이성주의가 창궐하는 유럽에서 중남미 사람이 겪는 믿을 수 없는 일을 닮아 유럽문명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곤 한다.

오래 전에 읽은 이 소설이 문득 생각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바로 소설과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었기 때문이다. 네팔에서 이 나라를 찾아온 한 노동자 여성이 식당에서 음식값을 다투다가 경찰에 신고된 후 서툰 한국말로 네팔사람이라고 항변을 하였으나 헛소리하는 정신병자로 몰려서 6년의 세월을 정신병원에서 보냈다고 한다. 소설의 내용과 실제상황은 발생원인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피해자인 여성들은 외국인이며, 그들의 조국보다 잘 사는 나라에서 정신병자로 몰리게 되었다. 서구산업화의 발전정도, 경제적인 부의 차별성이 사건을 일으킨 공간적 여건을 형성한다. 또한 피해여성들이 정신병원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분명한 악의가 개입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경제적 부에 따라 차별화된 공간적 여건은 사람들에게 문화로 내면화되어 있어서 다른 문화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밀폐된 시설에 감금하여 격리하는 것은 그저 자연스러운 일로 수행되고 있을 뿐이다. 마르케스가 "위대한 레오파드"(그리스 신화에서 잔인함과 동물적 공격성, 악마 등을 상징함)로 묘사한 그 문화의 강자적 폭력성은 그 공간의 일상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소설 속에서 피해여성은 폭력적으로 주어지던 여건에 순응하여 자신의 본래적 삶을 상실한다. 실제상황에서 우리나라라는 공간적 여건은 소설의 유럽과는 달리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하여온 피해당사국이라는 성격도 갖고 있다. 결국 반인권적 상황을 창출하는 강자적 폭력과 문화적 공격성은 개인의 삶과 내면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며, 이는 특정한 사람이나 어느 집단에게만 특유한 속성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이루는 문화 속에 잠재되어 있는 보편적 본능이라는 확인을 하게 한다. 인권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점을 어디에 어떻게 자리지우는가 하는 것은, 내게는 버거운 화두이다.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8일 - 5월 14일)

1. 더 이상 인간의 삶을 폭격하지 말라!
매항리 미군 쿠니 사격장에서 미 폭격기 오폭 사고로 인근주민 6명이 부상하고 농가 7백여 가구 벽에 금이 가는 피해가 발생. 그러나 미군측은 사고 내용에 대해 우리 국방부측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으며 피해 주민들의 면담요구도 거절. 우리 정부 역시 피해신고를 받고도 사고발생 5일이 지나도록 현장 방문조차 하지 않아(5/8) 사회단체, 미군 사격장 폐쇄와 불공정한 SOFA개정 촉구(5/12)

2. 집회 불허는 무리수
경찰, 폭력시위 전력을 이유로 축협노조 등의 집회를 불허한 데 이어 민주노총 집회 불허. 그러나 민주노총이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나서는 등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자 이틀만에 애초 결정을 철회하고 민주노총 집회 허용키로(5/14)

3. 사린 씨, 일단은 풀려났지만...
법무부, 국내에서 버마 민주화 활동을 벌이던 중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구금된 사린 씨의 난민신청을 공식 접수. 이에 따라 사린 씨는 석방됐으며 앞으로 난민심사를 받게 됐다(5/10)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빛 좋은 개살구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종전의 생활보호대상자까지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 이에 시민사회단체, 김대중 대통령 면담은 물론 항의집회를 추진하는 등 범국민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혀(5/12)

5. 철도청 징계 행렬, 브레이크 없는 폭주열차
철도청이 지난 4월말에 이어 또 다시 철도노조 민주화를 요구하는 조합 지도부들에게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내려 말썽(5/10)

6. 아직도 이런 일이!
경찰이 마약을 판매한 혐의가 있다며 무고한 한 시민을 야산으로 끌고 가 '생매장' 위협을 하는 등 4시간 동안 고문수사를 벌여 물의(5/14)

<나라밖 인권소식>
영국(인더펜던트), 어린이 구호기관인 '세이프 더 월드'를 인용해 세계적으로 2천만명의 어린이가 전쟁의 참화로 거리를 떠돌고 있다고 밝혀(5/9)/ 한편 국제인권단체인 '어린이 군인 이용 중단'을 위한 비정부 연합'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30만명의 어린이가 전쟁에 동원돼 있다고 주장(5/10)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5월 17일(수)

제 1615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소파개정에 쏠린 눈

집회 참가자들 수만, 지나가는 관심이 아니라

매항리 오폭사고를 계기로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관심이 극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15일 오후 2시 미대사관 옆 시민공원(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불평등한 SOFA개정 촉구 집회에는 50여명이 넘는 취재진이 몰려들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다.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등이 주최한 이날 집회는 시민사회단체 회원을 비롯해 익산역 양민학살 희생자 유가족, 대학생 등 1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집회참가자들은 △SOFA협상 재개 및 전면 개정 △한국전쟁 중 발생한 양민학살 진상규명 △매항리 폭격중단 및 사격장 폐쇄를 단호한 어조로 촉구했다.

차에나 올라가기도 하고 가로수 위로 올라가기까지 했다.

미 대사관 항의서한 접수 거부
집회참가자들이 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또 한차례 심각한 마찰이 발생했다. 대표단으로 미대사관을 방문한 문정현 신부, 홍근수 목사 등은 미대사관측에서 항의서한을 공식접수하지 않자 미대사관 정문 앞에 주저앉아 농성을 벌인 것. 이에 경찰은 경고조치하지 않은 채 대표단을 거칠게 끌어냈으며 문 신부는 거의 실신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사태는

구급차가 출동하고 밀착감치 있던 집회참가자들이 미대사관으로 몰려온 후에야 진정됐다. 결국 이날 집회는 6시가 넘어야 끝났고, 허술한 천막 하나가 지어졌다. 익산역 양민학살 희생자 유가족들은 27일까지 이곳에서 천막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하지만 경찰이 이를 마냥 두고볼지는 미지수다.

시민사회단체 더 큰 힘 모아야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이날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저마다 큰 아쉬움을 토로했다. 매항리 문제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긴 하지만 이를 주도해야 할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은 너무 미미하다는 것이다. 한 월간지 기자는 "언론의 관심이 사라지기 전에 시민·사회단체의 좀더 강력하고 결집된 행동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남겼다. (유해정)

새로 나온 책
『시민이 재판을』
2000. 4/ 박홍규 지음/ 도서출판 사람생각 펴냄/ 271쪽

'시민이 재판을!'이란 이 책의 제목 자체가 '한국의' 독자들에게는 사뭇 도전적이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 재판이란 누가 하는 일이고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봉건적인 과거시험과 동일시되는 사법시험을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통과하여 위엄 있는 법복을 입고 전용 엘리베이터와 복도를 통해 등장하는 직업적인 법관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귀하다 귀하신 법관과 보통사람이 나란히 앉아 재판을 한다는 구상 자체가 한쪽에선 필적될 일이고, 다른 한쪽에선 송구스러워 품도 못 풀 일이다. 필자는 이러한 우리의 현실과 사고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극히 '예외'라는 점을 이 책 전반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배심제이든 참심제이든 간에 시민의 사법 참가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나라, 요컨대 직업적 재판관으로만 재판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다'는 것이 필자의 현실인식이다. 그 증거는 필자가 각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로부터 영미 등 세계 각국이 취해온 시민재판제도의 역사와 성격에서 드러나고 있다.

또한 필자가 망라한 각국의 배심제와 참심제의 빛과 그늘은 시민의 사법 참가의 기초이념을 확인시켜준다. 사법도 국가기능의 하나이므로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중 시민에 '의한' 사법이야말로 그 본질이다. 이에 우리는 '권력독점적인 관료사법'에서 '국민주권적인 시민사법'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필자는 강조하고 있다. (류은숙)

인터뷰

영세사업장의 외침

“일한 만큼의 대가를 원한다”

조합원 18명으로 이루어진 한 영세한 하청 인쇄업체의 노조가 지난 4월 25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이 달 15일부터는 노조위원장이 단식을 시작했고, 노조원들은 철야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남영동 인쇄골목에 자리한 임창문화사(대표 김문선)의 강원섭 노조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 왜 파업을 하게 되었나?

회사측은 지난 97년 IMF를 이유로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의 30%이상과 상여금 400% 전액을 삭감했다. 또한 식사시간을 30분 줄였고 점심식사비 지급을 중단했다. 연차, 생리 휴가 역시 폐지했다. 당시엔 우리 노동자들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생각에 사측의 입장을 수용했다. 그러나 경기가 좋아진 이후에도 회사의 방침엔 전혀 변화가 없었다. 현재 공장을 24시간 가동시킬 만큼 회사의 사정이 나아졌음에도 삭감된 임금을 인상해주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현재 임창문화사의 임금수준은 주변 업체의 70-80%에 불과하며 상여금은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들은 IMF 이전 수준으로 임금 및 노동환경을 개선시켜줄길 요구했지만 사측은 ‘해 볼데면 해 보라’는 식이었다. 우리에게 달리 선택할 것이 없었다.

■ 파업 후 사측의 태도는?

교섭에 나선 것이 아니라 ‘회사에 불순한 사람이 들라거리는 것을 막는다’면서 용역부터 고용했다. 결국 지난 27일에는 용역이 노동자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사측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노조는 이미 사측을 노동부에 고발한 상태다.

■ 인쇄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영세사업장이 많다보니 노동환경 개선과 임금인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직률이 매우 높다. 매일 2교대로 12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기계소음이 심하다보니 난청환자들이 많다. 또한 먼지가 많이 발생해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기관지 질환에 시달린다. 기계로 인한 산재는 흔한 일이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동안 사장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됐다. 반면 우리 노동자들은 하고싶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다. 우리는 일한 만큼의 대가를, 대우를 받길 원할 뿐이다. 싸움이 쉽게 끝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물러선다면 해고되거나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 <유해정>

<독자투고>

“이산가족된 우리가족”

이은주(전 용산차량사무소 부지부장 김정민 씨 부인)

5월은 ‘가정의 달’이라는데 우리 가족에선 생이별을 해야 하는 뼈아픈 고통의 날이 시작되는 달이다. 남북이산가족도 이제는 만나야 한다는 이 때, 3살박이 아들 산이는 아빠가 보고싶다며 난만뜨면 “아빠, 회사에서 언제 와라”며 칭얼댄다. 노조 민주화를 요구하며 투쟁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산간벽지 아무도 없는 곳으로 전출된 우리 아빠. 그리고 이산가족이 된 우리가족.

지금 철도 현장 노동자들은 21세기라고는 말할 수조차 없는 정말 열악한 24시간 맞고대 근무를 하고 있다. 1년 365일 중에 보장된 휴일은 단 하루도 없다. 조합원들의 노동환경과 인간다운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피 같은 조합비로 술 퍼마시고 관계 공무원들한테 금품 및 향음제공에만 혈안이 된 어용노조만 있을 뿐이다. 3중 간선제라는 방식을 이용해 53년간 권력을 이어온 어용의 역사만 있을 뿐이다. 지난 1월 대법원은 3중 간선에 의한 철도노조 위원장선출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현장의 노동자들 역시 노동자를 위한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결성, 조합원 찬반투표에 의한 규약개정과 위원장직선을 요구하며 농성투쟁을 전개했다. 하지만 철도청은 노조 내부의 문제에 부당하게 개입해 공투본 간부들과 현장 조합원들을 말도 안되는 이유로 무더기로 징계하고 해고했다. 한 집안의 가장을 직장에서 해고하고, 또 돌봐야 할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간 벽지에 전출명령을 내려 생이별의 고통을 맞게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건설교통부 재직 당시 대한항공에서 돈 받은 혐의 뿐 아니라 어용철도노조에게 해외장도급으로 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보도돼 시민단체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무원에 대한 감사 청구 및 부패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게 만들었던 주인공인 정종환 철도청장의 작품이다. 근데 그런 사람이 MBC 다큐멘터리 <성공시대>에 성공한 인물로 나온다니... 가족들의 면담요청에 공공권으로 답했던 사람이, 이렇게 반인륜적인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른 사람이...

아직도 용산에 있는 30m의 철담에는 해고된 철도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고공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이 철도노조 민주화를 요구하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우리 가족은 결코 정종환 철도청장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침묵하지만도 않을 것이다. 우리 가족이 이전처럼 단란하게 살 수 있는 날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들을 위한 철도노조를 만들기 위해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 김정민 씨는 지난 4월말 징계조치 돼, 5월4일자로 제천전기사무소(근무지 - 강원도 사북 열 증산보소 지미원주재)로 전출이 됐습니다. <편집자 주>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5월 18일(목)

제 1616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노동자가 아니다?

노동부, 캐디에 대한 엇갈린 해석 내려

골프장 경기보조원인 ‘캐디’ 가운데 일부만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는 노동부의 해석이 나왔다. 노동부는 17일, 4개 골프장 캐디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전국여성노조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두 군데 골프장 캐디에 대해서는 근로자라는 해석을, 나머지 두 곳의 캐디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엇갈린 해석을 내렸다. 근로자라는 판단이 내려진 골프장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사측의 부당해고나 노동조합 불인정 등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노동부는 부곡(경남 창원)과 88(경기 용인) 골프장 캐디의 경우 사측이 캐디의 선발이나 징계 결정, 자치내규 작성 등에 직접 관여하고 캐디봉사를 정할 때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채용이나 징계, 교육, 근무규정, 근무장소와 시간 지정 등에 사측이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행사하거나 △노무의 대가로 임금이 지급되고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데 사측이 관여하고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반면 한화프리카(경기 용인)와 한양(경기 고양) 골프장의 경우, 캐디들의 자치기구에서 캐디봉사와 근무수칙에 관한 자체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노동부는 판단했다.

노동부의 발표가 있다. 즉각 여성·노동단체의 비판이 쏟아졌다.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4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노동부가

두 골프장의 캐디를 근로자로 인정해 근로기준법 적용의 물꼬를 텄다는 점은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유사한 조건에 있는 한화와 한양 골프장 캐디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편파적 조사에 의존한 채 영종한 결정을 내려 부당해고된 44명의 해고자들의 목을 다시 한번 잘랐다”며 두 골프장에 대한 즉각적인 제소사를 촉구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의 이주환 사무처장은 “한화골프장의 경우만 하더라도 회사측 직원인 캐디마스터가 캐디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근무규율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근로자가 아니냐”며 꼬집었다.

최일숙 변호사도 “노동부가 형식적인 요소에 집착한 나머지, 이들 캐디가 근로자임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증거를 외면했다”고 지적하고 “학습지교사나 캐디처럼 변칙적인 고용관계 하에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노동부가 적극적인 입장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근로기준과 박명순 사무관은 “캐디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엇갈리고 있는 만큼, 무리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었다”며 “앞으로 특수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120여개 골프장의 1만2천여 명에 달하는 캐디는 채용시 나이와 용모에 따른 차별, 조기 정년퇴직 강요, 노조 탄압,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겪어왔다. <배경내>

원직복직으로의 한 길

천막농성 1년 맞은 한화오토론 해고 노동자

“우리는 일자리를 구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1년의 농성은 구조조정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한화자본에 대한 정당한 투쟁이었습니다. 우리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복직의 그날을 꿈꾸며 지난해 5월부터 구로공장 앞 천막농성장을 지켜온 해고노동자 정미정(33) 씨. 농성 1주년을 맞이한 17일, 정 씨는 농성장을 찾은 80여 명의 노동자와 대학생 앞에서 이렇게 결의를 밝혔다.

한화오토론 해고노동자들은 98년 체불상여금 문제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 빌미가 돼 부당 징계와 해고를 당했다. 이후 농성이 1년의 세월을 넘기는 동안 처음 12명이 함께 했던 농성을 지금은 3명의 해고자만이 지키고 있고, 회사의 이름도 (주)오토론에서 (주)한화구로공장으로 바뀌었다. “힘들었죠. 평행선을 달리는 것처럼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해고노동자 이상희(30) 씨가 회사측 직원의 해고자 폭력, 회사차량의 해고자 뺑소니 사건 등을 겪어야 했던 그간 세월을 떠올리며 심경을 털어놓았다. 다행히 다른 사업장의 해고노동자들과 대학생들의 연대가 이들에겐 더할 나위없는 힘이 되어 왔다.

이날 집회를 끝내며 3명의 여성 해고노동자들은 ‘간강하고 당당한 노동자의 삶’을 바라는 소망을 담아 ‘원직복직’이라는 열서를 남겼다. <고근예>

푸에르토리코에도 '매항리'가 있다

미군 폭격훈련장 우라늄탄 실험, 불붙은 주민 저항

매항리 미군 폭격훈련장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지배하의 푸에르토리코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미국 연수중인 인권운동사랑방 김정아 씨가 보내온 글을 실는다. <편집자주>

지난 2월 이후 미 해군 철수를 요구하는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의 저항운동이 고조되자, 최근 미국정부가 이를 강제진압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매항리'는 바로 미 해군이 1941년부터 군사훈련지로 사용하고 있는 푸에르토리코의 비에케 섬. 지난해 4월 19일, 유고 폭격을 위한 훈련 중이던 미해군은 이 섬에 위치한 폭격 훈련장에서 오희쪽으로 민간인 데이빗 사네(David Sanes) 씨를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사네 씨의 죽음은 푸에르토리코에서 처음으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본격적인 국민행동에 불을 당겼다. 이 저항운동은 지난 2월의 1백만명이 넘는 대규모 시위로 발전하기도 했다. 사네 씨의 사망사건 이후 주민들은 이 섬 훈련장을 접거하면서 미 해군과 치열하게 대치해왔다. 그들의 요구는 미 해군의 군사훈련 즉각 중단과 완전철수이다.

미국이 푸에르토리코에 설치해 놓고 있는 거대한 군사기지는 비에케를 비롯해 모두 3곳. 특히 과거 파나마에 위치해 있던 미국 Southern Command 소속 Southern Army가 최근 푸에르토리코로 이전되었고 이 곳에서 대규모 군사요원이 양성되고 있다는 것이 '국제행동연대' 스콧 씨의 설명이다. '국제행동연대'는 미국내에서 푸에르토리코 독립지지 운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이다. 그는 또 "결프전과 유고전에서 사용되었던 모든 신종무기는 푸에르토리코에서 이미 군사실험을 거친 것"이라며 푸에르토리코는 사실상 미군 군사작전의 전진기지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내 시민단체들은 푸에르토리코에서 실험되고 있는 신종무기에 강한 화학 독성물질이 들어있으며 강

력 비난하고 있다. 미국에서 푸에르토리코 독립운동을 꾸준히 펼쳐온 모니카 소모쿠시오 씨는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했던 다이옥신 등 독성이 강한 화학무기와 우라늄을 포함한 핵무기를 비에케에서 실험하고 있고, 그 결과 이 지역 열대우림 파괴는 물론 주민 1/5 가량이 암에 시달리고 있다"고 현지의 참상을 전한다.

주민들의 뜻밖의 저항에 직면한 미국정부는 지난 1월, 비에케 주민들에게 △3년동안 폭격훈련 재개와 4백만 달러 보상 △폭격훈련 재개와 영구상주 △폭격훈련에 대한 국민투표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모니카씨는 "어느 것 하나 선택할 수 없다. 특히 국민투표는 민주적인 듯이 보이지만 지금과 같은 식민상황 하에서 공정한 투표를 기대할 수 없다"며 미국의 즉각 철수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비에케 훈련장을 검거하는 주민들에 대해 강제연행이라는 강수를

택한 것은 지난 4일이였다. 연행과정에서 80세가 넘는 노인이나 환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의자도 없이 10시간 동안 햇볕 아래 방치하기도 한 '가혹행위'는 오히려 저항운동을 부채질하고 있는 듯하다. 현재 미해군과 경찰은 비에케 주요 도로와 부대 출입구를 통제하고 민간인의 접근을 막고 있으며 특히 어부들의 해안 접근을 막음으로써 이들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최근 소식이다.

미국은 푸에르토리코를 1898년부터 강점하고 있다.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전쟁 당시 미국은 푸에르토리코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그곳에 아예 상주해버린 것이다. 푸에르토리코 국민은 미국 시민권을 가질 수 있지만 투표권은 없다. 군사적으로는 적어도 13% 이상의 섬이 미국방성의 직접 통제를 받는다. 미국 기업은 세금없이 푸에르토리코에서 생산과 유통, 판매를 할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이 최저생계를 밑도는 저임금이다. 무엇보다도 미국법(미국-푸에르토리코 정치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푸에르토리코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 사실상 미국의 식민지인 셈이다.

'미국의 매항리' 비에케의 운명은 우리에게도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행사와 동정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창립총회 및 개소식
 - 때 : 5월 20일 (토) 낮 2시 30분 ·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창립총회)
 - 주최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문의 02-708-5815)
- 삼성족벌경영 해체와 원직복직 쟁취 결의 대회
 - 때 : 5월 18일 (목) 낮 12시 · 장소 : 종로2가 국제청
 - 주최 : 삼성그룹해고자 복지투쟁위원회 (문의 018-507-6281)
- 이태원살인사건 피의자, 매카시의 신병인도와 SOFA 개정 촉구 집회
 - 집회 후 4시에 서울지법 형사 319호에서 열리는 매카시의 첫 재판도 참관
 - 때 : 5월 19일 (금) 3시 · 장소 : 서울지방법원 앞
 - 주최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문의 02-744-121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 정착을 촉구하는 대정부 항의집회
 - 때 : 5월 19일 오후 1시 · 장소 : 광화문 종합청사 후문
 - 주최 : 참여연대 (문의 02-723-0665 김성희)
- 평화연구가 요한 갈통 초청 간담회 - '평화와 인권, 21세기의 의미'
 - 때 : 5월 18일 (목) 오후 7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문의 02-757-7386)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전·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5월 19일(금)

제 1617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현장보고- '5·18' 20주년 광주를 가다

누구를 위한 '5·18'인가?

18일 오전 10시, 광주 망월동에서는 대통령과 각계인사 2천3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기념식이 열렸다. 그러나 기념식에는 정부에서 초청한 인사들만 참석할 수 있었고, 많은 시민들은 기념식장인 신(新)묘역에 발조차 들여놓지 못했다. 묘역 주변에는 경찰이 물שת없이 배치돼 있었다. 또한 광주 시내나 담양 쪽에서 망월동으로 오는 시내버스들은 모두 아침 일찍부터 차단됐기 때문에 자가용이 없는 시민들은 몇 킬로미터를 걸어야만 망월동 묘역에 도착할 수 있었다.

"씨벌,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5·18을 독식해? 그만 이용해먹으라고 해!" 신묘역 주변에서는 기념식에 참가하거나 참배하려는 시민들과 "질서유지를 위해 협조를 부탁"하는 경찰 사이의 실랑이가 끊임 새 없었다. 오전 10시 30분에야 구묘역 입구에 다다른 전계순씨(62, 86년 분신한 이재호 열사의 모친)는 "담양쪽 입구에서 20분이나 걸여왔다"며 숨을 몰아쉬었다. 97년 이후 정부가 기념식을 벌일 때마다 기념식장에 들어기려는 시민들과 경찰 사이의 실랑이는 연례행사다. 올해는 특히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해서 경호가 더 삼엄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도 5·18 유족이야. 우리 아들 묘에도 못 가냐? 계엄군과 싸울 때 난 뭘 했어!" 어느 시민이 호통을 치면서 경찰의 멱살을 잡고 혼든다.

신묘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시민들과 외지 참배자들은 구묘역(광주시립공원 묘지 제3묘역)으로 발길을 돌렸다. 80년 당시 계엄군에 맞아 숨진 시민군들을 쓰러기처에 실어다 문음으로써 만들어진 구묘역엔 이제 이현열, 이철

규, 이내창 등 8,90년대에 산화해간 열사들과 의문사한 이들의 무덤이 있고, 그 앞에는 변함없이 유가족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신묘역으로 옮겨간 5·18 희생자들의 묘는 허묘 형태로 그대로 있지만, 국화 한 송이 제대로 놓여져 있지 않았다.

5월에는 신묘역에 가지 않는다는 송득용 씨(36·추모단체연대회 호남지구

협의회 사무국장)는 "여기가 역사의 현장인데, 현장은 버려두고, 왜 외양만 화려한 신묘역에서 기념식을 갖는지..."라며 서운한 심기를 토로했다. 5월 열사들이 돈에 팔려간 것도 같고, 너도나도 5.18을 챙기려는 사람들의 잇속이 훤히 보이는 게 싫단다.

그 시각 대통령은 광주의 4대 정신(인권, 철저한 비폭력, 성숙한 시민, 평화)을 역설하며 5·18 희생자들을 유공자로 예우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이 기념식수를 마치고 떠난 오전 11시를 훌쩍 넘긴 시각까지 참배객들은 신묘역에 접근하지 못했다. 5·18 20주년은 이렇게 지나갔다. <박래군>

'인권의 도시'에 '예비검속'?

'5·18' 20주년 광주, 또 하나의 얼굴 (광주: 김정희)

'예비검속'이란 말은 6·25전쟁 직전 보도연맹원이나 마구 연행하다가 죽이던 시절에 쓰였던 말이다.

'5·18청년동지회' 전 회장 정태영(46세) 씨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현관 앞에서 광주 북부경찰서 보안과 소속 경찰관 30여명에 의해 연행된 것은 지난 17일 아침. 경찰들은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 씨의 팔과 목을 비틀어 승합차에 태웠다. 정 씨는 달리는 차안에서도 양팔이 등뒤로 심하게 쥐인 채 머리를 바닥으로 쳐박은 자세로 약 2시간을 견디어야 했다. 승합차는 여수를 지나 배를 타고 금산이라는 섬에 도착했다. 금산 파출소에서 점심을 먹은 후 배를 타고 고흥 등지를 뱅뱅 돌다가 다시 금산섬으로 돌아와 일행은 그곳 여관에 투숙했다. 18일 아침 경찰들은 정 씨를 데리고 다시 배를 타고 육지로 이동했다. '이관사관'이라는 심정으로 정 씨는 이동 중인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리기도 했지만 결국 죽지도 도망치지도 못했다. 경찰은 기념식이 끝난 18일 오후 5시에야 정 씨를 집 앞에 부려놓았다.

'5·18청년동지회' 회원 유춘탁 씨와 박중석 씨 역시 17일 각각 광주 서부경찰서와 광산경찰서 정보과 경찰관들에 의해 연행되어 장성, 완도 등지를 돌아다니다 18일 오후에야 풀려났다.

정 씨를 연행했던 경찰관은 이 납치극에 항의한 천주교 광주정평위측에 태연히 '예비검속'이라고 설명했다. 유 씨가 이번에 '예비검속' 된 것은 1년 전 '5·18의 정치상품화'에 항의하기 위해 묘역 기념탑 앞에서 연설하는 한화갑 당시 국민회의 특보단장에게 똥을 뿌렸기 때문이라는 소문이다.

"관변"이 되기를 거부하는 '5·18' 부상자와 유족들이 86년에 창립했다는 '5·18청년동지회'는 경찰의 "일상적인" 감시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이번에도 이들 3명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들 집을 경찰이 철통같이 지켰다는 것. 과연 '예비검속'이 광주를 '세계적인 인권의 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검찰 '반미시위 진화' 급급

국민 여론 무시... '시위 엄단' 입장만 되풀이

불평등한 SOFA(한미주둔군 지위협정)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불법적인 반미활동에 대해 엄단하라'는 시대착오적 조치를 내려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비난을 불러오고 있다.

대검 공안부(부장 김각영 검사장)는 18일 "최근 한총련 학생 등이 미대사관 주변에서 불법 시위를 잇따라 벌이고 있다"며 "불법적인 반미활동에 대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단조치를 취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총련 학생들이 지난 15일 미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오는 20일과 21일 미대사관 진격투쟁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적인 반미 시위가 SOFA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는 만큼 국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에 미국 대사관 주변에서 시위를 벌인 한총련 학생 가운데 현장에서 불잡은 55명을 입건하고 이중에 3명을 구속했다. 또한 시위를 주도한 학생 2명을 색출해 이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의 김종섭 사무국장은 "그동안 미군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행위에 대해 정부가 어디 한번 제대로 항의한 사실이라도 있느냐"며 "학생들이 잘못된 한미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싸우는 것에 고마워하진 못할 망정 불법 시위 운운하며 엄단조치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구태의연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국제민주연대의 차미경 사무국장도 "미국을 상대로 한 시위는 학생들만의 주장이 아닌 온 국민과 전 세계의 관심사"라며 "검찰이 계속 학생들을 구속수사한다면 시민사회단체가 미대사관 앞 진격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유해정)

지역 15년형이 구형된 데 대해 여성 및 장애인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3월 11일자).

군포여성민우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9개 시민·여성·장애인단체로 구성된 「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우 유순자 구명운동 대책위원회」는 18일 대책회의를 통해 "가정폭력과 여성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인의 책임을 유 씨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유 씨에게 또 다시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이들은 오는 22일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수원지방검찰청 박철 검사는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무리 고통스러웠더라도 남편을 살해하는 것 외에 다른 대책이 없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유 씨에게 15년형을 구형했다. 유 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26일 오후 4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유해정)

가정폭력 피해자 15년 구형

유순자 씨 선고재판 오는 26일

상습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유순자(39, 지체 1급 뇌성마비 및 언어장애) 씨에게 지난 12일

미임용 교원 단식농성

민주당사서 5일째

「전국 시국사건관련 교원 미임용자 원상회복추진위원회」(공동대표 유윤식 등, 이하 전미추) 소속 회원 6명이 민주당사서에서 5일째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4월 1일자).

80년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교사임용에서 배제됐던 이들은 오는 5월 27일 공포될 예정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 시행령에 미임용자의 임용을 보장하는 규정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18일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미임용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7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공동대표 박정기 등)는 17일 지지성명을 발표해 "교직의 꿈을 접고 고난에 찬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였던 이들이 임용되는 것은 민주화운동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배경내)

만화사랑방



이동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5월 20일(토)

제 1618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비정규직은 서럽다

서울역 집회,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요구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오전 11시, 15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인 서울역 광장. "위탁계약직이라는 이유로 4대 사회보험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사측은 '근로자 수당'마저도 주

지 않으려 합니다."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의 발언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 배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아파서 좀 쉬겠다고 진단서를 떼가면 그만 두세요." (서울대시설킨리노조 최분자) "에니메이션 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이라고요? 웃기는 이야기죠. 2만 명의 에니메이션 노동

<논평> 인권의 도시는 없다

5·18민중항쟁! 독재정권의 심장이 서늘하도록 '피 피'를 질구하던 오일의 노래가 벌써 20주년을 맞았다. 어두운 광장에서 참담한 시대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소곤거릴 수 밖에 없었던 광주의 이야기들은 이제 TV와 신문을 도배하기에 이르렀다. 최후탄 연기에 싸이면서 눈물범벅으로 치려야 했던 기념식도 어느새 우리가 감히 참석을 꿈꿀 수 없는 명사님들의 호화판 행사가 되어버렸다.

지금 광주를 세계적인 '인권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가 사뭇 야단스럽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이런 포부가 과연 진정 광주 민중들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포부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의 도시'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도, 그리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인지도 의심스럽거나 그것을 권력을 배경으로 막대한 돈을 들여가며 만들려는 무모한 기도를 묵도하면서 우리는 그런 발상이 5·18의 정신과는 밀고도 먼 첫임을 확인한다.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어느 도시를 스포츠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식으로 '인권의 도시'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권, 인권의식, 인권운동은 본디 인간을 억누르는 모든 권력과의 처절한 투쟁 속에서 성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 누가 '인권의 도시'를 운운하기 전, 20년 전에도 광주는 '인권의 도시'였다. 그런 광주는 과거의 죄를 손쉽게 씻고 싶은 기득권층과 인권의 이름을 빌어 행세하고 싶은 출세주의자들의 인권놀음으로 말미암아 바야흐로 역설적이게도 '인권의 도시'이기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광주인권상 또한 첫관부터 국제적 사교의 도구로 쓰여지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감지한다. 동티모르의 영웅 사나 구스마오는 상을 받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광주는 구스마오의 국제적 명성에 편승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그 옛날 아무런 명성도 욕심도 없이 광주의 진실을 세계에 알려주었던, 그런 손길이 되어 고립무원의 고통을 겪고 있는 '현재의 광주'로 수상자를 찾아 나섰어야 하지 않겠는가? 위선자들아. 거룩한 광주의 이름으로 인권을 팔아먹지 말라!

자들은 퇴직금조차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걸요." (에니메이션노조 유재운)

이날 모인 노동자들은 △4대사회보험(고용보험·의료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의 전면적용 △근로자관련법 철폐 △영세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완전적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의 박상윤 조직부장은 "이러한 요구를 사회 쟁점화하기 위해 장기적인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6월 3일 2시 종로공원에서 "전국비정규·영세사업장·여성노동자대회"가 열린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금년 2월 현재 1년 미만의 고용계약을 맺은 임시직(비정규직)이 671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5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정규직에 비해 50~75%의 낮은 임금을 받을 뿐더러 휴일·휴가·퇴직금·사회보험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주영)

88관광개발 캐디 전원 복직

지난 4월 '조합원의 날' 행사를 가졌다는 이유로 출장금지 조치를 당한 88관광개발(주) 경기보조원(캐디) 11명 전원이 원직복직됐다.

88관광개발(주)은 지난 17일 노동조합(노조 위원장 신윤자)의 단체교섭에서 노조의 협상안을 받아들여 노조원 11명 전원의 원직복직과 이들의 노조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성희롱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완강한 입장을 고수해오던 사측의 태도 변화는 이날 오전 노동부가 "부과과 88관광개발 골프장의 캐디 역시 근로자"라는 해석을 내린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본지 5월 18일자) (백은관)

부당 계약해지 운전기사 한달 짜 시위 아주레미콘, 불평등 계약 강요

레미콘 운전기사 120여명이 한달짜 회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4월 인권변호사를 초청해 '지입제의 문제점'을 토론했다는 등 불공정한 지입제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아주레미콘 (대표이사 백분기) 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당한 이들은 5월 7일 '아주레미콘 기사 운송협의회' (회장 김의원)를 결성해 투쟁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형식상 자신의 레미콘차를 가지고, 즉 지입제로 아주레미콘에서 일해온 독립된 '사업자'들이다. 그러나 이 '사업자'는 '빚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88년 운전기사들이 노조를 결성할 움직임을 보이자 회사 측은 이들을 모두 강제퇴직시킨 뒤 개개인에게 빚을 지고 차량을 사게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게함으로써 지입제로 전환, 운전기사들과 개별 운송계약을 맺어왔다. 전형적인 불평등 계약이었다. 6년간 일했다는 박 석(41) 씨는 "계약해지는 회사측만이 할 수 있었고 퇴직할 경우에는 차를 아무런 대가 없이 반납해야했다"며 그 계약서는 "그야말로 '노비문서였다'"고 털어놓았다. 게다가 회사 측은 운전기사들의 집단행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들과의 계약 시기를 각각 달리 하는 치밀함까지도 보였던 것이다.

회사 측이 지급하는 운반단가는 터무니없이 낮았다. 대부분의 운전기사들이 "하루 12시간씩 월 28일을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채 90만원도 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열악한 노동조건이 10년 넘게 계속되자 운전기사들은 지난해 11월 운송을 중단하고 운반비 인상과 불평등한 계약조건의 개정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사측은 "개별 사업자들의 단체행동은 계약서 위반이므로 운송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운전기사들을 압박했고 운전기사들은 이 압박에 굴복, 차후 문제를 일으켜 사측에 손해를 입힐 경우 재산의 압류처분에 응하겠다는 굴욕적인 각서를 쓰고서야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의 계약서 가운데 8개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결정을 내린 사건은 이들의 투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4월 들어 이들은 사측을 비판하는 스티커 붙이기, 인권변호사 초청간담회 등 행동을 취했지만 이것은 결국 회사 측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이어졌다.

현재 운전기사들은 법원에 '계약해지효력정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유해정)

(사측이 운송기사들에게 강요한 각서)

본인은 (중략) 차후 회사와의 레미콘 운반계약을 준수치 아니하고 불법으로 레미콘차량의 운행을 중단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중략) 본인 소유의 부동산 및 동산을 포함한 기타 타회사에서 수령하는 급여의 압류처분 뿐만 아니라 미서차량에 대한 회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순응할 것입니다. (중략) 또 회사에서 임의대로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광주에서 만난 사람들>

윤한봉·황광우의 오월정신 되찾기

정부로부터 거액의 지원을 받은 성대한 기념식, 현직 대통령의 5·18 묘역 참배, 세계적 석학들과 유명인사들이 초청된 대규모 국제행사. 5·18의 20돌을 맞는 광주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이다. 그러나 광주의 이 화려한 축제 분위기 한편에선 5·18의 체제내화와 상품화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윤한봉 민족미래연구소 소장과 황광우 민주노동당 광주시지부장을 만나 지금의 광주를 바라보는 입장을 들어봤다.

5·18 최후의 수배자였던 윤한봉 씨는 대통령과 관련된 시인단체들이 5·18을 현 정권의 정당화를 위한 정치적 수사로 전락시키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이 진정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정립하고자 한다면, 자화자찬을 늘어놓기 전에 발표 책임자와 미국의 개입 등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부터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광우 씨 역시 5·18민주화운동의 열원이었던 민주주의의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과제임을 상기시키면서, 오월정신과 현 정권의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월정신의 올바른 계승은 민주주의를 확대·심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통해 가능하며, 집권 후 보수정권임을 명백히 드러낸 김대중 정권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만 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광주를 '인권과 평화의 국제도시'로 만들자는 최근의 흐름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경계의 눈빛을 늦추지 않았다. 광주를 인권의 도시로 만들려는 일부의 흐름은 5·18을 상품화하고 탈정치화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게 두 사람의 인식이다.

윤한봉 씨는 "인권센터를 짓고 동상을 만들고 인권상을 수여한다고 해서 광주가 인권의 도시가 되는가. 진정 광주를 인권의 도시로 만들고자 한다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에 모범이 되는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인권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운동을 활발하게 벌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인권의 도시 운운하는 사람들은 인식 수준조차 천박하기 이를 데 없다"라고 지적했다.

황광우 씨 역시 "광주는 학살자를 용서해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고,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민중의 생존권을 약화시킨 그에게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인권을 이야기하는가. 광주가 진정 인권의 도시가 되고자 한다면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참가하는 동안 국가보안법 철폐 등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라도 벌여야 되지 않겠는가"라며 '죽어가는 오월정신의 복원'을 촉구했다.

언제나 그렇듯이 과거는 현재 속에서 새롭게 구성된다. 5·18을 화려한 기념행사로 성급히 매듭짓기에 앞서 그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올바르게 되새기고 미완의 과제를 해결할 때만이 오월정신의 현재화와 세계화는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김정희, 남택진, 배경내)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5월 23일(화)

제 1619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북한 찬양 홈페이지 들쭉

'백두청년회' 활동 혐의, 지태환 씨 구속

지난 4월부터 30여 개 사회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해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 대량 게시·발송되어왔다. 당시 문제의 글은 화제를 뿌렸고, '국정원의 장난이 아니냐'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들렸다.

22일 문제 내용의 게시자로 지목된 지태환 씨(35세)가 국가정보원에 의해 체포,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구속됐다.

국정원은 문제의 통신 내용을 포착한 후 '5분 대기조'를 구성하여 지난 한달간 PC방을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일 지 씨를 집견한 장경욱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지 씨가 △북비권을 행사 중이며 △연행 당시 소지하고 있던 백두청년회 홈페이지 내용이 담긴

CD에 대해 '화장실에서 우연히 주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지 씨를 불안케 하는 것은 혐의 사실 외에도 방북한 사실이 있는지, 간첩이 선실을 만난적이 있는지 등에 대해 추궁받고 있다는 점이다. 지 씨 주변인들에 따르면 지 씨는 92년 민족해방에 국전선사건에 연루되어 수배를 받은 일이 있다고 한다.

국내에선 폐쇄, 해외 서버 이용

한편 지 씨의 구속에 앞서 지난 18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민권공대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향도의 태양 김정 일 장군님을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시자"라는 제목의 글이 '백두청년회' 명의로 쓰자, 불건전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홈페이지의 웹호스팅을 맡고 있는 진보네트워크 측에 문제 글의 삭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는 "그간 이 게시물과 관련하여 여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접속자 관련 정보 제공 등의 협조 요청을 받아왔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는 시정(삭제) 요구를 받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는 "헌법상의 사상·양심·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삭제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백두청년회'는 네띠앙 등 국내 인터넷업체를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개설했으나 지난 4월 17일을 전후해 이용을 폐쇄당했다. 현재 백두청년회의 홈페이지(http://baikdoo.koolhost.com)는 미국 인터넷 업체의 서버를 이용하고 있으며, 북한 지도층의 논문과 조선노동당 등의 문건을 담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차별금지 변호사는

"우리사회의 성숙도를 비춰볼 때 단순한 게시나 배포 등의 행위만으로 자유민주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명백한 위험성을 증명하지 못하면서 기계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의 근거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정희)

한국노동단 극우망언 혼쭐

천주교인권위에 손해배상

국내 인권·사회단체들에 대해 악의적 비방과 왜곡을 일삼던 극우잡지 '한국노동단' (발행인 이도형)이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지난 12일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한국노동단)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한국노동단에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한국노동단은 97년 8월호의 '공산당이 활개치는 나라'라는 제목 아래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주장을 여과없이 수용하고 있다"거나 "공산주의자들의 삶을 미화하고 있다"는 등의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측의 기사는 진실성을 결여한 것이며, 월간지로서 다른 언론매체보다 신중한 사실 확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전국연합, 민변,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4개 단체가 '한국노동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2심 선고재판도 오는 6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등, '한국노동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줄을 잇게 될 예정이다. (이창조)

인권시평, 필자사정으로 쉽니다

<독자투고>

“에이 그놈의 노비문서, ...”

오은자(아주레미콘 운송협의회 강의원 회장 부인)

'노예문서'로 일컬어진 불평등 계약하에 갇은 불이익을 감수 해온 아주레미콘(대표이사 백문기) 운전기사 120여명이 급 기야 계약해지까지 당했다.<관련기사 본지 5월 21일자> 그 가족의 호소를 들어본다.<편집자주>

저는 아주레미콘 운송기사로 일하고 있는 한 사람의 아내 입니다. 녀석까지는 않았지만 우리 네 식구는 오순도순 별 걱정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88년) 어느날 레미콘 차량을 불하 받아야 하니 돈을 구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약금과 취득세, 등록비 등 약 오백만원요. 우리에게 큰 돈이었습니다. 천지들을 찾아다니고 이자돈을 내었지만 레미콘 차주가 된다는 희망에 마음은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일요일도 없이 노동시간은 늘어갔고 실수입은 늘지 않았습니다. 퇴근하는 남편은 마냥 피곤해 보였고 매달 닦치는 사채 이자 날은 왜 그리도 빨리 돌아오는지요? 저는 하는 수 없이 과출부로 나섰습니다.

무언가 울분에 가득한 남편은 심사가 뒤틀리면 '에이 그놈의 노비문서, 노비문서'하면서 소주로 울분을 달래곤 하였습니다. 남편이 어느날 집에 가져와 집어던진 계약서, 남편이 말하는 노비문서를 보고 저는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런 계약서가 어디에 있던 말인가 하며 자문해 보았지만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천만원을 물어주어야 하고 저렇게 하면 이천만원을 내야하니 어이없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아주산업은 1996년 이후 한번도 운반단가를 인상 해주지 않았고 IMF위기를 빙자해 모든 물가인상분과 유류비, 차량운전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을 100% 운전기사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한탕 펄 때 받는 돈이 2만 2천원으로 다른 회사와의 차이가 8천원에서 만원이니 됩니다. 그래도 당장 일자리를 던지고 나오기에는 생계도 힘들었지만 계약 내용이 너무 불리하였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운 때라 참고 또 참아 왔습니다. 그 사이 회사는 엄청난 이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1999년 운전기사 대표들이 고등분담 차원에서 유류비 인상분 절반만이라도 인상하여 줄 것을 회사측에 요구했다고 하여 주동자 4명을 '불순분자', '빨갱이가 회사 경영질서를 파괴한다'고 이들을 내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 기막힌 것은 4월 19일 시민단체의 김철준 변호사님 초청 강연을 들었다 하여 참가자 120명 전원을 계약해지한 일입니다. 회사는 근로자들과 대화를 외면한지 오래이며 회사의 아집과 독선, 회사만 잘살면 된다는 이기심 때문에 운전기사들의 가정 생활은 도탄에 빠져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야 할 지 모르고 그저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저희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시오.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16일 - 5월 22일)

1. 5·18 20주년의 빛과 그림자

5·18 20주년을 맞아 광주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저명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추모 및 기념행사가 열렸다. 그러나 망월동 묘역에서는 대통령 방문을 이유로 주변 교통을 통제하고 유족들의 참배까지 막아 불의를 빚었으며 또한 '5·18 청년동지회' 소속 회원들을 대통령 방문 시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하류동안 법에도 없는 '예비검속'을 하기도(5/19)

2. 속타는 SOFA 개정, 대검의 찬물 끼얹기

매항리 오폐 사고와 관련해 불평등한 SOFA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 91명이 미대사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여(5/17)/ 시민사회단체는 미군주둔비 분담 및 형사관할권에서 나타나는 차별문제와 관련해 SOFA에 대한 헌법소원은 물론 유엔에 제소하기로 하는 한편 명동성당에서 농성에 돌입(5/17)/ 한편 반전 평화운동가 브라이언 윌슨, 매항리 쿠나사격장에서 사용되는 폭탄이 우라늄 폭탄이라고 주장해 사실여부가 주목돼(5/16)/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해 대검 공안부는 미대사관 앞에서 시위 등 불법적인 반미활동에 대해 엄단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5/18)

3. 최초의 난민 인정

한국정부가 유엔난민조약에 가입한 지 8년만에 처음으로 카메룬 반체제 인사 타크위 씨의 정치적 망명(난민신청)을 허용하기로 결정(5/17)

4. 한국경찰, 인정사정 볼것없다

경찰이 몽골 외국인노동자를 절도용의자로 몰아 신문도중 얼굴에 총을 쏘아 증상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조차 하지 않은채 강제출국을 기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5/21)

5. 교단에 서고 싶다!

80년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교사임용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명예회복과 임용을 촉구하며 민주당사에서 단식농성 돌입(5/15)

6. 캐디, 엇갈리는 '노동자' 인정

노동부, 골프장 경기보조원 캐디 가운데 일부만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고 밝혀(5/17) ... 여성·노동단체, "유사한 조건에 있는 캐디에 대해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

7. 비정규직의 절망을 달고 일어서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서울역 집회가져(5/20)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5월 24일(수)

제 1620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의문사 시행령 인정못한다

국민연대, 정부 종합청사 후문 농성 ... 경찰 강공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 (공동대표 박정기 등, 국민연대)가 행정자치부의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을 전면거부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찰은 강제해산·연행 등 강공을 펼치고 있어 농성장 주변에는 아우성 소리와 비명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연대 회원 50여명은 23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가 마련한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 측 안을 토대로 시행령이 마련된다면

사실상 진상규명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원회의 위원장의 직급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위원회 조사관 수를 1백20명으로 늘려줄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이 외에도 △양심 선언자에 대한 보상금 증액 △관계기관이 자료 및 증거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검찰 압수수색 요청 △의문사 조사대상에 인혁당 사건 포함 등의 의견을 시행령 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국민연대 회원 50여명은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려 했으나 경찰측의 저지로 천막을 설치하지 못하고 연좌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여의지 않았다. 경찰은 오후 5시경 농성자들의 강제해산을 시도했으며 이에 저항하던 국민연대 회원 38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이들을 전경차량에 태워 불평등 방면으로 데리고 가서 내렸는데, 이들은 오후 7시경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으로 집결해 농성을 계속했다. 그러나 오후 9시경 경찰이 다시 강제해산에 나서는 등 실망이는 밤늦게까지 계속됐다.<관련기사 2면> (유해정)

양지마을 선고 연기, 변론 재개 6월 20일 재판 속행

23일로 예정되었던 양지마을 피해자 민사소송 선고재판이 갑자기 연기되고 변론이 재개된다.

민사 합의 14부 이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양지마을 사건에 대한 재판을 열고 "재판장 직권으로 선고재판을 연기하고 6월 20일 변론을 재개한다"고 선언하고 퇴장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양지마을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을 추진했던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사무국장은 "재판장이 지난 결심 재판에서 '양지마을 이사장인 노재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지 왜 국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냐'며 의문을 표했다"며 이러한 의구심 때문에 변론이 재개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양지마을을 피해자 20여명은 지난해 노재중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검찰에 노 씨의 숨겨진 재산 파악과 재산 가압류 등을 요구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절하자 노 씨가 아닌 국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유해정)

새로 나온 책

『소중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2000. 5/ 작은것이아름답다 지음/ 마가물 펴냄/ 213쪽

월간 「작은 것이 아름답다」의 김은주·박경화·이혜영 세 기자가 지난해 한해동안 전국을 누비며 깊숙이 숨어있는 작은 학교 열 곳을 찾아 연재했던 글들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나왔다. 『소중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경제논리에 밀려 자취를 감추어가고 있는 작은 학교가 시골 아이들과 선생님, 마을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찬찬히 되짚어본 책.

"학교마저 없어지곤 마을은 적막강산이제." 섬의 생김새가 양 날개를 펴고 하늘을 가르는 새 모양을 닮았다는 남해안 조도(鳥島)의 미남분교. 기자들이 그곳을 찾아갔을 때 마을사람들은 작은 학교를 통폐합한다는 정부의 발표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었다. 기자들이 다녀간 후, 들꽃 같았던 아이들, 그 아이들을 산처럼 품어주었던 미남분교에는 결국 자물쇠가 철컹 채워졌다. 이제 아이들은 아침저녁으로 배를 타고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만 930여개에 달하는 작은 학교가 문을 닫았다. 전국 초등학교의 15%에 달하는 숫자다. 그래서 『소중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 책의 제목은 더욱 역설적으로 다가온다. 아이들의 웃음과 마을공동체를 피워냈던 작은 학교가 사라져가는 현실 속에서 지은이들은 '소중한 것은 결코 사라져서는 안된다'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이 책이 작은 학교 살리기운동에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하는 것이 이들의 희망이다. (배경내)

외국대사관 유치로 집회 '원천봉쇄'

세종로 종합청사, 종로2가 삼성타워도

23일, 정부에 직접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몇 안되는 단골 집회장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은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이곳에서의 '마지막 집회'를 갖기 위해 모여든 여러 단체들의 행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꼬리를 물고 있었다. 후문 바로 앞에 위치한 현대사옥이 파나마 대사관을 유치함에 따라 23일을 마지막으로 이곳에서의 집회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점심시간, "내일부터 저 꼴을 안보게 되니 속이 다 시원하다" 사무실에서 나온 회사원이 집회를 바라보며 한마디 내뱉었다. 이 말을 들었는지 구호를 외치던 한 노동자가 혼잣말로 되뇌었다. "그럼 어디로가, 한강에 가서 정부는 각성하라고 외칠까, 누군 이라고 싶니, 니들도 당해봐."

밤, 경찰과 농성자들 사이의 마찰이 치열해졌다. 파나마 대사관 입주할 하루 앞두고 경찰이 전교조와 민주화운동정신승계국민연대의 농성을 좌절시키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그러던 와중에 또 하나 파란만장한 소식이 전해졌다. 요 며칠동안 삼성 해고자들이 집회를 벌였던 종로 2가 삼성타워에 온두라스 대사관이 유치돼 앞으로 이곳에서의 집회 역시 금지된다는 거였다. 삼성해북투 노동자들이 구속을 각오하고 25일 집회를 감행할 거라고 했다.

기업들이 너도나도 사옥 주변에서의 집회를 막기 위해 대사관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거기에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은근히 부추기는 것 같다. 그러나 기업과 정부가 맞지 않아 할 사실이 하나 있다. 이러한 집시법의 악용은 결국 정부와 기업을 향한 또 하나의 크고 강력한 집회를 만든다는 점이다. 외치는 자들의 분노는 수그러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것이다. (유해정)

포도원지역, 새로운 철거 위험지역으로

의왕시 오전동 포도원지역도 이제 철거 위험지역이다. 23일 태옥개발 소속 철거용역들은 의왕시 오전동 산 27-32번지(일명 포도원) 일부분을 강제 철거했다. 세입자 김효수 씨에 따르면, 오전 6시 40분 경 철거용역 100여 명이 포크레인 3대를 앞세워 쳐들어왔다. 이들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중 일부가 부상당했으며 단칸방에서 홀로 살던 장현택 씨(73세)는 용역들이 막무가내로 집밖으로 밀어내는 통에 넘어져 병원에 실려갔다. 용역들은 전체 대상 지역의 3분의 1가량인 20여 가구를 철거한 후 철수했다.

이 지역에서 아파트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한진조합주택은 건설사업 인가를 받기 위해 철거를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김효수 씨는 "철거 전에 세입자들의 주거대책에 대해 가옥주와 건설회사 어디로부터도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가옥주는 보증금과 이사비용을 주지 않은 채 살만큼 살았으니 나가라고만 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현재 이 지역 세입자 19가구는 포도원철거민대책위원회에 참가하면서 철거폭력과 싸우고 있다. (이주영)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정부안,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는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새로이 구성된 의문사진상규명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상을 최대한 높이고 위원장이 직접 조사파트를 관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진상규명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167명)을 확보하고 △위원회 및 조사관 구성에 우선적으로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배치하는 문제 역시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 쟁점 비교)

	국민연대	행자부
위원장	장관급	차관급
조사관 직급	2-5급의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전문위원
조사관 인원	120명	26명
조사파트 관할	위원장 포함 상임위원	사무국장
보상금	1억원 범위 내	5백만원 범위 내

(주요 쟁점 사안)

■ 관점 - 정부는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보다는 형식적인 차원에서 이를 바라보고 있다. 민간단체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진상규명의 가능성 여부가 대단히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보다 조금 나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

■ 위원장 및 조사관 신분 - 위원장을 장관급이 아닌 차관급으로 하였을 때 전체 위상 및 운영에 있어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어렵다. 더욱이 조사관들의 신분마저 예산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이다.

■ 조사파트 관할 - 진상규명 작업이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직접 조사파트를 관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사무국장이 이를 관할하도록 하고 있어 이중적인 절차만 만들고 있다.

■ 조사관 수 - 현재 유가족과 추모연대에서 집계한 의문사 사건만해도 44건. 정부의 주장대로 조사관 수를 26명에 한정한다면 1개월에 3.67건의 의문사를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새로운 의문사 사건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 말이다. 길게는 몇 십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의문사 문제를 적은 인원으로 단 며칠 동안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의문사 진상규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

■ 보상금 - 사건의 성격상 물증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양심선언을 최대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부가 보상금 액수를 5백만원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5월 25일(목)

제 1621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대사관 집회 금지는 위헌”

민주노총 헌법소원, 사회단체 불복종 운동

제발기업들이 외국대사관 근처에서 집회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집시법을 악용해 사옥 내 대사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시내 주요 장소에서의 집회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자 노동·인권·사회단체들이 집시법 개정 투쟁을 비롯해, 집시법 불복종 운동에 나설 전망이다.

24일 민주노총은 외국대사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하고 있는 집시법 11조 1항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요소를

안고 있다며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집시법 11조 1항은 '다음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며 그 대상으로 '국회의사당, 법원, 대통령관저 및 국회의장, 대법원장 관공,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또 인권·사회단체들과 함께 16대 국회에 집시법 개정안을 제

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신현준 정책국장은 "지난 98년 삼성이 본관 별관 건물에 싱가포르 대사관을 유치한 이후 각 제발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집회개최를 막기 위해 대사관 유치경쟁을 벌여 현재 서울 시내에는 집회를 개최할 장소조차 없게 된 실정"이라며 "대사관 등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주요 집회장소마다 대사관 유치

삼성그룹의 외국대사관을 유치로 21일 '삼성그룹 해고자복지 투쟁위원회'가 삼성그룹 본관과 삼성생명 건물 인근에서 벌이려던 가두행진은 금지됐다. 또한 주요 집회 장소로 이용됐던 광화문 동화빌딩 앞 역시, 지난해 7월 브루나이 대사관이 동화빌딩에 유치되면서 집회가 금지되었고, 26일부터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의 집회 역시 금지된다. 인근 현대상선 건물에 파나마대사관이 유치됐기 때문이다. 삼성 해북투에 따르면 종로2가 삼성타워에도 조만간 온두라스 대사관이 입주할 예정이어서 서울시내 주요 집회 장소의 대부분이 사라질 운명이 다.

'신고 없는 집회' 등 항의행동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인권·사회단체 역시 직접적인 불복종 행동을 강구하고 나섰다. 민중대회위원회와 사회진보연대는 오는 6월 8일 집시법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이후 상황에 따라 집회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는 불복종 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인권운동사랑방 역시 노동사회단체와 함께 집시법 개정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유해정)

행사와 동정

- 주한미군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인사 100인 시국기자회견
 - 때: 5월 25일(목) 오전 11시
 - 장소: 서울 명동성당
 - 주최: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02-757-7836)
- 민간의료보험 도입 저지, 사회보험 강화 결의대회
 - 때: 5월 25일(목) 오후 2시 30분
 - 장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 주최: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 회의(02-774-8774)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결정방식 및 행정인프라에 관한 공청회
 - 때: 5월 25일(목) 오후 2시
 - 장소: 종로성당 강당
 - 주최: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02-723-5056)
- 영등포산업선교회 후원의 날
 - 때: 5월 27일(토) 오전 11시
 - 장소: 영등포 아우토반 레스토랑
 - 주최: 영등포산업선교회(02-2633-7972)
- 토론회 - 선도를 넘어 학생자치로
 - 때: 5월 27일(토) 오후 3시 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02-708-5894)
- 한일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저지 민중행동의 날
 - 때: 5월 29일(월) 낮 12시
 - 장소: 서울 종로 일본대사관 앞
 - 주최: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대회위원회
 - 문의: 02-778-4007

접견 거부에 가혹행위까지?

국정원, '백두청년회'수사 구태제연

국가정보원의 가혹수사 시비에 또다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2일 사회단체 PC통신 게시판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백두청년회'사건의 지대 환 씨가 국정원 수사관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관련기사 본지 5월 23일자 참조). 그는 국정원의 '고문수사'에 항의하며 4일째 물조차 마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 씨를 접견한 장경욱 변호사에 따르면, 지 씨는 "지난 22일과 23일 수사관들이 무릎으로 남심을 수 차례 가격했고 명치와 가슴, 옆구리 등도 가격했으며 연일 협박을 일삼았다"고 호소했다. 장 변호사는 지 씨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미리 의사 검진을 신청해놓고 24일 의사와 함께 국정원을 방문했으나 "상부의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진과 상처에 대한 사진촬영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름을 밝히지 않는 국정원 담당자는 기자회견의 전화인터뷰에서 사실확인을 거부했다.

한편 국정원은 현재 지 씨에 대한 가족 면회마저도 금지하고 있다. 지 씨의 동생 희준(28세) 씨에 따르면, 국정원 측은 '관행상' 가족면회가 금지되지만 "도의적 차원에서 한 번만" 면회를 허용한다며 24일 면회를 시켜주었다고 한다. 희준 씨는 "단 10분간 형을 만나봤을 뿐 더 이상의 면회가 허락 안되고 있다"며 접견권을 보장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는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변호사가 추천하는 의사의 검진마저 거부한 것은 고문흔적을 보여주기 위한 술수가 아닌 지의 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김보영)

미군문제 조속해결 촉구 각계 인사 200명 선언

사회각계의 대표자급 인사들이 매항리 사격장의 폐쇄 등 주한미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종교계를 비롯해 여성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 2백여 명은 25일 오전 명동성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주한미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종교인사 2백인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은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주한미군의 역사적 과오와 범죄에 대한 미국의 공개사과 △미군의 양민학살 진상 규명 및 피해배상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전면개정 △매항리 사격장의 즉각 폐쇄 등 4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와 강만길 고려대 교수, 최영도 민변 회장, 지은희 여성단체연합 대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유혜정)

"가난하면 병원도 못 가겠네"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란

규제개혁위원회가 민간의료보험제도를 조기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의료의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단체들은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국가의 책임방기 행위"로 비난하며, 이를 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에 '연말까지 민간의료보험제도의 시행 계획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논리는 "현행 의료보험제도가 국민의 의료 욕구에 대응하지 못해 치료받을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 또한,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현행 의료보험으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특실입원비나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비용 따위의 고가 진료를 낮은 가격에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의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은 정부가 공공의료의 책임을 방기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단체대표사회의,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등 보건시민사회단체 회원 1백여 명은 25일 오후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민간 의료보험 도입 방침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조흥준 건강연대 의료보험대책위원장은 "민간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면 공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과 역할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의료서비스가 차별화 돼 결국 돈이 없어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환자는 병원조차 못 가는 사태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건모 보건의료노조 의료개혁특별위원장도 "정부가 현 의료보험 재정의 50%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국민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보험적용을 받는 진료마저 한정돼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국고부담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민 건강권에 대한 관심만 갖는다면 현 시점에서의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불필요한 논의"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집회를 마친 후 대표단을 구성해 규제개혁위원회를 항의방문했으며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앞으로 각 정당 및 관련기관을 방문해 민간의료보험 도입 계획의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유혜정)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의 올바른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농성 해단 기자회견-

- ▶ 오늘(26일) 오전 10시
 -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 농성장
- 문의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02-766-4624)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5월 27일(토)

제 1623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혜정

삼성계열사 노조설립 또 좌절

세콤 유령노조, 한발 앞서 노조설립 신고

무노조 신화를 자랑하는 삼성에서 노조결성 시도가 또 다시 좌절됐다. 삼성에스원(세콤) 노동자들은 지난 20일 노조를 결성한 후 24일 오후 4시 30분경 중구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틀에 앞서 정제불 명의 노조가 이미 강남구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였으며, 이 정

제불명의 노조에 설립필증이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쪽 노조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세콤의 한 직원은 "일부 직원들이 노조설립신고서를 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강남구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낸 노조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삼성해고자복지

투쟁위원회는 "회사가 어용노조를 만들어 민주노조 설립을 방해하려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에스원 노동자들은 유령노조가 설립된 사실조차 모른 채 회사의 회유를 피해 25일 고려대로 피신했다가 26일야 유령노조의 설립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회사는 전 직원을 비상소집해 노조설립 관련자들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25일 전례투 사무실에서 소식지를 제작하고 있던 노조간부들을 급습해 회유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관계자들이 고려대로 피신하자 회사측은 직원들을 동원해 고려대 정문 등 출입구를 지키기까지 했다.

삼성은 지난해에도 노조설립필증까지 받은 부산삼성에스원 노조간부들을 회유해 설립필증을 가진 반납하도록 한 바 있다. 또 올 1월 수원삼성전관에서는 노조설립을 계획했던 노동자들이 납치협박 등에 시달리다 회사를 그만두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수원 삼성전관은 그후에도 노사위원회의 노동자측 대표를 자격정지시키고 부당발령 하는 등 노조설립의 가능성마저 뿌리뽑고 있다. (백은관)

<논평> 불평등 한미관계, 이제는 끝내자

최근 매항리 오폐수건을 계기로 더욱 분명하게 확인된 미국의 얼굴에 한국 사회는 소스라치고 있다. 주한미군이 이 땅에 있는 내내 한 두 번 놀랐던 가슴이 아니지만 매항리의 운명에서 우리 모두의 운명을 보며, 그것을 바꿔 보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진지하다.

전국 127개 시민·사회·인권단체로 구성된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은 △주한미군의 역사적 과오와 범죄에 대한 미국의 공개사과 △미군의 양민학살 진상 규명 및 피해배상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매항리 사격장 즉각 폐쇄를 요구하며 연일 북을 두드리고 있다.

주권국가간의 평등권이냐 한 민족이 가져야 할 자결권이 허물어진 폐허에서 기승을 부려온 미국의 횡포는 한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용단폭격에 다름 아니다. 45년 이후 미군범죄는 10만 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범인이 확보되거나 도주하는 것을 망연자실 바라봐 왔던 피해자들은 기본적 인권이란 걸 입에 올릴 수도 없다. 미군이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 전국 7400만평에 이르는 땅은 중금속 덩어리로 오염돼 신음하고 있다. 이 모든 현실의 배경에는 거미줄을 치고 연일 희생자가 곁들거기를 기다리고 있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이 있다.

이제 우리 정부는 50년간의 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려야 한다. 종이 주인을 보고 우호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을 내팽개친 불평등조약에 생명과 안전을 위협당한 국민이 저항에 나서지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니 우리의 요구를 들어라'고 당당하게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 여론과 저항이야말로 그 의지를 대변해야 할 정부에게 가장 큰 협상 무기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남의 땅에 눌러앉아 단 술만 마셔온 악아빠진 자들은 그저 해보는 시늉과 결사적인 의지를 단박에 구분해 낼 것이다. 그들이 우리의 눈치를 보게 만들자. 더 이상 우리를 대상으로 작전을 수행하게 놔두지 말자.

민주화계승국민연대 농성해산 청와대, '의문사법 시행령' 전향적 검토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올바른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23일부터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농성을 벌여오던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공동대표 박정기 등, 국민연대)가 26일 농성을 해산했다. 국민연대는 "청와대측이 시행령 제정문제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보임에 따라 농성을 해산한다"고 밝혔다. 남궁진 정무수석과 신필균 시민사회비서관은 25일 국민연대 공동대표단에게 '국민연대가 내놓은 시행령 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정)

유순자 씨 집행유예 석방

법원, "정상참작하나 정당방위는 인정 안해"

상습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장애인 유순자(39, 지체 1급 뇌성마비)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관련기사 본지 5월 19일 참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재판에서 '피해자가 수시로 피고인을 구타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 씨가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건감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전화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이 발생한 만큼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여성·장애인·인권단체들은 유 씨의 석방을 환영하면서도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유순자 씨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각각 성명을 내고 '유 씨가 상습적으로 잔혹한 폭행을 당해왔고 매일매일 극심한 공포감에 시달려온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은 유 씨가 남편으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며 유 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유 씨는 지난 1월 술에 취한 남편이 또 다시 폭행을 가하자 부엌에 있던 칼로 남편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검찰은 유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유혜정)

<유순자 씨 재판 방청기>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어요"

26일 오전 9시 20분, 수원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앞에 서 있던 '군포장애인종합복지관' 셔틀버스에서도 구명운동을 함께 해왔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내려서고 있었다. '오늘 판결은 어떻게 나올까'. 불안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안은 채 110호 법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법정은 여성단체, 장애인단체, 언론사 관계자들로 발디딜 틈없이 가득 메워졌다.

유순자 씨는 여덟 번째 나오기로 되어 있었다. 앞서 나온 피고인들이 2~3년의 징역에 처해지는 것을 보니 불안감이 더해졌다. '사건번호 2000 고합77 살인'. 드디어 그녀의 이름이 불렸다. 법원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유순자 씨는 한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그 동안 마음 고생이 심했는지 그 조그마한 체격과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판사가 유순자 씨에게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냐고 묻자,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유순자 씨의 판결문은 유독 길었다. 긴 낭독 끝에 판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방청석에서는 환호성과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어요." 모두들 기쁨의 웃음과 눈물로 뒤범벅된 채 인사를 건넸다. 유순자 씨는 이렇게 자유를 되찾았다.

유순자 씨 사건은 여성 장애우들의 인권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얼마나 짓밟히고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자유를 되찾았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앞으로 가야할 길은 여전히 멀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는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모든 여성장애우가, 그리고 장애우가 비장애우와 더불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인권센터 문우정)

문규현 신부 집행유예

'금수산공전 참배'는 무죄

98년 관문점 북측지역에서 열린 8·15통일대축전 참석했다는 이유(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규현 신부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문 신부는 당시 정부의 승인을 받아 평양 장충성당 축성 10돌 기념미사 집전을 위해 북한을 방문중이었다.

26일 서울지방법원 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는 '피고인의 일거수일투족이 대담선전용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방북승인의 조건을 어겨가며 통일대축전에 참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찬양·고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김일성 시인이 안치된 금수산공전을 참배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곳이고, 종교인으로써 망인에 대한 명복을 비는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문 신부의 잠입·탈출 혐의에 대해서도 '방북목적과 경위를 살펴보면 사회의 상식적인 규범에 반하지 않고, 남북교류협력에 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정희)

"억울한 6년" 손해배상청구

정신병원 강제감금됐던 네팔인

정신병자로 몰려 6년여 동안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수용됐던 네팔인 찬드라 구마리 구릉(44) 씨가 26일 한국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8천8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92년 입국한 찬드라 씨는 서울의 한 섬유업체에서 일하던 중 93년 11월 음식값 문제로 식당 주인과 시비가 붙어 경찰에 인계됐다. 당시 경찰은 찬드라 씨가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행색이 초라한 점 등을 이유로 그를 행려병자로 판단해 정신병원에 인계했다. 정신병원 역시 경찰의 말만 믿고 찬드라 씨를 6년간 감금해왔다.

찬드라 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신원이 확인됨에 따라 풀려났다. (유혜정)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세종로 집회 사라질 위기

경찰·민간단체, '1백미터' 각축 치열

경찰이 현행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을 악용해 집회를 금지·봉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7일 SOFA개정 국민행동 주최로 열릴 예정이던 '양민학살 진상규명과 SOFA 전면개정 촉구 집회'와 민주노총 주최의 사전 결의대회가 경찰의 금지로 열리지 못했다.

경찰은 이날 국민행동의 집회장소인 미대사관 옆 시민공원과 민주노총의 집회장소인 세종문화회관 앞길에 대사관 주변 1백미터 내에 해당한다는 이유(집시법 11조)로 집회를 금지했다.

SOFA개정 국민행동의 김종섭 조지국장은 "집회가 개최될 장소는 대사관으로부터 1백미터 밖에 위치하고 있는데, 시민공원의 경계선이 1백미터 안쪽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경찰의 처사를 납득할 수 없다"며 "경찰은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집시법을 어떻게 하면 집회를 금지하는데 이용할까만 생각한다"고 분개했다.

또한 29일 세종문화회관 부근에서 일본총리 방한 규탄집회를 가진 사회단체들 역시 집시법을 들이댄 경찰에 의해 이리저리 쫓겨다녀야 했다.

집회 주최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장소를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으로 신고했으며, 신고 이후 경찰에서도 별다른 금지통보가 없었다는 것이다.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사무국 류미경 씨는 "집회 신고를 냈을 땐 경찰에서 아무런 말이 없다가, 막상 집회 당일엔 경찰이 오히려 병력을 동원해 신고된 집회장소를 점거해 버렸다"며 경찰의 태도를 비난했다. 더욱이 경찰은 집회금지 사유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시켜서 하는 일이다"며 집회장소에 진을 치고, 참가자들의 진입을 막으며 몸싸움을 벌였다. (고근예)

'다원' 철거폭력 극심

봉천동 주민 다수 부상

지난 26일 오후 5시경 재개발지역인 봉천3동에서 철거용역회사인 '다원' 소속 직원 30여 명이 철거대책위원회(철대위) 사무실을 철거하고 주민들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당시 용역들이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둘러 주민 다수가 타박상을 입고 일부는 고막이 파열되거나 잇몸이 함몰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날 용역들과 맨몸으로 맞서다 고막이 파열된 주민 허연수(40) 씨는 "집에 와보니 용역들이 대문도 때어놓고 전기도 끊고 오토바이마저 박살내놨다"고 주장했다.

▶ 윤치고(청송감호소 출소자)

- 5월 30일 오후 4시 서울지법 522호

: 청송감호소에 수감됐을 당시 교도관들의 가혹행위와 관련, 교도관들을 고소했던 윤치고 씨가 오히려 무고 혐의로 피소된 사건.

▶ 한단석 교수(국가보안법)

- 5월 30일 오후 3시 서울지법 523호

▶ 신동훈(96년 건국대 프락치사건)

- 6월 2일 오후 2시 동부지원 1호

: 96년 프락치구타사건에 연루돼 수배를 받던 중 검찰에 자진출두 후 구속됨

▶ 서준식(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 5월 31일 오후 2시 서울고법 406호

다음날(27일)도 용역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에게 "갈갈이 찢어버리겠다" "포크레인으로 다 눌러버리겠다" 등의 협박을 일삼으며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의 대문과 창문을 파손해 주민들과 곳곳에서 투석전을 벌였다. 한편, 구리시 최촌마을, 의왕시 내손동·포도원, 서울 남가좌동 지역 주민들도 용역들의 철거폭력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김보영)

총파업 예정대로

민노총, 주5일근무제 등 요구

민주노총이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을 촉구하며 오는 31일부터 나흘간의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29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총파업 투쟁계획을 재확인했다. 이번 총파업에는 전국 150여 개 노조 10만여 조합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총파업을 통해 민주노총이 내거는 3가지 요구사항은 △주5일 근무제 도입 △IMP피해 원상회복과 자동차 해외매각 재검토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및 조세·사회보장제도 개혁이다. (배경내)

인권
시경

길을 빼앗긴 서울

강내희 (중앙대 영문과 교수)

지금 막 시골에서 서울로 돌아와 이 글을 쓴다. 새벽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 도착하니 출근길로 차들이 모두 거북이 걸음이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뿌연 연무, 온통 회색의 서울. 싱그러운 5월의 아침은 아무 데도 찾을 길이 없다. 길, 어디를 가도 길이 막힌다. 아니, 서울에 길이 있던가? '도시는 길'이라는 말이 있지만 서울에 길이 있을까?

시골 태생이 서울에 처음 왔을 때 도시는 먼저 건물과 길로 다가왔다. 도로에 서면 건물이 전망을 가로막고 차를 타면 길은 시야에서 너무 빨리 사라졌다. 걸음걸이의 속도로 발 밑에 밟히던 시골길과 달리 도시의 길은 내 몸과는 무관하게 왔다다 사라져 버리곤 했다.

이런 점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자동차가 일상이 될 수밖에 없는 도시에서 길은 자기 취소의 공간이라는 사실. 자동차를 타면 길은 앞에서 급하게 다가서며 사라지는, 가능한 한 빨리 자기를 취소해버리는 공간이라는 사실. 정체 때문에 자동차가 멈춰서면 길은 원래 있던 자리에서 모습을 드러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빨리 지워 없애야 하는 지면으로만 볼 뿐이라는 사실.

하긴 도시에도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도시의 특징이 도로가 많다는 것 아닌가. 그러나 길이 많다고 걸을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한국은 사람이 다닐 길을 체계적으로 지워버린 사회니까. 서울이 가장 심한 편이지만 대부분의 도시에서 산책은 불가능하다. 가로수가 우거진 한적한 거리도 목심 내서는 안된다. 거리를 걸으며 마음에 맞는 사람과 낮은 목소리로 담소를 즐기는 것? 엄두가 나지 않는다. 길 건너편의 아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 아예 생각을 말자.

한국의 도시에서 길은 그저 빨리 지워야 없애야 할 공간으로 존재한다. 길은 통과해야 할 대상일 뿐 지체하며 멈출 곳이 아니다. 수많은 길이 있지만 길따당은 어디에도 없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셈인데, 길 없이 어떻게 사람다운 삶을 산다고 할까.

길은 신체를 가진 동물에게는 절대적이다. 우리 각자는 수십 킬로그램의 무게가 나가는 몸으로 돌아다닌다. 길을 빼앗겼다는 것은 이 몸을 둘 곳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차도는 자동차에 뺏기고, 건물벽이 육교나 지하도로 바뀐 도시에서 우리는 몸 둘 바를 모른다. '보행권'이라는 것? 이런 상황에서 말도 못 꺼낼 것 같다.

잠깐 떠났다 돌아온 서울, 내 몸을 집적처럼 굴리고 다녀야 할, 길도 없는 이 서울. 짐스럽다.

하루소식 구독료 남부 부탁드립니다.
은행어체, 기로남부 모두 가능합니다.
본남도 가능합니다.
문의 : 02-741-5363(담당: 여창조)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23일 - 5월 29일)

1. 사라지는 집회장소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 건너편 현대전자 건물에 주한 파나마 대사관 입주로 24일부터 집회불허지역으로 바뀐 / 민주노총, 대사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 1항에 대한 위헌소송 제기 (25일)

2. 의문사 시행령 인정 못한다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가 행정부의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을 전면거부하며 정부 종합청사에서 농성 (23일) / 청와대 측이 국민연대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농성해산 (26일)

3. 매향리의 운명은 우리의 운명
명동성당에서 각계인사 200여명, 미군문제 조속해결 촉구하며 시국선언 (25일) / 매향리 사격장 주변의 민간 피해 사건을 조사중인 한미 공동조사단이 피해가 미군과 무관하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24일) / 환경운동연합 조사에 따르면 매향리 일대 중금속 오염 심각, 공장지대보다 수천 배 높은 크롬성분 검출 (25일)

4. 돈 낼 능력만큼 아프라고요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의료보험제도를 조기 도입하겠다는 방침 발표에 보건의료단체 등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은 정부가 공공의료의 책임을 방기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며 반발, 민간의료 철회 촉구 집회 (25일)

5. 악화일로, 노동자 실태
비정규직여성권리찾기운동본부 실태조사에서 근로자과견별 시행 2주년 (7월 1일)을 앞두고 기업들이 과경기간 2년이 되기 전 노동자를 해고함으로써 직접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펴낸 '최근 노동동향'에서 1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와 비정규직을 포함한 1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간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따르면 지난 10년동안 한국의 최저임금은 노동자 전체 평균임금에 비해 꾸준히 줄어들었고 수혜자도 1%를 밑돌아 OECD국가 중 최저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6. '주5일근무'법안 연내추진 발표
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거쳐 올해 안에 '주5일근무'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노동계의 총파업 자체 요구 (26일),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사정위 합의를 전제한 점으로 볼 때 실현 가능성을 믿기 어렵다며 예정대로 총파업 확인, 재계는 "유감" 표시 / 주5일근무제 실시를 논의할 노사정위원회의 '근로시간 단축특위' 활동시작 (24일)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5월 31일(수)

제 1626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지문날인 끝까지 거부”

‘지문날인 거부 78+’ 굳은 결의로 출범

30일 저녁 서울 대학로의 한 음식점에서 의미 있는 모임 하나가 결성됐다. '지문날인 거부 78+'. 지문날인제도에 끝까지 불복종하기로 한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지문날인제도를 없애기 위한 조직적인 대응과 이 운동의 사회적 확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모임의 이름이 '78+'로 결정된 것도 현재 모임의 참여자가 78명에 불과하지만, 계속 규모를 확대하고 참여의 문을 열어 놓겠다는 의미. 또 이미 지문날인을 했지만 이 운동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참여 방법도 모색하기로 했다.

모임 참여자 가운데엔 대체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조차 없어 평생을 신분증 없이 살아야 하는 사람도 있

다. 따라서 다양한 불이익이 예상되지만 그마저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구 주민증의 법적 효력이 만료되는 6월 1일을 앞두고, 청년진보당 인권위원회는 30일 "지문날인 전산화를 통한 개인 정보 전산화를 반대하며 주민카드가 없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정부

유엔, "그림 원본 보존하라" 통보

'모내기' 판결 인권조약 위반여부 심사

화가 신학철 씨가 자신의 그림 '모내기'에 대해 내린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국제인권조약의 '표현의 자유'(19조)를

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지문날인제도에 본격적인 저항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부터. 지난해 7월엔 각계 1천6백여 명이 '이제도가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데다,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지문날인 거부를 선언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지문날인 제도와 지문전산화 폐지'를 요청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창조)

■ 참여 문의 : fprint@jinbo.net
02-778-4001 (홍석민)

새로 나온 책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개혁』

2000. 5/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엮음/ 521쪽

김대중 정부의 사법개혁 방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보고서가 출판됐다. 지난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한 사법개혁위원회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90년대 초부터 쟁점이 돼왔던 사법개혁안에 대한 감론을박을 총망라한다. 이 보고서는 사법개혁의 일차적인 과제로 사법구조 내에 뿌리박힌 식민지 잔재 청산과 해방 후 도입된 제도에 대한 재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형사피고인의 권리보호와 민사구제절차의 신속성,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법조인의 선발·양성제도의 현대화 등을 과제로 제시한다.

그러나 사법개혁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이중형벌이라는 비난을 받고있는 보호감호와 보안관찰처분의 '현행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배심제와 참심제 도입을 장기적 논의대상으로 유보하고 있으며, 특별검사제 도입 역시 흔쾌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 세계화를 부르짖지만 보고서 어디에도 국제인권법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현 사법구조의 전근대성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미한 개선책과 기약할 수 없는 장기적 과제들을 열거한데 지나지 않아 사법개혁의 근본적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김보영)

위반하고 있다며 지난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 사건을 제소한 것과 관련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우리 정부에 '모내기'를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통보해왔다.

신 씨의 대리인 조용환 변호사는 30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29일 서한을 보내 "신 씨의 그림원본을 폐기하지 말 것"과 6개월 이내에 이번 사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힐 것을 우리정부에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는 '모내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인권조약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 씨는 지난 87년 종성현 모내기행복해하는 북측 농부의 모습과 외세 문화청산에 허리가 휘는 남측 농부의 모습을 대비한 그림 '모내기'를 그렸다가 국가보안법 위반(교무·찬양 등)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으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신 씨는 지난 4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이 사건을 제소했다. (유해정)

돈때문에 산재환자 거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앞 항의집회 열려

큰 병원들이 수익에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 환자들의 진료를 거부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산재추방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산재환자 고통 외면하는 연대세브란스병원 규탄과 요양관리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11시경 세브란스 병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 1일 세브란스 병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담당병원 해제'를 신청하고 당시 입원 환자 13명을 비롯해 2백여 명에 달하는 산재 환자들의 진료를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산업재해 환자를 치료하지 않는 3차 진료기관은 서울대학병원·원자력병원·현대중앙병원·삼성의료원·강남성모병원에 연대 세브란스병원까지 모두 6개로 늘어났다. 서울대학병원 등 5개 병원은 산재요양담당병원으로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중의료연합의 이재준 씨는 "입원실 환자가 빨리 교체돼야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병원들이 장기입원 치료가 잦은 산재 환자들을 기피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포기한 부도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산재추방운동연합의 장지혜 사무국장도 "근로복지공단이 요구하는 산재환자의 요양처리 절차가 너무 복잡한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연대 세브란스 병원의 산재요양담당 병원해제 철회 △모든 3차 진료기관을 산재요양담당 병원으로 법제화할 것 △산재보험수가의 현실화 △요양과정의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세브란스 병원 및 근로복지공단 측에 촉구했다. [이주영]

김삼석 씨 보안관찰법 위반 벌금 50만원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삼석(남매간첩 사건) 씨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3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김창희)는 "피고인이 지난 1월 보안관찰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으나 출소 뒤 실정법과 절차를 어긴 것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출소 후 신고를 거부한 것에 대해 지난 1월 대법원은 '정치 및 의사표현의 자유에 속한 행위'라며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고 말하고, "사법부가 이런 모순된 판결을 내린 것은 결국 법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상고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3월 보안관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현행 보안관찰법에 따르면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 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보안관찰법 제6조)하여야 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김정희]

과녁은 신자유주의 반대로

- 민주노총 5월 총파업에 부쳐 -

김혜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5월 총파업의 깃발이 올랐다.

98년 정리해고제철폐, 99년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반대에 이어, '주40시간쟁취, 구조조정 중단과 IMF피해원상회복,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내건 2000년 5월 총파업 역시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이 세 가지는 구체항목에 해당되는 과제이다. 이 중 하나라도 쟁취된다면 그 자체로 획기적인 성과일 것이고, 특히 법정노동시간단축은 경제위기 이후 노동층이 끊임없이 제기해 왔던 공세적 슬로건으로서 그 의미는 지대하다.

그러나 국민들의 지지를 얻은 총파업, 국회의원조차 84%가 지지하는 주5일 근무제, 적극적인 시민단체의 참여, 민주노총 지도부의 발빠른 대화채널 가동 등으로 어느 때보다 노동시간단축의 실현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보수언론들도 정부가 '연내 입법화'를 표명했으니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제고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을 정도로 5월 총파업은 '주40시간'에만 몰려있다. 비록 구조조정 중단이라는 과제가 한 두번의 총파업으로 쟁취될 수 없다하더라도 주40시간이라는 화살은 그 과녁이 신자유주의 반대임을 명지(明知)해야 할 때다.

특히, 지금은 법정노동시간단축이 곧바로 현장 노동자의 열악한 상태를 개선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현실이다. 노동강도의 강화(작업속도의 증대 등), 변형근로제의 확대 등 노동의 유연화 공격으로 자본측은 언제든지 시간단축의 효과를 무(無)로 돌리고자 할 것이고, 경제위기 이후 이미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하락할대로 하락한 상태이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조직노동자들은 물론, 1일 8시간은 고사하고 월1회의 휴일도 없는 유통 서비스직 노동자들, 언제 정리해고될지 모를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법정노동시간단축은 정서적으로는 공감하나, 절실한 요구로 와닿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법정노동시간이 단축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시간단축의 실질적 효과를 둘러싸고 현장투쟁이 이어져야 노동시간단축 투쟁의 의미가 산다.

이번 총파업은 일단협 사업장의 시기집중을 주요 동력으로 하고 있어서 3대 과제를 쟁취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대중조직의 규모가 거대화, 안정화, 체계화되면 될수록 투쟁 역시 불가피하게 기획, 관리, 통제되어 투쟁의 생명인 역동성이 제약, 억압될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구조조정 공격에 대한 투쟁은 아래로부터 묶고, 노동시간단축은 위에서부터 그 효과를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투쟁으로 진행함으로써 현장을 중심으로 노동시간단축과 구조조정반대 투쟁이 맞물려 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인권하루소식

2000년 6월

(제1626호 ~ 제1646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6월 1일(목)

제 1627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구 주민증 효력 오늘부터 소멸

정부, 지문날인 거부자들 불이익 “대책없다”

오늘부터 구 주민등록증의 법적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지문날인을 거부하며 새 주민증 갱신을 거부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행정자치부 주민과의 이아무개 씨는 31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새 주민증을 발급받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하게 과태료를 물리거나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증이 없어 입계될 피해와 관련해서는 “대체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마저 없다면 생활에서 겪게되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할 뿐 별도의 대책이 마련돼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와 관련해 30일 결성된 지문날인 거부자 모임 ‘지문날인거부 78+’는 3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무대책과 무성의한 태도를 규탄했다. ‘지문날인거부 78+’는 새 주민증을 발급받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태해결에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단지 주민증이 없다는 이유로 공공서비스가 부정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가 거부되는 사례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새 주민증 수령 및 재발급 거부운동과 주민증 사용안하기 운동 등을 통해 지문날인 제도의 문제점을 확산시키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증이 없어 발생하게 될 피해는 △운전면허 발급, 혼인신고, 예비군 훈련 참가 불가능 등 행정관련 처리의

불이익 △토의시행, 사법고시 등 국가공인 시험 기회 박탈 △통장개설, 수표바꿈, 핸드폰 해지 등 신분확인을 바탕으로 둔 일상 행위 불가능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 등이다.

“지문정보 전산화가 위험하다!”

서울대생, 지문날인 거부 집회

한편 서울대 지문날인 거부자 모임(임시대표 오석영, 전기공학부 4년)도 3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지문날인과 지문정보 전산화를 의무화하고 있는 새 주민증은 이전 주민

증보다 더 큰 인권침해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 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대부분의 나라가 국민기본권,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지문날인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가 지문날인을 고집하는 이유 △지문정보를 전산화하는 이유 △지문정보를 소유하게되는 기관 및 이 기관에 대한 감시 제도 등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유해정)

<알려드립니다>
5월 31일자 기사 중 신학철 씨의 그림 모네가 “풍성한 모네기에 행복해하는 북측 농부의 모습과 외세문화청 산에 허리가 휘는 남측 농부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다”는 설명은 신 씨의 설명이 아닌 김철축 주장입니다.

행사와 동정

- <심포지엄> 남북한 주민의 통일 의식 동시비교조사
 - 때: 6월 1일(목) 오후 3시
 - 곳: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
 - 주최: 사단법인 좋은 벗들(02-587-8996)
-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메카시의 신병인도와 SOFA 개정 촉구 집회
 - 때: 6월 2일(금) 오후 3시
 - 곳: 서울지방법원 앞
 - 주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02-744-1211)
- 전국 비정규직·영세사업장·여성 노동자 대회
 - 때: 6월 3일(토) 오후 2시 30분
 - 곳: 서울 종묘공원
 - 주최: 민주노총 서울본부(02-929-1663)
- 아내구타 가정내 자녀폭력의 실태 및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 때: 6월 9일(금) 오후 2시
 - 곳: 서울 종로성당 대강당
 - 주최: 서울 여성의 전화(02-2272-2161)
- 11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 때: 6월 10일(토) 오후 1시 30분
 - 곳: 서울 종묘공원
 - 주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행사 준비위(02-766-4624)
-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 민주노총 총파업 문화제 - 6월 3일(토) 오후 6시 30분, 서울 명동성당
 - 전국해고자 노동자대회 - 6월 4일(일) 낮 12시, 서울 대학교
 - 총파업 승리 전국노동자대회 - 6월 4일(일) 오후 2시, 서울 대학교

이달의 인권하루소식 (2000년 5월)

흐름과 쟁점

1. SOFA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매항리 오폐수처리장 불공정한 SOFA개정 촉구 움직임 불붙어... 대학생들의 미대사관 앞 기습시위에 이어 시민사회단체가 농성에 돌입했으며 각계인사 2백여명은 미군문제 조속해결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도. 그런데 한국정부와 미국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

2. 경찰 집시법 개악 시도, 기업 대사관 유치 집회 봉쇄

노동절 '화염병 시위'와 관련해 경찰,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특정인의 집회 참가 배제' 등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정 계획 밝혀 (5/12). 이에 따라 축협 노조의 집회가 불허되고 민주노총의 집회 신청이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접수되는 사태 발생 (5/14) / 한편, 재벌기업들도 회사 앞 집회를 막기 위해 너도나도 자기 빌딩에 대사관 유치.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 현대상선 건물에 대사관 유치설이 나돌기도. 이에 민주노총은 대사관 인근 집회 금지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시민사회단체 역시 "집시법 개정투쟁 불사" 입장 (5/25)

3. 광주항쟁 20주년, 누구를 위한 5·18 기념식?

광주항쟁 20주년 기념식이 열린 광주 망월동 묘역. 대통령 방문을 이유로 주변을 통제해 유족들의 참배까지 막았으며 또 '5·18 청년동지회' 소속 회원들은 대통령 방문 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예비검속"되는 수모를 겪기도. 과연 누구를 위한 5·18 기념식인지...

4. 구 주민증 법적효력 만료, '지문날인 거부'에 정부 무대책

6월 1일부터 구 주민증의 법적효력이 소멸됨에 따라 지문날인 거부자들, '지문날인 거부 78+' 모임 결성해 지속적 싸움 결의. 한편 행사부는 "신분증 없어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라며 무성의로 일관 (5/31)

5. 어디가도 서러운 비정규직

7월 1일 근로자파견법 시행 2주년 앞두고 기업들이 파견기간 2년이 되기 전 노동자를 해고함으로써 직접 고용을 회피하고 있어. 또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 이에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시위 (5/20)

6. 국민연대, 정부의 '의문사 시행령 안' 전면 거부 농성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 행사부의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이 '의문사 진상규명 담보 못한다'며 농성에 돌입했으나 청와대 측이 국민연대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농성해산 (5/26)

7. 민간의료보험 도입, "공공의료 책임 회피"

규제개혁위원회가 민간의료보험제도를 조기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보건의료단체 등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은 정부가 공공의료의 책임을 방기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며 반발, 민간의료 철회 촉구 집회 (5/25)

인권시평

- 다시 인권을 생각하다 (이재훈 한겨레 기자, 5/2)
- 네팔여인 (강금실 변호사, 5/16)
- 길을 빼앗긴 사람들 (강내희 중앙대 영문과 교수, 5/30)

논평

- 기본적 권리를 줄자로 재는 나라 (4/1)
- 최저임금제도를 살려라 (5/13)
- 인권의 도시는 없다 (5/21)
- 불평등한 한미관계, 이제는 끝내자 (5/27)

어린이날 특집 기획

- 함께 살아가야 할 아이들 (5/4)
- 학교에 가고 싶어요 (5/4)
- 아이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는 사회 (5/5)

인터뷰

- "일한 만큼의 대가를 원한다" - 임창 문화사 노조위원장 강원섭 씨 (5/17)
- 광주에서 만난 사람들 - 윤한봉 · 황광우의 오월정신 되찾기 (5/21)

현장보고

- 노점상, 없는 설움, 빼앗긴 삶터 (5/4)
- 철거지역 폭력 난무 (5/13)
- 오토론, 원적북직으로의 한걸음 (5/18)
- 누구를 위한 5·18인가? (5/19)
- '인권의 도시'에 '예비검속'? (5/19)

주요판결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주고 인권위원회에 2천만원 손해배상 확정 (대법원 제 3부) (5/23)
- 상습폭력 남편 살해 장애인 유순자 씨, 집행유예 석방(수원지법 형사 11부) (5/27)

인권일지

1. 한 세기를 싸워도 어려운 노동조건, 110주년 노동절에 생존권 보장 노동자 시위 잇따라/ 파업이 현재진행형인 사업장만 20여개 (5/25)
2. 대검찰청, 정보공개 재판중인 '공안출조사 동향파악 지침' 파기 지시. 시민단체 "국가의 불법행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했다"며 비난 (5/2)
3. 벤처기업 멀티데이다, 병역특례자라는 노조원의 신분 약점삼아 노동쟁의 있자 병역업체 철회 신청. 새간 향의 빗발치자 단체교섭에 나서 (5/4)
4. 풀러난 버마 민주화활동가 사린, 법무부, 난민신청 공식 접수 (5/10)
5. 철도청, 철도노조 민주화 요구하는 노동자 증정계, 징계자 철담 고공농성 (5/10)
6. 정신지체장애인, 직장 상사에게 8개월간 성폭행 당해 (5/11)
7. 문제많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민사회단체 보완촉구하며 범국민운동 돌입 (5/12)
8. 전태له우 노동자, 수도권 해고 사업장에 대한 집중투쟁 선포 (5/13)
9. 집단체벌 반던 여고생 사망. '체벌없는 학교만들기' 정부 노력 질실 (5/16)
10. 민주화운동 관련 교사미임용자, 명예회복과 임용을 촉구하며 민주당사에서 단식농성 돌입 (5/16)
11. 고려운수 택시 노동자 "이대론 못산다" 분신 기도, 완전월급제 투쟁 다시 불붙어 (5/16)
12. 노동부, 일부 캐디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해석 내려. 여성·노동단체 "도대체 기준이 뭐냐"며 반발 (5/18)
13. 검찰, 미대사관 주변 시위 등 불법 반미 활동 "엄단조처" 발표 (5/19)
14. '노에생활' 아주레미콘 운전기사, 부당한 계약해지에 한 달째 시위 (5/21)
15. 극우언론으로 승승장구하던 한국노동단에 대법원 패소판결, "천주교인권위원회에 2천만원 배상하라" (5/23)
16. 북한 찬양하는 대량메일로 사회단체 홈페이지 들쭉. 국정원, '백두청년회' 지태환 씨를 용의자로 구속 (5/23) / 수사관 가혹행위 의혹제기 (5/26)
17. 상습폭력 남편을 살해한 장애인 유순자 씨, 집행유예 석방 (5/26)
18. 98년 북에서 열린 통일 대축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문규현 신부에게 집행유예 선고 (5/27)
19. 삼성계열사 노조설립 좌절, 세콤, 유령노조 앞세워 노조결성 저지 (5/27)
20. '다원' 용역, 봉천 3동 철대위 사무실 철거하고 주민 폭행 물의 (5/30)
21. 유엔 인권이사회, 신학철 씨 그림 '모내기' '일본 유지' 통보 (5/30)
22.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수익에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로 산재환자 내쳐. 노동·산재단체 항의집회 개최 (5/30)

나라밖 소식

- 제네바 인권소식-제 56차 유엔 인권위원회 폐막 (5/3)
- 무미아, 반인종차별 운동의 들불로-6천명 뉴욕집회, 제심 촉구 (5/10)
- 푸에르토리코에도 '매항리'가 있다-미군 폭력훈련장 우리농단 실험, 들불은 주민 저항 (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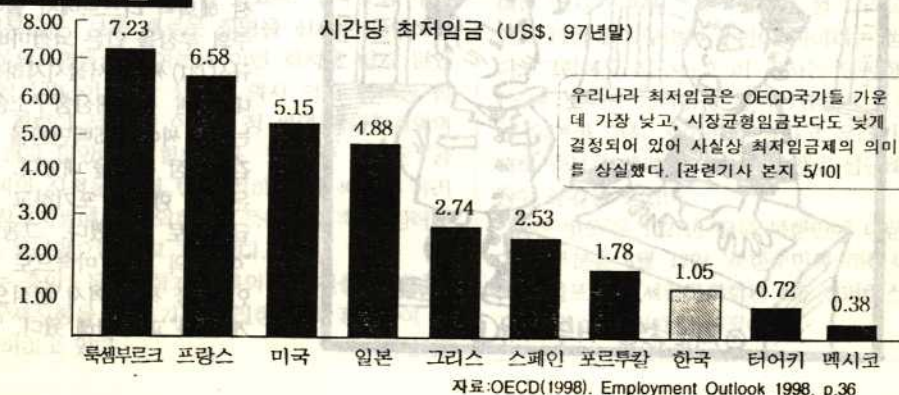
기고

- "이산가족된 우리가족" (이은주, 전 용산차량사무소 부지부장 김정민 씨 부인, 5/17)
- "에이 그들의 노비문서,..." (오은자, 아주레미콘 운송협의회 강의원 회장 부인, 5/23)
-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어요" - 유순자 씨 재판 방청기 (문우정,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5/27)
- 과녁은 신자유주의 반대로-총파업에 부쳐 (김혜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5/31)

인권간행물

- 현대사상과 인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엮음, 5/3)
- 21세기 법과 민주주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엮음, 5/10)
- 시민이 재판을 (박홍규, 5/17)
- 소중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작은것이 아름답다 엮음, 5/24)
-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개혁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엮음, 5/31)

통계로 보는 인권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공익근무요원의 권리찾기

공무상 상해 인정 및 위자료 청구 소송

공무상 상해 인정을 둘러싼 구청과 공익근무요원간의 다툼이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랐다.

사건의 주인공은 서울시 서초구청에서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으로 2년째 복무중인 김창주(25) 씨. 김 씨는 소집이후 해운 무리한 작업으로 무릎연골이 파열되었다며 올 4월 서초구청을 상대로 '공무상 상해 인정 및 치료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김 씨가 오른쪽 무릎에 통증을 느낀 것은 지난해 8월이었다. 공익요원 근무 전 아무 이상도 없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를 방치하던 김 씨는 통증이 계속되자 10월에야 병원을 찾았다. 당시 김 씨를 진료한 강남성모 병원 정형외과측은 "등산이나 무리한 작업을 계속하게 되면 부위에 무리를 주게되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며

'오른쪽 슬관절 반월상 연골파열' 진단을 내렸고, 충분한 휴식과 수술을 권유했다. <관련기사 본지 1월 21일>

맨몸으로 오르기도 힘든 산에 백 킬로그램이 넘는 전화부스 올리기, 산사태 복구를 위한 토사 운반, 산 정상에 수년생 전나무 옮기기 등의 작업을 수개월 동안 계속해왔던 김 씨는 이러한 작업이 발병원인이라 생각하고 구청측에 공무상 상해로 인정해 줄 것과 치료비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구청측은 "공무상 상해로 인정해야한다"는 구청 자문 변호사들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근무 중 무릎 부상을 본 확실한 목격자와 사고발생 보고가 없고 △김 씨의 공상치료비를 지급할 경우 다른 공익근무요원에게도 공상치료비를 지급해야한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상 상해인정을 거부했고, 결

국 김 씨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지난 5월 30일에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씨는 "무릎 연골 파열은 무리한 공무가 가져온 당연한 결과"임을 주장했다. 또한 구청측이 공무상 상해를 인정하지 않아 수술비 등의 치료비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 있으며, 수술을 위해 사용한 병가기간 4개월을 연장복무 해야 할 처지임을 호소했다.

김 씨의 주장에 대해 구청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청 녹지계의 오대근 계장은 1일 본지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김 씨와 같은 일을 했지만 연골파손 등의 부상을 입은 경우가 없었다"며 "출퇴근이 가능한 공익근무요원의 특성상 다른 곳에서 입은 부상을 공무상 상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의무 복무자로서 공익근무요원과 현역병간의 제도적 차별문제와 근무상의 약조건을 개선하고 싶다"는 김 씨는 이번 재판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기대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7월 4일에 열린다. (유혜정)

리프트 추락 사고 장애인 승소

지하철 리프트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장애인이 서울시지하철공사로부터 5백만원의 피해보상금을 받게됐다.

지난 5월 8일 서울지법 민사39단독 김동윤 판사는 지난해 6월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리프트에서 떨어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뇌성마비 장애인 이규식(31) 씨가 서울시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사는 이 씨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공사측은 1일 항소를 포기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공사측은 "이 씨의 조작 미숙으로 일어난 사고인 만큼 책임 역시 전적으로 이 씨에게 있다"고 주장해 왔다. (유혜정)

만화사랑방

이동수



회사에선 왕따, 근로복지공단도 외면

LG에서 따돌리다 해고, 산재신청도 기각

회사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따돌림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한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낸 산재신청이 지난 5월 26일 기각되었다.

LG전자에서 11년간 컴퓨터 엔지니어로 근무해온 정국정(37) 씨는 지난해부터 회사 내에서 조직적인 따돌림을 받고 상사에게 폭행까지 당했다. 사측은 지난해 5월 정 씨의 동료들에게 '정 씨의 아이디(ID)가 곧 회수될 예정'이라며 '아이디와 PC 등 회사비품을 빌려주면 책임을 묻겠다'는 메일을 발송하는 등 정 씨에 대한 따돌림을 조장했으며, 급기야 올 1월 정 씨를 해고하기에 이르렀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외근지에서 내근직으로 전직된 이후 사측은 책상조차 뺏고 창가에 서서 일하게 했다"며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반도 늘 혼자 먹었다"고 토로했다. 정 씨 주변 동료들에 의하면 집단따돌림의 발단은 97년 사내 감사 때 정 씨가 비리관련자를 제보한 일이고, 연이어 정 씨가 인사승진에서 누락된 일에 대해 항의하자 더욱 불거졌다고 한다. 이듬을 밝힐 수 없는 정 씨의 한 동료는 "정 씨는 후배나 고객들에게 평가가 좋았던 사람이었다"며 "우리들은 피해가 있을까봐 정 씨에 대한 사측의 부당한 대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부당전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정국정 씨는 조사도중 졸도해 보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당시 강남병원 담당의사는 "적응장애와 우울장애로 환경적인 여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에 정 씨는 12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측은 "관련서류가 부족하다", "산재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폐쇄정신병동에서 4개월간 입원해야 하는데 그래도 신청하겠다", "지방노동위의 결정을 지켜본 후에 하자" 등의 이유로 번번이 정 씨의 산재신청을 반려하다가 결국에는 기각 처리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 담당자는 "산재신청을 지연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심사가 공정했다"고 강조하며 "정 씨의 사례는 업무상 재해가 아닌 성격장애"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지난 29일 민주노총은 판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공단측에 질의서를 보냈다. 민주노총 주영미 산업안전부장은 "보통 새로운 질병을 산재로 판단해야 할 경우 자문의사협의회를 여는데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일방 선정한 의사 역시 업무상 질병에 자부한 경험이 적을 뿐 아니라 정 씨의 담당주치의의 소견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또한 주 부장은 "공단 측이 정 씨의 신청을 여러 번 반려하고 정 씨에게 유리한 서류를 참고자료에서 제외한 것 등은 LG 측의 강령한 로비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 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측의 부당전출과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각각 기각 처리한 것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김보영)

통일, 10년 이내? 30년 이내?

'좋은 벗들', 남북한 주민 통일의식조사

사단법인 '좋은 벗들'(이사장 법륜)은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진 심포지움을 통해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비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 조사는 그동안 '좋은 벗들'이 중국의 북한 접경지역에서 수집한 탈북 북한 주민 1,027명에 대한 설문조사 중 통일 관련 부분과 남한 주민 5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비교해놓은 것이다.

설문은 모두 16문항, △남한의 대북한 지원 인식(2) △남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3) △통일에 대한 인식(3) △통일의 전망과 과제(8)로 나누어져 있다.

주요한 내용을 보면 ▶남한의 대북한 지원에 38.8%(남)와 48.8%(북)가 만족하고 있다. ▶남북한 사회의 이질성에 대해 남한 주민이 "발전된 남한 경제와 낙후된 북한 경제"(41.6%)라고 대답한 데 비해 북한주민은 "자본주의·사회주의"(북-40.7%)라는 체제적 측면을 강조했다. ▶남한사회의 우월성은 "발달된 경제력"이라는 점에서 일치했지만 ▶북한사회의 우월성에 대해서는 "군사력"(남-41.6%)과 "주체사상"(남-27%), "자연자원"(북-38.9%)과 "사회복지"(북-24.5%)로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10년 이내"(남-58.4%), "30년 이내"(북-64.4%)로 큰 차이를 보여 통일에 대한 남한 주민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듯했다. ▶통일에서 오는 개인적 이점은 "전쟁공포 없는 안정된 생활"(남-35.8%), "생활수준 개선"(북-44%)으로, ▶통일 후 어려움은 "사상의 차이"(남-37.6% /북-42.2%)와 "경제력의 차이"(남-36% /북-56.4%)로 나타나 경제적 통합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드러나 있다. ▶통일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문제는 "경제교류"(남-34.6%), "미군철수"(북-66.1%)로 큰 인식 차이가 있으며, ▶우선돼야 할 교류는 "이산가족 만남"(남-38.6%), "경제협력"(북-56.2%)로 나타나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실감케 했다.

이날 토론자들과 청중석에서는 이 설문조사의 문제점이 여러번 지적되었다. 즉 탈북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는 정상회담 발표 전에 이루어진 데 대해 남한 주민에 대한 조사는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북한주민'은 현재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라는 점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는 일정한 가치가 있다는 데 모두가 동의하는 분위기였으며 조사결과에 나타난 엄연한 인식 차이를 인정하고 우리가 북한 주민에 대해 충분한 배려를 가지고 통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었다.

'좋은 벗들'은 1027명 탈북 북한민에 대한 설문조사 나머지 부분을 6월 17일 '북한주민의 북한사회 인식조사'라는 심포지움(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 홀: 오전 10시 30분)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류은숙)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6월 2일(금)

호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속보> 17:00 현재

매향리 폭격재개, 주민 위원장 연행

전경, 매향리 진입로에 바리케이드 설치

미군이 매향리 사격장에서의 폭격훈련을 재개했다.

2일 오전 11시 40분 경 미군은 한 동안 중단했던 사격훈련을 재개해 주민들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 당시 주민들은 '사격훈련 재개방침 및 국방부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중 미군의 사격훈련을 목격했으며, 주민 대책위원장 전만규 씨가 사격장 안으로 들어가 사격신호용 깃발을 찢어버리기도 했다. 경찰은 전만규 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화성경찰서로 이송했다. 현재 화성경찰서는 전경들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고 있으며, 전 씨에 대한 일체의 면회가 허락되지 않고 있다.

한편, 경찰은 매향리로 들어가는 길목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전투경찰을 배치해 검문태세에 들어갔다.

미군의 사격재개와 전만규 위원장의 체포 소식을 접한 사회단체들은 오늘 밤 10시 명동성당 농성장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 또 'SOFA개정 국민행동' 등 사회단체들은 오는 6일 오후 1시 매향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했다. 집회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6일 오전 10시 신도림역(대일학원 쪽)으로 가면 된다.

매향리 상황에 대한 속보는 www.jatong.org (자통협 홈페이지) 참고.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6월 3일(토)

제 1628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국정원 고문수사 딜미잡혀

지태환씨 갈비뼈 골절·성기 부상 확인

이른바 '백두청년회' 사건으로 구속된 지태환 씨의 몸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의 가혹행위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상처들이 확인됐다(관련기사 본지 5월 26일자 참조).

지 씨의 주장에 따르면, 국정원 수사관들은 지난 5월 22일 지 씨가 진술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5분간 수막으로 가슴, 명치, 옆구리 등을 수차례 가격하고, 무릎으로 성기부분을 걷어찼다.

다음날에도 같은 이유로 머리채와 목살을 잡아 흔들고, 목뒤와 뺨을 수차례 때렸다.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서울지법 합의3부(김인욱판사)는 지 씨가 제출한 증거보전청구를 받아들여 지 씨에 대한 신체검사 및 검증을 실시했다. 신체검증 결과 지 씨의 성기에서는 멍과 혈흔이 발견되었으며, 감정인으로 참석한 중앙병원 의사는 "지 씨의 상처

가 외부의 가격에 의해 생긴 것일 수 있으며, 자해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29일 서울구치소에 입소한 지 씨는 다음날인 30일 입소절차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았으며, X-RAY 촬영 결과 9, 10번 갈비뼈가 골절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 씨의 변호인인 장경욱 변호사에 따르면, 구치소 측은 지 씨의 담당검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 씨는 오늘(3일) 입동원 국정원 원장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다.

한편 장 변호사는 국정원측이 변호인의 구속피의자에 대한 점견교통권을 침해했다며 29일 서울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 25일 지 씨를 진료하기 위해 한의사를 대동하고 국정원에 수진신청을 했으나 국정원이 지정한 의사와 동시 입회하지 않은 한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당한 바 있다. (김정희)

<논평> '지문날인 거부 78+'에 대한 기대

지문날인제도에 끝까지 불복종할 것을 결의한 모임, 이를하여 '지문날인 거부 78+'가 최근 결성됐다. 지난 수십 년간 열 손가락 지문을 군소리 없이 국가에 내맡겨온 우리 자신을 반성하며, 국가권력의 통제시스템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이제 첫발을 내디딘 지문날인 불복종운동은 여느 불복종운동보다도 지난한 싸움이 될 것이다. 우선 지문날인 거부자들 앞에는 수많은 유혹이 지뢰밭처럼 깔려 있다. 지문날인을 거부함으로써 주민증 없이 살아야 하는 한 그들은 일상 곳곳에서 다양한 불이익과 불편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고시에 응시할 때나 통장을 만들 때, 여권·비자를 신청할 때나 투표권을 행사하려 할 때 등, 신분증에 대한 유혹은 매순간 포기와 타협을 요구할 것이며, 거부자들은 이를 견뎌내야 하는 것이다. 국가권력 또한 '무엇보다도 손쉽게 국민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험난한 길을 가야하지만, 그만큼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역사적 소임은 막중하다. 문명국 어디서든 찾아보기 힘든 지문날인제도는 언젠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져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든든한 실재로 존재해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거부자들이다. 아직 미미한 규모지만, 바라건대 100+, 1000+, 나아가 10000+ 이상으로 모임이 확대됨으로써 강력하고 대중적인 불복종운동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또 이미 지문날인을 했지만 이 운동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도 참여의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 정부는 지문날인 거부자들에 대해 철저한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바로 정부에게 있음을 확인해 둔다. 끝으로 헌법재판소에 요청한다. 현재 '지문날인제도와 지문전산화 폐지'를 요청한 헌법소원이 계류중이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고도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매향리로 집결하자!"

오는 6일 인간띠잇기 행사

<속보> 2일 매향리 미군사격장에서 폭격훈련이 재개되자, 사회단체들은 이날 밤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오는 6일 오후 1시 매향리에서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는 '인간띠잇기' 행사를 열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매향리 사격장 폐쇄투쟁' 사상 최대규모의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편 : 6일 오전 10시, 서울 신도림역(대일학원쪽)에서 전세버스 출발)

한편 2일 폭격훈련에 항의하다 전만규 주민 대책위원장이 경찰에 연행되자, 주민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은 3일 오전 10시 화성경찰서 앞에서 전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갖기로 했다(관련기사 2면). (이창조)

<현장> 폭격재개된 매항리 표정

주민들 "한판 붙겠다"...13년만에 마을이장 다 모여

"풀려났어? 안 풀어주기만 해봐. 내가 오늘밤에 이것들(철조망) 다 뜯어버릴 거야. 국민들을 잘 살게 해 줄 생각은 안하고... 다 지옥 갈 줄 알아. 내가 죽을 때 다 데리고 갈 꺼야" 태어나서 단 한번도 매항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최 노인(84)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지 몸을 부르르 떨었다. 꼭 찾아올 거라 믿었던 평화는 이번에도 찾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국방부와 미군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8일 발생한 매항리 주민들의 피해는 미군의 오폭사고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혀 매항리 사람들을 집단적인 거짓말쟁이로 매도했고, 싸움을 이끌었던 전만규 위원장은 '폭격신호를 내리는 미군의 것 발을 찢어버린 죄'로 경찰에 연행돼 유치장안에 갇힌 신세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폭격은 다시 시작됐다.

2일 오전 8시 50분경. "두두두두두"하는 굉음소리와 함께 미군의 헬기 한 대가 쿠나 사격장 주변을 상회하더니 폭격연습을 알리는 주황색기가 울렸다. 그리고 세 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40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주민들이 사격장 앞에서 미군과 정부의 조사결과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자 A-10기 2대가 날라 와 보란 듯이 폭격을 재개했다. "캉, 캉". 연이은 폭격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가 치솟았다. 처음 보는 광경에 놀란 기자들은 차 뒤로 몸을 숨겼고 주민들은 경악스러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순간 전만규 위원장이 미군 사격장 안으로 몸을 날려 사격을 알리는 주황색기를 찢어버렸다. 당황한 경찰은 잠시 머뭇거리다 전 위원장을 연행했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주민들이 손쓸 겨를도 없이 경찰차에 실려 화성경찰서로 이송됐다.

그렇게 전 위원장이 잡혀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오후 5시경부터 대책위 사무실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8시 무렵엔 40여 명에 달하는 마을 사람들로 대책위 사무실이 가득했다. 80년대 후반 한 차례 싸움이 벌어졌던 이후 13년만에 처음으로 10개 부락의 대표가 모두 모인 자리였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전 씨한테 다 맡겨왔어" "그러니까 경찰들이 전 씨만 잡아가면 다 끝나는지 알지. 이참에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해" "테비(텔레비전)고 신문이고 매일 매항리 매항리 하던데 왜 끝이 안나는가 모르겠네. 정부 새끼들이 죽일 놈이여. 지네 국민들은 매일 죽겠네 하며 사는데, 뭐라고? 미군폭격이랑 주민피해량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씨발" "참말로 죽든 살든 이젠 끝을 내야 해. 더 이상 이려고 어떻게 살아. 이젠 죽은 목숨만도 못해"

피해자이면서도 큰소리 한번 못 냈던 주민들의 입에서 50년간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분노들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결의로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3일 오전 10시 화성경찰서 앞에서 7백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고, 전만규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오는 6일 진행될 매항리 사격장 인간띠잇기 행사에 주민 모두 참여하기로 했다.

3일 새벽 1시, 주민들이 다 떠난 대책위 사무실에 임시 위원장을 맡게된 최용운 씨가 찾아왔다. 속상한 마음에 술 한잔 걸쳤다는 최 임시위원장은 "갈 때까지 가보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깨지든, 정부 놈들 머리가 깨지든 한판 붙어야 할 때가 온 거죠"라고 말했다. 폭격이 다시 재개되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는 그의 말속엔 폭격 소리보다 더 큰 매항리 주민들의 50년간의 절규가 배어있었다.

이날 경찰과 정부 관계자들의 움직임도 부산했다. 주민들의 시위 계획을 탐지한 경찰과 화성군수, 국방부 관계자 등은 각 마을 이장들에게 "3일 낮 12시 음식점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걸며 회유를 시도했다. 또 대책위 사무실 주변을 비롯한 마을 곳곳에 70여 명의 사복형사들이 배치돼 주민들을 내내 감시했다. (유혜정)

'한국정부 사법권 돌려받자'

매카시 상병 징역10년 구형

한·미간 불평등 협정인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인 여성을 살해한 주한미군 매카시 상병의 재판이 열린 2일,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는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본부' 등 사회단체 활동가와 대학생들이 모여 '미군범죄자 신병인도와 SOFA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

오진아(운동본부 간사) 씨는 "피의자가 재판을 앞두고 도주를 했는데도, 한국 경찰은 SOFA에 발목이 잡혀 구속수사조차 못하는 지경"이라며 한국 정부의 사법권 확보를 주장했다. 매카시 상병은 지난달 28일 재판을 앞두고 탈주하기도 했지만, 미국 측이 한국 수사기관으로의 신병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매카시 상병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반면 한국인 변호사는 "매카시 상병이 고의로 살인을 한 것이 아닌 만큼, 폭행치사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카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일체를 인정했으나,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다음재판은 16일 오전 10시. (이창조)

진관 불교인권위장 징역 10월형

범민족통일대축전 주도 혐의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인 진관스님이 2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진관스님은 지난해 열린 99범민족통일대축전 통일선봉대 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범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해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됐던 범민련 부산경남연합 최상원 고문도, 2일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받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김보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6월 7일(수)

제 1629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매항리, 3천명 인간 띠잇기

"사격장 폐쇄하라" 한 목소리, 일부 철책 걷어내

6일 오후, 매항리가 생긴 이래 최대 인파가 이 마을에 모여들었다. 스무대가 넘는 대형버스를 타고 전국에서 모여든 3천여 명의 노동자, 대학생,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맞는 마을 주민들의 표정은 들떠 있었다. 26개 중대가 동원된 경찰력은 미군 사격장 철책선 안쪽에서 이미 인간띠를 이루고 서 있었다.

매항리에서 평생을 살아왔다는 주민 이재덕(73) 씨는 "더운데 모두들 수고하는 것이 너무 고맙다"며 "합동조사단의 터무니없는 얘기가 방송돼(주민들이) 분개하고 있다. 정부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하는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 1일 한미합동조사단이 '5·8 오폭사건'과 관련 "폭탄투하로 인한 직접적 피해는 없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집회 대열 속에는 어린이들의 얼굴도 끼어 있었다. 인근 석천 초등학교 6년 생인 아이들은 미군 폭격 소음이 어느 정도냐는

물음에 "장난이 아니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오후 2시, 인간띠 잇기 사전집회에서 구속된 전만규 주민대책위원장 대신 발언에 나선 최용운(45) 임시대책위원장은 "미군에게는 살아 움직이는 폭격 연습용이요, 우리 정부에게는 내다버린 자식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살아왔다"고 울분을 토하며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되찾을 것만 남았다"며 주민들의 의지를 표현했다.

행사 전날인 5일 국방부가 발표한 기총사격장 표적 이전과 매항 1, 5리 주민 이주 추진방침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는 참가자 전체를 대표해서 '불평등한 소파개정국민행동'의 김용환 공동집행위원장이 발표한 '6월 5일 국방부의 이주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주민들을 회유하려는 사기에 지나지 않는다. 더이상의 대책 발표는 필요없다. 사격장은 떠나라"고 일축했다.

▶ 최인기, 서원철 6월 8일 오후 3시, 4시 서울고법 302호, 범민련
▶ 강위원 항소심 6월 9일 오전 11시 광주 민사 401호 법정
97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이던 강 씨는 기소이후 순천교도소로 이감됐으며, 광주교도소에서 항소심이 시작된 이후에도 1백일이 넘도록 관할법원인 광주교도소로 이송되지 않아 98년 방어권 및 집견교통권이 침해됐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경찰의 폭력에 맞서 철책 걷어내 집회 도중 철책을 사이에 두고 경찰과 시위대의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미군 사격장 입구 표지판에 시위대가 스프레이를 뿌리자 시위대 속에서 환호가 터졌다. 그러나 끈이어 경찰의 방패에 찍힌 부상자가 속출했다. 황길진(인천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씨가 머리가 터지고, 정영국(서울공대 98학번)씨가 눈 밑이 5cm 가량 찢어지는 등 상처를 입었고, 헬기까지 동원한 경찰은 '불법집회를 중단하지 않으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방송을 계속해왔다.

집회가 끝난 오후 4시경부터 1시간여 동안 사격장 입구에서부터 인간띠를 잇기 시작한 참가자들은 맨손으로 사격장 철책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돌로 두들기고 기둥에 서너명씩 매달려 흔들려내자 곳곳에서 철책이 기둥 채 무너지거나 이음새가 끊어졌다. 철책을 끊어내는 이들의 맨손위로 경찰의 방패질은 계속되었다. 미군측이 철책 곳곳에 부착해 놓은 집금금지 경고표지판도 모두 떼어졌다.

마무리집회에서 연대사에 나선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미국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민중의 삶도 향상될 수 없다"며 매항리 사격장 폐쇄에 힘을 모을 것을 호소하였다.

집회가 모두 끝난 오후 6시경 마을 주민들의 배웅 속에 참가자들은 발길을 옮겼다. '언제 이 많은 사람들을 또 보게 될까'하는 주민들의 표정 속에는 사격장 폐쇄만이 유일한 해결이라는 절절함이 배어 있었다. <2면 주간인권호름(5) 참조> (류은숙)

'한국사회의 이해' 재판 재개

결심 6월 16일로 잡혀

2일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재판이 창원지법 형사합의 3부(이재철 판사)에서 재개됐다.

경상대 교양교재였던 '한국사회의 이해'는 지난 94년 서강대 박용 총장의 주사파발언이후 검찰의 이적표현물로 수사대상이 됐다. 검찰은 당시 집필자였던 장상환(정치학), 정진상(사회학) 교수 등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인 공안문제연구소 유동열 연구위원이 불참하자 검찰은 같은 증인을 다시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을 각하하고 6월 16일에 결심하기로 결정했다. (김보영)

인권
시평

'타인의 시선'에 의한 포착 박복선 (우리교육 편집장)

교수가 강의 시간에 늦었다. 시내버스 기사와 시비가 붙는 바람에 늦었다고 해명을 했다. 정류장에서 미처 내리기도 전에 버스가 출발을 했고, 교수가 이를 혐의하면서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기사는 '왜 문 앞에 미리 나와 있지 않았느냐' 소리를 높였고, 이 교수는 '차가 완전히 서고 자리에서 일어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을 받은 것이다. 여전히 분이 안 풀린 듯 씩씩대며 교수가 한 마디 덧붙었다. 이젠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는 싸움이라고, 프랑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나는 내릴 정류장이 가까워 오면 바짝 긴장하고, 한 정류장 전쯤에는 문 앞에 나가 대기하고, 차가 서면 신속하게 내린다. 가끔 늦장부리다 기사에게 한 소리 듣는 사람을 보면 알미운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이 교수의 말이 조금은 불편하게 들렸던 것이 사실이다.

'작은 일'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 아닌가, 사태를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 아닌가 하면서 속으로 공연히 어깃장을 놓기도 했다. 무엇보다 '프랑스' 운운한 것이 거슬렀다.

며칠 전, 신문에서 한 페미니스트의 칼럼을 읽다 문득 그때 일을 떠올렸다. 그 칼럼은 386 의원들과 한 환경운동가의 행태를 '여성이 빠진 진보'의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그 칼럼의 한 대목, '남성들에게는 은밀한 일상이었을 이 일련의 사건들은 '여성의 눈'에 의해 인지되고 알려지게 된 것이다.'

남성들의 성문화에서는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들, 그래서 이념적으로는 진보적인 사람들도, 생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강하게 외치는 사람도 남성이기 때문에 보고 느낄 수 없는 '어떤 것'은 오로지 여성이라는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만 포착된다는 것이다.

'프랑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서구' 혹은 '문화제국주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권 선진국'이라는 것이다. 아마 그 교수와 나는 서로 다른 쪽 의미를 사용했을 것이다. 프랑스 유학을 한 교수의 용법과 한때 제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을 불태웠던 나의 용법이 달랐던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즉자적인 감정을 다스리고 다시 생각해 볼 때, 인권 선진국으로서 프랑스라는 '타인의 시선'이야말로 우리의 둔감한 인권의식에 따끔한 자극을 주는 가시가 되리라는 점은 선선하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나는 지금도 내릴 정류장이 가까워 오면 긴장하고, 한 정류장쯤부터 문 앞에 나와 대기하다가, 차가 서면 신속하게 내린다. 그러나 늦장을 부리는 사람을 탓하지는 않는다. 조금 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서, 차가 완전하게 섰 후 천천히 내리는 모험(?)도 해 볼 생각이다.

주간인권호름

(2000년 5월 30일 - 6월 5일)

1. 유엔인권이사회, '모내기 폐기말라'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보안법 유죄 확정판결이 난 화가 신하철씨의 그림 <모내기>에 대해 한국 정부에 "인권이사회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그림원판을 폐기하지 말아달라"고 요청 (30일)

2. 민주노총 파업, '주 5일 근무제' 앞으로

민주노총, 138개 사업장 7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총파업 돌입, 주5일 근무제, 아이엠에프 피해 원상회복,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사회보장 개혁 등 요구 (31일) / '주5일 근무법' 입법청원 (5일)

3. 동강은 흐른다

영월댐 민관공동조사단 총괄 보고서, 동강을 국내최고 생태지역으로 평가(1일) 정부 댐건설 백지화 공식 발표 (5일)

4. 남북정상회담에 바란다

사회 각계인사가 대거 참여한 "올바른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민간모임",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300인 선언'을 발표.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강구, 민족공동체 회복과 민족 구성원이 복지향상을 위한 모든 부문의 교류, 정상회담 정례화 등 촉구 (1일)

5. 배반은 계속된다. 매·항·리!

지난 5월 8일 미군 실전용 MK-82탄 6발이 매항리 앞 바다에 투하된 사건에 대하여 5월 18일 한미합동조사단이 조사에 착수했으나 '매항리 사격장 폭탄투하 사건'으로 인한 피해사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 발표(1일), 이에 매항리 주민대책위 및 '불명등한 소과개정 국민행동'은 '조사결과를 전혀 인정할 수 없으며, 지난 50년 동안 이뤄진 피해를 전면 조사해 배상하고, 매항리 사격장을 폐쇄하라'고 항의집회/ 2일 오전 사격 훈련 재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치자 오는 7일까지 훈련을 잠정중단하기로 한-미간에 합의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밝혀, 한편 경찰은 주민대책위원장 전만규 씨를 군사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3일)/ 국방부, 매항 1.5리 주민들 이주에 합의했다고 발표(5일)

6. 저문날인 '끝까지 거부' '78+' 결성

구 주민등록증이 효력이 상실되는 6월 1일을 앞두고 78+ 결성, 정부의 독선적인 주민등록 정책에 맞서 끝까지 반인권적인 저문날인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30일)

7. 국정원 고문수사 딜미

이른바 '백두청년회' 사건으로 구속된 지태환 씨의 몸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의 가혹행위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상처들 확인, 지 씨 국정원 원장 등을 상대로 고소(3일)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이번엔 온두라스 대사관

삼성타워에 유치, 집회·시위 막아

집회·시위 봉쇄를 목적으로 재벌기업들이 열을 올리고 있는 외국공관 유치 경쟁에서 삼성그룹이 또 한번의 개가를 올렸다.

7일 오전 11시 종로2가 삼성타워(국세청 건물) 앞에서 '삼성노동탄압 규탄 및 삼성생명 해고자 원직복직 촉구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던 '삼성그룹 해고자 복지 투쟁위원회(위원장 윤진열)'는 지난 5일 종로경찰서의 전화를 받았다. 온두라스 대사관의 입주로 집회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삼성이 해고노동자들의 집회시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대사관을 유치한다더라"는 소문이 또 한번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삼성은 이미 지난 98년 삼성본사 별관에 싱가포르 대사관을, 올 3월

삼성생명에 열살바도르 대사관을 유치한 전력이 있다.

삼성 해고자들이 7일 오전 집회를 강행하려 하자 종로경찰서에서는 '옥외집회신고 관련 사전변경 통보'란 공문을 현장에 들고 나왔다. 이 공문에는 '6월 5일 오전 9시경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이 입주 업무를 개시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거한 외교기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해당되어 옥외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기가 막힌 삼성 해고자들은 대사관이 정말 있는지라도 확인해 보겠다고 건물에 들어갔다가 뚫으로 밀려났다. 온두라스 대사관측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외교기관의 특성상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시할 수 없다. 모든 문제는 삼성그룹에 직접 물어봐라'고 밝혔다.

삼성해고투의 윤진열 위원장(43)은 "외교기관을 동원하여 노조탄압에 나선 삼성재벌은 우리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나라(온두라스)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힘없는 나라라고 잔값에 건물 내주고 약용해 먹을 때 우리 나라의 이미지도 망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고 있는 외무부와 대통령의 국가 경영에 문제가 있다"라고 질타했다.

문제가 되는 현행 집시법 외국공관 100m 이내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 조항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난 5월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류은숙)

한총련 죽이기 다시 꿈들

대의원 검거 나서

한총련 사냥이 다시 시작되었다.

본지가 7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앙대 1명, 경기대 2명, 조선대 4명, 항공대 2명 등이 6월 3일에서 6일 사이에 연행되었다. 이 중 한총련 탈퇴 각서를 쓴 3명은 당일 석방되거나 불구속 처리되었고, 나머지 학생들은 해당 경찰서 보안 수사대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가협과 민권공대위는 한총련과 관련되어 6월초에만 스무 명이 넘는 학생들이 연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경기대 학생회의 한 간부는 "6월 3일을 전후로 한총련 대의원 전원에 대한 검거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고, 조선대 학생도 "출범식 이후 수배명장과 검거령이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긴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기사 2면으로 이어짐

행사와 동정

■ 경찰청의 집시법 개정 방안에 대한 반대와 '집회·시위의 자유' 긴급토론회

· 때: 6월 8일(목) 오후 3시 · 장소: 한글학회회관(광화문4거리 구세군회관뒤)
· 주최: 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쟁취 민중대회위원회 (02-717-7962)

■ 일본 시민단체 「정보공개클리어링 하우스」 초청 간담회

· 때: 6월 8일(목) 오후 5시 · 장소: 참여연대 2층 강당
· 주최: 참여연대 (02-723-4253)

■ 아내구타 가정내 자녀 폭력의 실태 및 대인마련을 위한 토론회

· 때: 6월 9일(금) 오후 2-5시 · 장소: 서울 종로성당 대강당
· 주최: 서울여성의 전화(02-2272-2161)

■ 제 11회 민족민주주의 열사·희생자 범국민 추모제

· 때: 6월 10일(토) 오후 1시 30분 · 장소: 종로 4가 종묘공원
· 주최: 제 11회 민족민주주의 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행사 준비위원회

■ 제 2차 민중대회

· 때: 6월 10일(토) 오후 3시 · 장소: 종로 4가 종묘공원
· 주최: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 (02-717-7962)

철도청, 철탑농성에도 끄떡없다

철도공무원 노동자 건강악화 농성 풀어

철도청의 부당해고에 항의하여 40일 동안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여온 두 명의 해고 노동자가 7일 농성을 풀고 철탑에서 내려왔다. 고공농성 한 달째 되던 5월 29일부터 식사를 거부해온 이들의 건강상태는 매우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동대표 황영호등, 이하 공투본) 소속 김병구(청량리차량지부장) 씨와 이종선 씨(구로차량지부장)가 30미터 높이의 용산역 구내 철탑에 올라 농성을 시작한 것은 지난 4월 29일. 철도청이 근무지를 이탈해 대의원대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공투본 소속 노동자 70여명에게 감봉, 직위해제, 산간오지로의 전출 등 몰상식한 징계를 내린 것이 이들을 고공농성으로 몰아간 직접적 계기가 됐다. 당시 철도청의 징계조치에 대해서는 철도노조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아온 철도청장의 비리를 감추고 철도노조의 민주화 흐름을 막기 위한 탄압조치라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철도비리 척결과 철도노조 사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실무를 맡고 있는 공공연맹의 나상윤 대외협력부장은 "사람들이 40일간이나 공중에서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농성하고 있는데도 철도청이 협상에 임하기는커녕 이를 철저히 묵살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철도청의 비인간적 처사에 분개했다.

이들은 철탑에서 내려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명동성당의 공투본 농성장에 결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 중 이종선 씨는 구로 차량소장에 대한 폭력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상태에서 병원에도 가지 못한 채 쇠약한 몸으로 거리를 떠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내)

철도노조 민주화 투쟁 일지

- 1월 14일 : 대법원, 3중 간선에 의한 철도노조 위원장과 대의원 선출은 무효라고 판결
- 1월 26일 : '철도노조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결성
- 2월 24~25일 :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철도노조 대의원 선거 강행
- 3월 20일 : 철도노조 조합원 3백여명을 동원하여 '공투본' 농성장 침탈
- 4월 1일 : 월간 '말'지 4월호에 철도청장이 철도노조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 보도
- 4월 20일 이후 : 철도청, 공투본 소속 노동자에 대해 감봉, 무연고지 전출, 해고(10명) 등 징계조치 단행

기사 1면에서 이어짐

지난 5월 말 제8기 한총련 출범식이 이례적인 평화적 행사로 치러졌으나, '한총련은 이적단체'라는 당국의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다는 것이 실감나는 대목이다. (류은숙)

<기고> 지방학교라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인가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현재 충남 장항에 위치한 정의여중·고는 전체 교사 가운데 72%인 31명의 교사가 파면되고 1백일이 넘도록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 5월 30일에는 재단측이 장항지역에 유일한 여중·고인이 학교를 내년 2월에 폐교하겠다고 발표하기까지 했다. "폐교 결사반대!" "우리 학교를 살려내자!" 장항읍 내 곳곳에 걸린 현수막들이 이 학교가 겪고 있는 진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 국회의원으로 대통령, 서울시장 선거에도 출마했던 남장여성 김옥선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이 학교는 재단측의 공금횡령과 교직원 채용시 금품 수수, 교사와 학생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 등으로 오래 전부터 세간의 비난을 받아왔다. 지난 2월 25일 재단측이 4명의 교사를 생활근거지와 동떨어진 섬에 위치한 원외중학교로 발령을 내면서부터 상황은 심각해졌다. 전출 발령을 받은 교사들은 모두 재단측에 투명한 재정공개를 요구했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어서 보복인사의 혐의가 짙었다. 교사와 학생 4백여 명이 장항시내에서 거리시위를 벌였고, 새학기가 시작된 3월 2일부터는 교사들은 장항에서 2시간이 떨어진 대전시 충남도 교육청에서 농성을, 학생들은 수업거부와 교내 농성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31명이나 되는 교사가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파면되었고, 혼란의 와중에 정의여중 재학생의 40%인 119명과 정의여고 재학생의 12%인 49명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했다. 연일 시위를 벌이는 중학생들은 고등학생들과 분리하기 위하여 10km나 떨어진 폐교된 초등학교로 옮겨 수업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29일에는 농성중인 교사들이 수업에 복귀하려 하자 재단측 학부모와 교육청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어린 학생들에게 가스통까지 난사하는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장항에서 만난 학생들은 1백일이 넘어서 분류에 몹시 지쳐 있었다. 특히 고3 아이들은 모두 "우리는 수능시험을 볼 때까지만이라도 그냥 정상적인 수업을 받고 싶을 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파면된 교사의 빈자리를 임시 교사가 메우고 있지만 워낙 외지여서 충원이 쉽지 않은데다 고3의 경우 영어와 수학을 담당하는 교사마저 없어 학생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교육청은 미온적 자세도 일관하고 있다. 교육청은 문제의 발단이 된 교사 4명에 대한 전보발령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했으며, 재단측의 폐교 방침에 손을 들어주었다. 이 학교의 공립화를 통해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의 요구에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도 않는다. 교육부도, 전교조도, 사회단체도 이 문제에 소극적인 것은 마찬가지다. 만약 이 학교가 상문고처럼 서울에 있는 학교여도 이렇게 무관심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으로 답할 것인가.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전·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근로자파견법 악용 판쳐 민노총 기자회견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노동계가 파견노동자의 정규직화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정규직화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선 근로자파견법 시행 2주년이던 7월 1일을 앞두고 파견노동자들의 대량해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시중 파견노동자의 문제가 강조됐다. 대한상의와 경총 등 사용자 단체들이 파견기간의 연장, 파견근로 허용업무의 전면 확대 등 근로자파견법의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 또한 이날 노동계가 긴급하게 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라는 것이 중론이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파견근로기간이 2년이 되어 가는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동일한 업무에 새로운 파견 노동자를 투입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자파견법 위반"이라며 "파견근로자를 계약해지하는 업체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근로자파견법의 규정에 따라 파견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지도"할 것, 그리고 "사용주가 이를 어길 경우,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근로자 파견법 폐지돼야"

이날 민주노총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근로자 파견법이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는 애초에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명목으로 만들어진 근로자파견법이 정규직을 값싸고 해고하기 쉬운 파견근로로 대체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5월 26일자> 한편, 노동인권회관·사회진보연대·여성노동자회·참여연대 등 노동·사회단체들도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해 파견노동자에 대한 불법적인 해고 중단과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해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기업이 파견노동을 상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장기간 사용된 파견노동자의 직접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기업에선 이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파견계약기간 2년이 다가오는 노동자들을 계약해지하고 똑같은 업무에 새로운 파견노동자를 투입하는 식의 탈법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주영)

집시법 개정안 마련 시급 긴급토론회, "개약에는 적극대응"

8일 '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가 주최하는 집시법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에 나선 김도형 변호사는 "작년 5월 집시법이 개약된 이후 시행령 또한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개약되었다"면서 집시법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의 집시법 개악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개정안 마련과 경찰청 개악시도에 대한 '적극대응'이 시급하다는 데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 (김정희)

만화사랑방

이동수



박수 쳤다고 옥살이 10일

서울지법 정영진 판사, 방청석 향해 "감치" 명령

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이적표 현물 배포 및 판매)로 구속된 안우춘(26)씨의 1심 재판 도중 박수를 쳤다는 이유로 재판을 방청하던 김대권(27)씨가 감치 10일을 명령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서울지법 형사 12단독 정영진 판사는 이날 안 씨가 서면으로 준비한 최후진술을 읽는 도중 "기다리는 다른 사람도 생각해라. 나머지 부분은 구두로 정리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제지했다. 이에 재판을 방청하던 김대권씨가 "계속 읽게 하십시오. 듣고 싶습니다"라고 외쳤고, 정 판사는 "조용히 하라"고 연성을 높였다.

결국 안 씨는 준비한 문서 읽기를 포기하고 2-3분 정도 구두로 최후진술을 정리했는데 진술이 끝나자 방청석에 있던 김 씨가 박수를 친 것이다.

정 판사는 손가락으로 김 씨를 지목하면서 감치를 명령했고 김 씨는 그 자리에서 범법경찰에게 끌려나갔다.

2시간 후에 열린 김 씨에 대한 즉결 심판에서 김씨는 "과거에 역사적 재판에서 박수를 친 행위를 처벌하지 않았다. 공개재판에서 완전히 재판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방청객이 의사표현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안 씨의 담당 변호사인 김희재 변호사는 "(김 씨의 행위) 재판 진행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었다"라며 "사전에 주의를 주는 것으로 충분했을 텐데 감치명령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 판사는 감치 명령 전에 김 씨에게 사전 경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전 경고를 할 의무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고 없이 10일이나 되는 감치명령으로 대응한 것은 재판장의 권위주의의 발현으로서 지나친 처사였다는 것이 당시 방청했던 관계자들의 공통된 평이다.

한편 8일 이 문제와 관련해 본지의 전화를 받은 정영진 판사실 직원은 "(이런 문제론) 절대 전화를 연결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본지와외의 통화를 거절했다. (류은숙)

'오라운드' 시작?

포스코-안티포스코

홈페이지 도안 금지에 '이의신청'

8일 삼미특수강 노동자들과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운영자는 포항제철(주)이 신청하고 법원이 받아들인 '홈페이지 도안 사용금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하였다.

지난 4월 3일 포철은 '안티포스코(ANTI-POSCO) 홈페이지의 도안이 자사 홈페이지의 도안을 모방하여 자사의 인격권과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이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4월 17일 서울지법 이선희 판사는 별다른 이유 설명 없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안티포스코 홈페이지는 포스코 로고와 포스코 빌딩 배경화면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문제의 도안은 찢겨진 모양으로 운영되어 왔다. <관련기사 본지 4월 13일자>

포철은 97년 삼미특수강을 인수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포철은 고용승계를 하지 않아 약 245명의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문제의 안티포스코 홈페이지는 그 부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홈페이지는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당연한 고용승계를 거부한 포철을 '나쁜 회사'로 전제하고 포철의 상징마크에 X표를 찍으며, 이런 나쁜 회사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그 로고인 'POSCO'앞에 '반대'라는 뜻의 영문자 'ANTI'를 덧붙인 것이다.

안티포스코 홈페이지는 표현의 자유

8일 제출된 이의신청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포항제철이 나쁘다'라는 외침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그것을 '상징마크'로 나타낸 것도 또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따라서 이같이 표현했다 하여 포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 할 수 없다. ▲포철 홈페이지의 도안이나 본사 촬영 사진 등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의 사용이 포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또한 포철의 로고인 'POSCO'는 제호 자체에 저작권이 미치지 아니하며 설사 저작권이 미친다 하더라도 'ANTI'라는 단어와 결합됨으로써 회사의 로고로서 기능을 상실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공공연하고 명백하게 패러디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구성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는 '패러디'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뚜렷이 갖추고 있다. 패러디가 일반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안티포스코 정도의 개작은 저작권법에 의해서도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어 삼미특수강 문제가 오히려 크게 부각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현재 8개국 10개에 달하는 진보네트웍들이 이미 안티포스코의 원래 도안을 그대로 사용한 복제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25일에는 미국의 신탁회사인 보스턴 월튼자산운 영부 대표가 포철주식 7,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이 회사의 의뢰인들을 대표하여 유상부 포철회장에 삼미노동자들의 복지를 권유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류은숙)

신뢰관계에 있는 사회 지도층 인사가 자행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집중 상담 접수

· 기간: 2000년 6월 12-30일/ 오전 9:30 - 오후 5:00
· 상담전화: (02) 529 - 4271~2 · 주최: 한국성폭력상담소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6월 10일(토)

제 1632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6·10! 오늘의 명동성당

13개 농성단 '오늘의 문제'로 천막살이

관광특구 지정 명동대축제를 알리는 청사초동과 만국기가 가득한 명동, 6월 항쟁 '13주년'을 맞는 명동성당에선 우연의 일치인지 '13개'의 농성단이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저마다 수배자를 대어섯씩은 거느린 농성단이 내건 사안은 미군철수, 폐항리 사격장 폐쇄, 노동시간 단축, 임금의 아이엠에프 이전 원상회복, 정치수배해제, 국가보안법 철폐 등 우리 사

회 문제의 종합전시장을 이루고 있다. 6월 항쟁에 대해서 잘은 모른다고 수줍어하는 한 대학생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가 여전히 많지 않겠어요?"라며 '미군에 의한 학살만행 진상규명을 위한 전민족 특별조사위원회' 농성단에서 따를 줄이고 있다.

한총련 대의원이란 이유로 수배된 80명 학생의 이름을 걸어놓고 24일째

<논평> 6월항쟁, '아름다운 옛이야기'?

1987년 6월 10일부터 19일동안 연인원 5백만명이 참가한 전국적 규모의 반독재민주화운동. 오늘 우리는 다시 이 위대한 인간해방운동의 금지탑 앞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게 된다. '6·10'을 맞아 명동성당 천막농성장을 찾은 본보 기자에게 어느 농성자는 "힘들어도 눈만 마주쳐도 동지에. 인간애를 느끼며 신바람이 났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것이 바로 '6월항쟁'이었다. 과연 우리는 이 '6월항쟁'을 간직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가?

역사에 대한 민중의 기억은 가장 근본적 차원에서 '불온한' 기억이다. 그것은 인간의 역사가 고통으로 가득하며 그 고통은 언제나 진행중인 까닭이다. 당연히 역사의 기억을 탈색시키고 제도화시킴으로써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드는 일은 지배계급의 절대적 필연의 과제가 된다. 사람들은 흔히 6월항쟁의 정신으로 살고 있노라 말한다. 그러나 6월항쟁의 '정신'으로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은 동시에 6월항쟁의 '행동'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신장군처럼 정계에 진출한 사람들, 투옥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난 '잘나가는' 시민운동가들, 일상의 안락함과 민주주의 정신을 '양립시키고 있는' 온갖 사람들... 오늘 우리는 묻고 싶다. "당신의 기억은 정말 지금도 불온합니까?"

6월항쟁은 결코 '아름다운 옛이야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하나의 사건으로서 6월항쟁은 지나갔지만 그것이 진정 우리 사회의 변혁을, 나아가서 전 세계적인 규모의 인간해방을 꿈꾼 것이었다면 지금도 우리의 불온한 실천으로 이어지면서 진행되고 있어야 할 사건인 것이다.

불의에 대한 일상의 싸움에 지친 우리는 때로 신선한 향기를 쐬고 싶다. 그리고 오늘날은 날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6월항쟁의 향기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다.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서기 위하여!

농성중인 이동진(94년 경상대총학생회장) 씨는 삭발을 했다. 주위를 둘러보니 이 씨처럼 삭발을 한 사람들이 여럿 보인다. 길게는 7년에서 짧게는 2년까지 정치수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힘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임신부님이랑 성당 직원들이 나가라고 매일 성화부리는 것만 빼고요"라며 미소짓는 이씨의 얼굴에선 그늘이란 찾아볼 수도 없다. "농성하는 사람들 모두가 호형호제하며 지내요. 식사도 거의 같이 해결하고요" 서로에 대한 의지가 그의 미소를 만들어내는 듯 보인다.

단식농성 9일째를 맞고 있는 '철도노조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의 노동자들은 40일간의 철타고공농성을 마치고 찾아온 동료 이종선(구로차량지부장) 씨를 맞아 뜨거운 포옹을 하고 있다. 이 씨는 "그때 외쳤던 대통령 직선제도 됐는데 우리 (철도노조)는 5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직선제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투쟁의 연장이라 생각하며 내 딸에게 정말 좋은 세상 남겨주기 위해 살고 싶다"고 다짐한다.

"그 해는 유난히 더웠던 것 같다"며 87년 6월을 기억하는 박순희(천주교 정의구현전국연합 의장) 씨는 "그때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와 정부 요직으로 가서 '나도 옛날에 다해봤다'는 교만을 부리는데 질린다"며 "안주하면서 기념하고 상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입으로 말하면서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을 보지 말고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힘들어도 눈만 마주쳐도 동지에. 인간애를 느끼며 신바람이 났었다", "불의에 항거한다는 열정으로 한사람에게라도 더 전하려는 의욕이 있었다". 87년 6월에 대한 기억은 이렇듯 명동성당 천막 농성장을 지키는 사람들을 깨어 움직이게 하고 있다.

(류은숙)

오늘, 범국민추모제

다시 다짐하는 명예회복·의문사 진상규명

오늘 오후 1시 30분 서울 종로 4가 종로공원에서 '제 11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가 열린다. 지난 90년 성균관대에서 영정을 든 유가족들이 최루탄 세례 속에 첫 행사를 치른 이후 십 년의 세월이 훌쩍 흘렀다.

오늘 추모제를 맞는 유가족들의 심정은 각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맞는 첫 추모제이기 때문이다.

고 박종철 열사의 부친인 박정기(70) 유가족 회장은 "지난 10년 세월은 부당한 권력과의 전쟁 그 자체였다"며 "양대 법안의 시행을 앞둔 우리 가족 전체의 뜻은 보상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국민연대)의 한충목(46) 집행위원장은 "이번 추모제는 유가족들이 422일간의 농성을 통해 쟁취한 양대 법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실천을 결의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 밝혔다. 국민연대는 오늘 추모제에서 두 법의 시행령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추모제가 끝나는 오후 3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2천년 제2차 민중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류은숙)

북한송환희망

비전향 장기수 55명 명단 공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사흘 앞둔 9일, 북한 송환을 희망하는 비전향 장기수 55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비전향 장기수 송환 추진 위원회(상임공동대표 권오현)는 9일 오전 11시 서울 명동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전향 장기수 88명 가운데 55명과 전향취소 신청을 한 장기수 3명, 도합 58명이 송환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추진위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쟁포로인 김인서, 김영태, 함세환 씨 등을 비롯한 송환희망자들은 대부분이 70세를 넘긴 고령자들이다. 90세 이상인 사람도 2명이나 된다. 또한 이들은 40년 이상 북역자가 4명, 30년 이상 40년 미만 북역자가 44명이라는 수치에서 드러나듯 사상전향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긴 세월의 옥고를 치러야 했다.

추진위측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이상 대립과 대결의 상징처럼 남아있는 비전향 장기수들의 송환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인도주의와 동포에 정신에 입각해 인권의 보편성과 국제법상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는 조건 없는 송환"을 촉구했다.

작년 12월 27일 결성된 추진위는 민가협 등 30여개 인권·사회·종교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류은숙)

<기고> 구로경찰서에서 보낸 10시간

고상만 (반부패국민연대 국장)

5월 31일, 구로역에서 만취한 한 남자가 근무중인 공익요원을 구타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구타를 말리던 내게도 행패를 부렸고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의 다른 한 사람과 함께 "증언이 필요하니 협조해 달라"는 경찰의 요청으로 구로서까지 가게되었다. 여기까지는 밤거리에서 흔히 있을법한 일이다.

문제는 경찰서에서 시작되었다. 경찰서에서 그 가해자가 주머니에서 꺼낸 뭉개로 누르듯이 내 머리를 10여 회 내리찍었다. 이로 인해 나는 머리와 얼굴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경찰은 병원 후송 후 "바빠서 돌아갈테니 치료는 자비로 하고 가해자 처벌을 위해 반드시 경찰서로 돌아와 달라"는 요청을 할뿐이었다. 경찰서 내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부상을 입었는데 아무런 책임이 없는 듯한 경찰의 행동에 수궁이 안되었다.

응급환자로 인해 치료를 받으려면 오래 기다려야 한 다기에 일단 경찰서에서 이야기를 마친 후 외야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구로서에 갔다. 병원의 사정을 얘기하던 내 귀에 경찰의 통화 내용이 들렸다. "거기 고상만이 자료 좀 보내요" 어이가 없어 "고상만이 뭐니까"라고 항의했다. "죄송합니다. 급하다보니 그랬네요" 나는 경찰이 당연히 이렇게 말할 줄 알았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내가 그렇게 말하건 말건 당신이 뭔데 통화 내용을 가지고 말이 많아"였고, 반말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내 요청에 "너 되게 똑똑한데 어디 한번 보자"라며 나를 폭력피의자로 조작하기 시작했다. 내가 벽살을 쥐고 흔들었다고 앞서 말한 가해자가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당시 상황을 증언하려 함께 경찰서에 왔던 증인을 밖으로 내몰았다. 물론 경찰은 그를 다시 부르지 않았다. 나는 증인을 내쫓은 것에 항의했으나 경찰은 "그 새끼, 더럽게 잘났네. 야, 일해야 하나까 구석에 가 있어"라는 핀잔과 반말로 대꾸했다. 나의 머리 부상에 대해서는 "스스로 컴퓨터에 부딪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서를 꾸미라고 말을 주고받았다. 더 이상의 항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병원에 가게 해 줄 것과 서장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너는 피의자니까 48시간동안 여기에 인치할 수 있고 치료도 나가서 해. 서장면담은 못 시켜줘"라고 했다. 왜 안되냐는 물음에 대한 답은 간단했다. "내 맘이다!"

또 한가지, 내 머리에서 흐른 피가 경찰의 컴퓨터에 떨어지자, 경찰은 "야, 이거 니가 묻혔으니까 니가 닦아"라고 말했다. 뭐라고 표현 해야할까? 그 모멸과 치욕감은 지금까지도 내 주위를 뱅뱅 돈다. "제가 실수로 오랜 국물을 흘린 것도 아니고 여기 경찰서에서 폭행 당해 피를 흘린 것인데 이걸 제가 닦아야합니까?" 경찰의 답변, "그럼 누가 닦아"

길고 긴 10시간이 지나 결국 무혐의로 경찰서 문을 나서는데 무더위 속에서도 온 몸에 소름이 돋았다. 오늘 밤 구로서에서 또 어떤 시민이 무슨 일을 겪을런지...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6월 13일(화)

제 1633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2차 민중대회 성황

전국 9개 도시 "민족자주권, 민중생존권" 메아리

높아만가는 민중생존권의 위기감이 한 목소리로 터져 나왔다.

지난 10일 서울종로공원, 공원전체가 인간 숲을 이루었고 시간이 갈수록 그 숲은 커져만 갔다. '민족자주권 쟁취! 민중생존권 쟁취! 김대중정권 규탄! 제2차 민중대회'가 열린 것이다. 같은 자리에서 앞서 열린 '민족민주열사 합동추모제'의 숙연함 속에서 개최가 선포되었다. 이 대회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9개 도시에서 민주노총 등 30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의 주최로 열렸다.

각계각층의 발원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군축 등 민중의 요구에 기반한 남북정상회담 △ 700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 협동조합 통제권과 엄청난 농가부채 누적 등 반민중적인 경제구조 심화에 맞선 진정한 개혁 △ 밀실추진중인 한미·한일·한철레 투자협정에 맞선 경제주권 수호 △ 매항리 폭격과 노근리 등 양민학살, 불평등한 소파협정의 근원인 주한 미군 철수 등 최근 현안들에 대한 민중의 요구를 집대성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서로간의 작은 차이와 분열을 극복하고 민중운동 진영의 폭넓은 단합과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을 적극 결의"한다고 밝혔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명동성당까지 2km를 행진하였고, 행진은 경찰과의 별다른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명동성당 들머리와 가톨릭 회관의 주차장을 꽉 메우고도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한 대열은 정리집회 중에도 계속 물러들었다. 참가자들 모두가 6월 항쟁의 한가운데에 있는 듯 드높은 열기에 폭 빠져있었다. (류은숙)

민주당사 접거 철거민 구속

지난 9일 민주당사를 접거했던 전국 철거민연합 소속 철거민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저녁 발부되었다.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폭력행위, 업무방해, 공용물손상, 방화' 등이다.

구속된 철거민들은 심한 부상을 입었으나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관계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11일 오후 2시경 이들을 집결한 김도형 변호사는 "7명 연행자 모두 경사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철거민연합 회원과 대학생 등 150여명은 12일 오후 2시 민주당사 인근에서 철거민 연행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 참가한 한 철거민은 "불법행위를 저질러 진압을 했다 하더라도 민초들이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상

황을 생각해야 할 것 아니냐"며 "철거강제의 시달림에 죽고싶은 심정"이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류은숙)

AI 성명, 인권을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국제앰네스티(AI)는 지난 9일 '남북한의 평화와 번영은 인권에 달려있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한민족의 인권이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AI는 양국 정상에 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주문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이 공인했던 정치적·사법적 개혁에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재검토,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인권법의 입안이 포함된다"며 "말을 행동으로 옮길 것"을 촉구하였다. 김정일 국무위원장에게는 "최근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개방이 국제인권기준의 인정을 포함해야 하며, 특히 북한의 인권상황을 둘러싼 비밀주의를 접고 국제사회 인권 감시자들의 접근을 허락할 것"을 촉구하였다. (류은숙)

비전향 장기수 송환 촉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김승환)는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도내 거주 북송희망 비전향 장기수들의 송환을 촉구하였다.

송환을 희망한 3인은 전창기(83세, 23년 북역), 김영달(67세, 30년 북역), 고광인(66세, 34년 북역) 씨이다. 인권연대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상황에서 분단의 상징인 이들을 송환하는 것은 민족화해의 기운을 높이는 조치"라며 지난 9일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가 발표한 55인에 대한 송환촉구를 지지하였다. (류은숙)

인 권 시 평

개인적 체험

공선옥 (소설가)

나는 내가 왜 그렇게 사는 게 자연스럽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한 지의 원인을 알지 못했다. 왜 여성들과 얘기할 때와 남성들과 어울리는 것이 느낌이 다른지. 나이 들어 갈수록 이성보다는 동성이 좋고 편해지는지. 그것은 이 땅의 보통 남성들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이라는 걸 이제야 어렵듯이 알 것도 같다.

남성들에게 여성은 언제나 '성적인 대상'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 성적 대상이 아니면 그저 어머니나 누이나 할머니나 딸이 있을 뿐. 나같이 이혼하거나 독신인 여성에게 가해져 오는 음험한 눈길들을 나는 늘 느끼면서도 못 느낀 척 해왔던 것이다.

언젠가 술자리에서 어떤 남성이 성적인 농담을 스스럼없이 건넌 적도 있었다. 나는 그때 왜 단호하게 반박하거나 대꾸하지 못하고 얼굴이 벌개져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났던 것인지 모르겠다. 남성으로부터의 성적농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 여성의 좋은 인간성 중의 하나로 치부되기도 하는 분위기를 나는 용인했다. 그래서 분위기 깨지 않으려고 아주 많이 인내하면서 어떤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던 적도 있었다. 그리고 이후 그런 자리가 있을 때는 다시는 나가지 않게 되었고 자연 사회생활이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다. 나의 빈약한 사회생활이란 게 그러니까 그토록이나 가혹적인 성격을 띤 것이었음을 나는 이제 새겨달았다고 해야 할까. 뭣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불편하고 아프고, 그랬던 것 같다.

나는 이번에 나보다 젊은 여성들로부터 '용기' 있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배웠다. 그동안 사실 알면서도 짐짓 모른 척 해왔던 나 자신의 용기 없음을 통탄스러워 하면서. 나 어려서는 아들 없는 집의 서러움을 특별히 받았었다. 그때만 해도 시골에서는 어느 집에 아들이 없는 것을 '후사'가 없다고 했다. 후사 없는 집 사람들은 은근히 동네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했다. 너도나도 무시를 하니 동네에서는 후사 없는 집 사람들은 그렇게 대접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었다. 우리 집이 바로 후사 없는 집이었다. 그리고 후사 없는 집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후환이 없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니 이제 그 집의 명운은 다했다'라는 그토록 단순하고, 그토록 야만적이며 그토록 반인권적인 인식이 있었을까. 그런 야만적이고 반인권적인 분위기에 내가 너무 익숙했던 탓일까. 나는 왜 그토록 삶이 불편했으면서도 한번도 그 불편함의 정체를 직시하지 못했던 것일까. 이 땅에서 여성으로 태어나고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특히 여성이 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정글을 기어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일찌기 홀로 되신 우리 고모할머니는 여자가 홀로 살아가기 힘든 땅에서 살려다 보니 '호랑이할머니'가 되었던 것일까. 여성이 그렇게 밟힐, 손톱 드러내지 않고 홀로 살아가는 게 애초에 불가능한 땅이 이 땅이기 때문에.

주간인권호름

(2000년 6월 6일 - 6월 12일)

1. 외 매 · 향 · 리!

3천여명 참가 매향리 미공군 폭격 연습장 폐쇄를 요구하는 인간띠 잇기, 일부 사격장 철책 걷어내(6일) / 국방부, 주민 공청회 열고 "올해부터 3년 안에 희망 주민들부터 차례로 이주시키겠다"며 이주책 논의, 주민들은 무효화 주장, 1.5리 주민이주대책위 측은 혐의하자 목소리(7일)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매향리 지역주민들의 혈중 납농도가 납을 일상적으로 다루는 노동자들보다 1.7배나 높고, 소음성 난청 증상과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역학조사 결과 발표(8일)

2. 한국전 때 양민사격 메모 확인

미 국방부 대변인, 한국전쟁 당시 미 육군이 미군 진지로 접근해오는 모든 피난민을 향해 기총 사격을 가하도록 공군에 요청했음을 입증하는 터너 로저서 당시 공군대령의 메모를 확보하고 있다고 확인하며 "메모의 진위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해, 그러나 노근리 양민 학살과 연관지를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강조(6일)

3. 이제야 받아야지, 일제징용 한국인 손해배상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들이 일제 징용 한국인 피해자(대일민족소송단) 1천여명을 대신해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미 법원에서 제기하기로 하고 공동 소송계약 맺었다고 밝혀, 징용에 연루된 미국 내 일본기업과 은행이 제소대상(7일)

4. 집시법 개악, 품구지 마라

민중대회위원회, "경찰의 집시법 개정안은 위험적 법안"이라며 반대 토론회 갖고 "적극대응" 의견 모아(8일) 경찰청, 출속 공청회 추진하는 등 집시법 개악 관철 위한 무리수 두는 것으로 지적돼(12일) 삼성그룹, 종로2가 삼성타워에 온두라스 대사관 유치하여 삼성그룹 해고자 복지투쟁위원회 집회 봉쇄(7일)

5. 노동계, "파견노동자 정규직화" 전면요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갖고 근로자파견법이 악용되고 있고 개악이 시도되고 있다며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서(8일)

6. 철거민, 민주당서 점거농성

전국철거민연합 소속 7명의 철거민, 민주당서 8층 총재실 점거·전원연행(9일) 전원 구속영장 발부(12일)

7. 다시 살아오는 6월

제11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2000년 제 2차 민중대회 열려(10일)

8. 집에 가고 싶다

비전향 장기수 송환 추진위원회, 기자회견 갖고 북한 송환희망 비전향 장기수 55명 명단 공개(9일)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전·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6월 14일(수)

제 1634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청송 출소자 '절반의 승리'

국가상대 집필·접견권 침해 승소, 가혹행위는 패소

청송교도소(및 감호소) 출소자가 수감중 교도관으로부터 고문, 집필권과 접견권 침해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주현)는 지난 달 1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최근(9일) 공개된 판결문은 그 긍정적인 의미와 함께 그것이 가지는 한계가 지가 이후 교정시설의 인권유린사건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 요지 2면 참조>

감옥의 전근대적 관행에 대하여 '절반의 승리'를 거둔 주인공은 유득형(48세, 대전 거주) 씨. 그는 지난 87년 징역 2년에 보호감호 10년을 선고 받고 '청송'에 수감되어 있다가 95년에

가출소했다. 96년 다른 범죄로 2년형을 받은 그는 다시 '청송'으로 갔다가 남은 보호감호까지 살고 99년 1월에 만기출소했다. 유 씨의 두 번의 청송 생활은 '당국의 부당행위→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집필신청→신청거부→항의→가혹행위'라는 과정을 밟았다.

이번 판결에 나타난 주요쟁점은 다음과 같다. ▶소송제기를 위한 집필권 침해(승소) ▶접견시 가혹행위를 폭로하다 접견을 중단 당한 접견권 침해(승소) ▶다른 재소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교도관의 과실(승소) ▶유 씨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시효(3년) 경과여부(승소) ▶6개월간 계속된 유 씨에 대한 계구사용(승소) ▶교도관의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

지 여부(증거불충분, 패소).

판결은 억울한 인권침해를 당해 청원·제소를 원하는 제소자에게 교정당국이 집필을 봉쇄해온 폐쇄에 책기를 박았다는 긍정적인 의미는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유 씨의 은몸에 뚜렷이 남은 쇠사슬과 차꼬로 인한 끔찍한 상흔을 외면하고 진상조사도 없이 "증거불충분"이라는 판단을 내린 점에서 결정적 한계를 갖는다는 지적이다.

☞ 기사 2면으로 이어짐

대학생 마구잡이 징계

성대, 시립대 등 '등록금 인상반대'에 보복

봄에 대학가를 휩쓴 '등록금인상철회·교육재정확보'투쟁의 여파가 학생들에 대한 대량징계로 나타나고 있다. 6월 12일 성균관대는 총장명의로 공고를 통해 22명의 학생에 대한 징계를 발표하였다. 징계내용은 출교 4명, 제적 6명, 무기정학 7명, 유기정학 5명의 징계이다. 학교 당국은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와 '교육투쟁'의 성격을 벗어난 행위(문서질취, 질취 문건의 임의편집·자의적 해석·공표 등)를 징계처분 대상으로 정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 당국이 문제삼은 '문서질취'는 학생들이 점거농성에 들어가면서 발견한 것으로 '문제교수 동향(소위 교수사찰문서)' 등 교수와 학생에 대한 학교당국의 광범위한 사찰이 있었음을 드러낸 문서들이다.

해당 학생들은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12일부터 대학본관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서울시립대도 현재 21명의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발의되었고, 점거농성과 관련 6명이 폭력혐의로 형사 고소된 상태다. 16일에 징계가 확정될 예정이며, 학생들은 이의 철회를 요구하며 8일째 단식 농성중이다. (심태섭)

새로 나온 책 '실'과 말하는 여성이 아름답다

『성희롱, 당신의 직장은 안전합니까?』

한국여성민우회 지음/ 21세기북스 펴냄/ 2000.6

"와! 오늘 죽여주는데?" 은근한 눈초리가 여성노동자에게 휘어 감긴다. "에쁘니까 그렇지!" 교의적인 신체접촉이 뒤따른다. 회식자리에 가면 상사의 옆자리는 젊은 여직원의 몫. 성적 접촉을 단호하게 거부한 대가로 해고 통지가 날아든다. 당신의 직장은 과연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합니까?

한국여성민우회가 펴낸 이 책은 직장내 성희롱을 '성별에 따라 수직적으로 분할되어 있고 왜곡된 남성중심적 성문화가 지배하는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자에게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구조적 폭력'으로 바라본다.

권력관계에서 우위에 선 남성이 휘두르는 폭력인 직장내 성희롱에 맞서기 위해선 대응할 수 있는 용기와 지식, 대응훈련이 요구된다. 여성들이 두려움과 착한 여자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성희롱을 회피·묵인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맞설 때만이 성희롱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 책은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소개·분석하면서 △반역 △직면 △지지 네트워크 형성 △법적·공식적 대응 등 여성들이 채택할 수 있는 적극적 대응전략과 단호한 행동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배경내)

◎사건1 개요(사건번호: 96가합966)

가. 92년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교도관들의 부당한 처우를 고소하기 위해 낸 집필허가신청이 담당교도관들로부터 거부됐다.

나. 이에 항의하자 교도관들은 4월 25, 26일 유 씨를 구타했고 이후 불법계구사용과 가혹행위가 이어졌다.

다. 같은 해 8월 6일 어머니와의 접견도중 교도관의 구타 사실을 알리자 담당교도관이 접견을 중단시키고 강제로 유 씨를 접견실에서 끌어냈다.

라. 같은 해 8월 13일 유 씨는 감호자 김아무개 씨로부터 폭행 당한 후 김 씨를 고소하려했으나 교도관의 협박으로 합의했다.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집필에 관한 권리는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특별히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본권...윤태원 등이 원고로부터 집필허가신청을 받고도 집필보고문을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게 원고의 집필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할 것이므로...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 (감호자4명)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교도관들이 가혹행위를 하였거나 위법하게 계구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 (행형법)시행령 54조 내지 60조는...접견시의 대화내용에 관하여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는 바 그렇다면 원고가 감호소장으로 부터 면회의 허가를 얻은 이상 그 대화내용에 제한 받지 않고 자유로이 접견을 할 수 있다...위 교도관의 조치는 접견권을 침해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김아무개의 폭행 계획을 담당교도관에게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각목을 숨겨 가지고 나가는 것을 적발하지 못하는 등 폭력사태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교도관 감위부, 이감제는...원고에게 위 김아무개와 합의할 것을 강요하였고...계속되는 협박에 못이겨 결국 합의...재판정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는...원고가 위 각 불법행위일부부터 3년이 경과한 1996.5.1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피고는 시효완성 전에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사건2(사건번호 99가합35)

가. 97년 7월 3일 감호자 허아무개 씨가 유 씨에게 오물을 투척했다.

나. 96년 5월 17일부터 97년 4.14일까지 수회에 걸쳐 청원, 고소, 헌법소원 등을 위해 낸 집필신청이 불허됐고, 작성된 일부 문서도 발송 불허됐다.

다. 교도관들은 97년 4월 18일부터 9월 9일까지 계속해서 불법적인 계구를 사용했다.

라. 교도관 박수현은 97년 6월 16일, 같은 해 8월 7일과 9일 석사술 등을 이용한 고문을 했다.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담당교도관은...허아무개가 관구실에 면담을 하러 가는데 동행하지 아니하고...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 평소 그 출입문을 지정해 두고 필요한 경우에 이를 열어야 함에도 이를 열지 않았으므로...교도소 교도관들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발송을 불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특별한 사유 없이 교도소 직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고소, 청원, 국가

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교정직원 음해 등을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 (교도관 소외) 박수현의 증언... 하루에 2,3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계구인 수갑과 사슬을 이용...하지승을 한 사실... 원고는 위 계구사용 기간의 대부분은 별다른 소란을 피우지 아니하고 지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일단 원고가 진정된 이후에는 최소한의 계구를 사용하는 것 만으로 충분하다... 거의 6개월에 가까운 기간동안 계속하여 원고에게 계구를 사용한 조치는 정당한 계구사용의 한계를 넘었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교도관 소외 박수현이... 장원제와 함께 원고의 양 발목과 팔목을 수갑으로 채운 후 오른쪽 발목에 묶여진 석사술을 포승으로 묶어 배사구를 통하는 철창에 매달아 놓고 왼쪽다리는 포승에 묶어 복도 천장에 매달아 놓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진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1면에서 이어짐

향소심에서 가혹행위 입증 그리고 형사법정에서의 승소 등 유 씨가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많다.

유 씨는 계속되는 교도관들과의 갈등 속에서 수십 권이나 되는 법률서적을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공부를 했으며 급기야 '고소광(狂)'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유 씨가 출소 후인 1999년 1월에 국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수는 자그마치 102건(형사 60건, 민사42건)이나 된다. (김보영)

청송감호소 인권침해사건 판결문 요약

대구지방법원 인동지원 민사1부(재판관: 김주현, 김우겸, 이재근) 판결: 92년 사건 및 97년 사건에 대해 각각 5백만원의 손해배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전·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6월 15일(목)

제 1635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경찰청 나홀로 집시법 '개정' 의도된 설문조사, 개악 위한 명분쌍기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경찰청의 졸속성이 문제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npa.go.kr)에서 진행중인 '집시법 개정'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이다. 집시법 개정'에 대한 시민의 찬반의사를 물으면서 경찰청이 공교한 '집시법 취지 및 개정 방향'은 달랑 네 문단으로 △경찰청은 '물 흐르듯' 유연하면서도 엄정하게 집회·시위를 관리하고 있다 △경찰청은 '무취투탄 원

년'을 기록, 평화적인 시위문화 정착의 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최근의 노동계·운동권 학생 등의 불법·폭력시위는 경찰청의 노력을 위협하고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처벌강화와 도심지 집회·시위제한 등 집시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의 전부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라고 묻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경찰청의 일방적인 입장만 설명된 채 이뤄지는 설문조사

에 대해 계시판에는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이 올라오고 있다.

"의도된 질문, 설문조사에 대한 기본도 모르는 경찰" (김종현), "황당하다 못해 웃음이 납니다. 이런식으로 알량하고 방만하게 공정한 시민 여론조사인양 투표란을 만들어 놓다니요"(선량한 시민)

또한 "폭력시위는 싫다"고 밝힌 한 네티즌은 "그러나 폭력시위 방지를 위해 택하려는 방법이 근시안적이고 비합리적이며 그 자체가 폭력의 또다른 이름"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국경찰학회가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평화적 집회 및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학술세미나'에서도 경찰청의 의도는 노골적으로 표면됐다.

사전행사로 경찰청이 제공한 15분 분량의 영상물이 상영되었다. 이 영상물은 작년 12월 민중대회와 지난 5월 노동절 집회에 화염병이 등장하는 등 폭력·불법화됨으로써 경찰청의 무취투탄원칙이 위협받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토론자로 나온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실무자로서의 애로점을 이해시키는데 급급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집회·시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 권리로서, 현 집시법과 운영에 있어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과거 폭력시위 전력자 집회배제 등 경찰청의 개정방안은 그간 유연성 있게 대처해온 경찰청의 신뢰성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임을 경고했다. (김정희)

역사적인 남북정상 공동선언을 환영합니다!

행사와 동정

- '희년2000운동(Jubilee 2000)' 세미나
 - 때: 2000년 6월 15일 (목) 오후 2시 · 곳: 한국기독교 백주년기념관 4층
 - 주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제위원회 등 (02-763-7323)
- 경찰청 훈령8조의 인권유린 위험성과 대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 때: 6월 16일 (금) 오전 11시 · 곳: 종로성당 3층 강당
 - 주최: 성남 남부경찰서 알뜰수색 공동대책위원회 (02-837-8355)
- 이주노동자 인권보고대회 및 외국인력 도입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
 - 때: 6월 16일 (금) 오전 11시 · 곳: 성공회 대성당 프란시스코(시청앞)
 - 주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02-747-6831)
- 매항리 사격장 폐쇄촉구 결의대회
 - 때: 6월 17일 (토) 오후 2시 · 곳: 매항리 · 주최: 민주노총 등
- 리차드 스톨만 초청 토론회-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
 - 때: 6월 18일 (일) 오후 3시-6시 · 곳: 연세대학교 대강당
 - 주최: 진보네트워킹센터 (02-7744-551)
- 남북정상회담과 평화 · 통일 그리고 시민운동의 역할 심포지엄
 - 때: 6월 20일 (화) 오후 1시 30분 · 곳: 동국대학교 90주년 기념문화관
 - 주최: 참여연대 부설 (사) 참여사회연구소 (02-723-9581)
- 외환·금융시장 자유화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토론회
 - 때: 6월 20일 (화) 오후 2시 30분 · 곳: 한글학회 회관(광화문 4거리)
 - 주최: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02-778-4007)

매항리가 부른다, 17일 재집결

연일 주민회의, 주민들 '폐쇄운동'에 고무

매항리 주민들이 오랜만에 평화를 맞고 있다. 지난 2일 미군의 폭격훈련이 기습적으로 실시된 이후로 열흘이 넘도록 폭격 훈련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군측이 남북 정상회담 시기까지만 한시적으로 폭격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 평화는 빠르면 16일이나 다음주에 깨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매항리 주민들의 투쟁의욕은 매우 고조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격장 폐쇄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의 변형구 총무는 "지금 주민들은 평화롭게 농사일에 전념하고 있지만, 저녁이면 매일 주민회의를 열고 사격장 폐쇄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난 6일 열렸던 대규모 집회 이후 더욱 고조되었다. 변 씨는 "6일 집회 이후 주민들 사이에선 '우리가 더욱 똘쳐서 싸워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특히 12일 열린 매항리, 5리 마을 회의는 달라진 분위기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이 마을들은 '이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이주과'가 대세를 이뤘던 지역. 그러나, 12일 열린 마을회의에서 주민들은 사격장 폐쇄운동에 힘을 싣겠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하루동안에만 '사격장 폐쇄'를 위한 연관장에 115명의 주민이 서명을 했다는 소식이다. 변형구씨는 "기존에는 83%의 주민들이 이주를 원했지만, 이제는 이주 대신 사격장 폐쇄를 원하는 쪽이 그 만큼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10개 부락에서 3-4명씩의 대책위원을 선임해 '사격장 폐쇄 대책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열흘째 매항리에 머물고 있는 박항주 환경운동연합 정책실간사는 "주민들이 많이 고무되어 있지만, 주민대책위원회가 아직 튼튼하지 못하다"며 "매항리에 안정적으로 상주하며 주민들을 지원해 줄 사회단체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7일 2차 매항리 집결투쟁이 예정된 가운데 사회단체와 대학생 등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소파(SOFA) 개정 국민행동(삼남대표 문정현) 등 사회단체 소속 회원과 대학생들은 13일 오후 주한미대사관 앞 시민공원에서 '매항리 사격장 폐쇄와 관련된 미국측의 입장표명'을 요청하며 시위를 벌였고, 경기남부지역 사회단체들은 대책위를 구성해 매항리에서 농성을 할 계획이다. 또, 대학생들도 하계농활 시점에 맞춰 매항리에서 대거 농활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17일 오후 2시에 열릴 2차 집회는 민주노총이 주관할 것으로 한 가운데 1차

때의 수위를 넘는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창조)

철거민 시위

14일 오후 2시 30분경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소속의 장 모씨 등 철거민 3인이 청와대 정문 앞에서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전철연 관계자에 따르면 시위자들은 소복 차림을 하고 청와대 인근에서 차를 내린 후 50여 미터를 달려 청와대 정문 앞에 이르렀다. 5분여 만에 연행된 이들은 종로서를 거쳐 14일 저녁 현재 관악사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9일 민주당사 점거 농성으로 구속된 철거민 7명은 14일 현재까지 전원 목비결을 행사하고 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김진, 진선미 변호사가 이들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 (류은숙)

<기자의 눈> 남북정상회담의 '천덕꾸러기' 국가보안법

남북정상의 맞잡은 손이 한민족과 전세계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는 때이다. 그런데 신문에 머리를 박고 평양과 서울의 표정을 오가기 바쁜 눈이 한쪽 구석에서 찌푸려진다. 13일 오전부터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등 전국 20여 개 대학에서 학생들이 일제히 인공기와 태극기, 그리고 남북 단일기를 나란히 내걸면서 '잡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 잡음의 배후에는 '애정결핍증'에 몸을 피는 국가보안법이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양된 국민의 통일 의지를 보자니, 국가보안법에겐 이번 일이 삼일 동안의 외도(?)로 치부할 일이 아닐 것이다.

인공기 게양을 둘러싼 서울 시내 주요대학 관할 경찰서 보안과의 반응을 알아보았다. 이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혼란'이다.

대부분이 학교 당국에 철거를 요청한 사실을 시인했으나, "학교 내부의 일이니 학교가 알아서 할 일이다", "아직은 검찰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적극적인 수사는 하고 있지 않다. 검찰도 고심 중이라고 들었다"고 관망하는 반면, "우리 구역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겠다", "위법 사실이 있다면 대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반응도 여럿이었다.

학교 당국이 알아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 곳도 있다. 한양대에서는 인공기가 그려진 검은 그림을 학생처 직원이 훼손하자 학생들이 다시 보수하여 내거는 일이 있었다. 또한 한국외대에서는 "학생처 직원이 인공기를 때어내 경찰에게 증거물로 갖다 주었다"며 학생들이 14일 학생처에 들어가 항의농성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같은 날 저녁 명동성당 들머리. '홍겨운' 분위기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집회가 열렸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7년째 수배중인 진재영(29) 씨는 "두 정상이 악수하고 마주 앉아 화해, 협력, 통일을 얘기하는데 태극기, 인공기를 함께 달았다고 처벌 운운하는 것은 우스운 행태"라며 "철자리를 잃은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시간문제다. 이렇게 법 적용 문제부터 혼선을 빚는 것을 보면 이미 사문화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밝게 웃었다. (심태섭)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6월 16일(금)

제 1636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국보법 다시 수면 위로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반드시 개폐되어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의 개폐 가능성이 무르익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남북합의사항의 실천적 이행을 위해 국보법 개폐는 필요한 조치가 아니겠느냐는 반응이 앞선다. 송두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는 "국보법 개폐 등의 '후속적 조치'가 따르지 않을 때 이번 남북공동선언도 종전의 여러 합의서나 성명처럼 공염불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라지브 나라얀(국제엠네스티 한국담당관) 씨는 "남북정상공동선언의 전문을 볼 때 그 목표의 성취 가능성은 국보법 및 보안관찰법의 개폐와 함께 할 때만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완전폐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신에 차있다.

"국보법은 이미 사문화됐다. 지금

이야말로 국보법에 최후의 일격을 날릴 때이다"(박석운,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 집행위원장)

"국보법의 어떤 잔재도 남기지 말아야지 또다시 주물럭거리다면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에 대한 실천적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김영재, 민주노총 통일국장)

"한총련 대의원들은 계속 잡아가면서도 김 대통령 자신이 (국보법 상) 많은 죄를 짓지 않았는가? 국보법은 꼭 철폐해야 한다"(박성진, 한총련 대의원)

신중론자도 '대폭개정' 주장이다.

"남북관계가 신뢰 속에서 추진되기 위해서 적어도 대폭개정이 있어야 한다."(이부영, 전교조 위원장)

"긴세월의 국보법 개폐 싸움에 지치거나 관망했던 사람들이 나서서

확실한 때를 지어야 할 때다"(교애순, 광주인권센터 사무국장)

어찌됐건 이런 일련의 반응이 정치권을 압박하는 한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 정상회담을 지켜본 민주당 관계자는 "15대 국회 때 개정을 추진했으나 막혔다. 아직 공식회의를 통해 확인·통보된 바는 없지만 당연히 '제추진'이다. 민간 쪽에서 공론화 과정이 있으면 좋은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가보안법이 교류협력에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에 개정이 제출되어 논의중"이라고 대답했다. 얼떨결에 나온 거짓말이었을까?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된 바 없다. 이제 정부는 시민·사회단체만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을 위해 북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여당의 방침은 그간 주변조건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왔다. 98년 유엔인권이사회가 김근태, 박태훈 씨 사건을 심의하고 사실상 국보법 7조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자 이듬해 3월 정부는 '7조를 폐지하는 등 국보법을 개정하겠다'고 유엔에 정식 통보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불고지죄(10조)와 찬양고무죄(7조)는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하고 연내 정기국회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논의는 반국가단체 규정에서 '정부를 참칭하거나'를 삭제함으로써 북한을 반국가단체 개념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2조를 개정하고 주로 악용되는 7조를 대폭 개정되 3항(이적단체)은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 안마저도 공동집권 여당인 자민련의 반대로 상정에 실패한 제 15대 국회는 마감되었다. (류은숙)

만화사랑방



이동수

<특별기획>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① 파견노동과 위장 도급노동

“항상 불안해요, 언제 계약해지 될지 모르니”

노동권의 사각지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가 늘고 있다. 공식 통계 상 지난해 말 현재 임시직·일용직 노동자는 52.9%로 전체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임시직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노동자, 일용직은 1개월 미만의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는 훨씬 크다.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기업의 '노동 유연화 전략' 때문이다. 비정규직을 채용하면 상황에 따라 해고가 쉽고 비교적 낮은 임금으로 사람을 쓸 수 있는데다 각종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노조 활동도 약화시킬 수 있다. 노동자들은 이런 비정규직노동자의 상황을 '살인적인 저임금·장시간노동·항상적인 고용불안'의 노예라 달리 표현한다.

비정규노동자는 현재 임시·일용·시간제·파견직·용역직·촉탁직·계약직·사내하청·용역계약·소사장제·위탁계약 등 다양한 명칭과 형태로 존재한다. 본지에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용종속관계의 형태를 중심으로 나눠 각각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현실을 조명하는 기사를 4회에 걸쳐 실는다.

①회 근로계약관계와 사용종속관계가 분리된 고용 형태의 대표적 사례로 파견노동과 위장 도급노동을 다룬다. ②회 사용업체에 직접 고용되어 있긴 하지만 노동시간이나 근로계약기간의 차이로 차별적 취급을 받는 임시직·일용직·시간제 노동자들이 다뤄진다. ③회 법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노동자들, 이를테면 보험설계사·학습지도사들 편이다. ④회에서는 비정규 노동의 급증에 대한 대응방향을 검토한다. [편집자주]

KBS에서 차량운전사로 8년 넘게 일 해온 차준 씨. 그는 지난 5월 31일자 로 운전대를 놓아야 했다. 그를 이렇게 만든 것은 '파견노동자'라는 신분이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99년 말 현재 파견노동자는 5만3천218명에 달한다. 게다가 허가 받지 않은 파견이나 노무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난다.

인력파견업체에 소속된 채 다른 곳에 나가 일하는 파견노동자들은 사용업체의 계약 해지 통보 한 장이면 '갑출이 날아가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더구나 근로자파견법 시행 2주년이 다가오면서 2년 이상된 파견노동자의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무더기 계약해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6월 9일자>

2층의 고용 구조를 거치다보니 파견노동자들은 임금도 낮다. 대한렌트카에 소속돼 24시간 교대로 KBS 차량을 운전하는 한 파견노동자의 경우 계약

상에는 월 120만원을 받기로 되어 있지만 실제 손에 쥐는 돈은 93만6천원 뿐. 주60시간 가까운 장시간 노동을 하는데도, 법정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등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 언제나 계약해지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보니, 헌법상의 권리인 노동3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실제 방송사비정규운전직노동조합의 경우, 방송사 청원경찰의 폭력에 맞닥뜨려야 했다.

'노무도급' 형식을 빌린 '불법' 파견노동도 문제가 된다. '도급'이란 다른 업체에 일을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맡기는 것으로, 그 일을 하는 노동자에 대해 작업상의 지휘 감독을 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파견노동과 구분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노동자들을 지휘 감독하지 않는 만큼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노무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이 곧잘 문제가 되고 있다.

부곡에 위치한 (주)이랜드 물류창고

에서 일하는 유상현 씨는 '홍익'이라는 도급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다. 부곡물류창고에는 유 씨와 같은 도급업체 직원이 50명. 매일 아침 유 씨 등의 출석을 체크하는 것은 이랜드 관리자들이다. 이들이 작업지시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임금도 사실상 이랜드가 주는 것을 홍익이 중간에서 전달할 뿐이다. 최근 노동부의 조사결과도 이것이 '불법파견'임을 입증해주었다.

"의료보험·산재보험 어느 것도 적용받지 못해요. 다치거나 아프면 압담하죠." 실제 그의 동료 중 한 명은 다리를 다쳤는데, 이랜드와 홍익 둘 다 나몰라라해 결국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일을 그만 두었다고 한다. 창고에서 하루종일 뜯았으며 박스를 나르고 받는 유 씨의 월급은 오직 65만원. 하지만 이랜드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50만6천원에 비하면 처지가 나은 거라며 이야기한다.

낮은 임금보다 유 씨에게 더 걱정스러운 것은 고용불안. "항상 불안해요. 언제 갑자기 계약이 끝날지 모르니까요." 현재 유 씨는 동료들과 함께 이랜드에 직접 고용돼 고용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최승현, 이주영]

용공몰이 더 이상은 안돼 한국노동단 잇단 패소

15일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는 월간 「한국노동단」의 발행인 이도형 씨 및 전원영 기자에게 1억8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민주노총 등 9개 단체에게 지불할 것을 선고했다. 또한 선고 후 처음 발행되는 「한국노동단」에 정정보도를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한국노동단」은 97년 3차례에 걸쳐 「노동운동인가, 노동당운동인가?」 등의 제목아래 인권·사회·노동단체들을 「민주주의의 탈을 쓴 빨갱이」, 「김일성의 교시와 유헌에 충실한 좌익단체」 등으로 표현한 기사를 실었었다. 소송에 참여한 단체와 손해배상금은 인권을 운동사랑방(1천만원), 민변, 전국연합, 참여연대, 현대노조, 대우노조, 기아노조, 언노련(이상 2천만원), 민주노총(3천만원) 등이다. [김정희]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6월 17일(토)

제 1637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폭풍 전야’ 매향리

경찰 집회금지...우리는 사격장 ‘폐쇄’하려 간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매향리에는 여전히 긴장이 흐르고 있다.

17일 매향리에서 열릴 예정인 제2차 범국민대회에 대해 경찰이 '집회금지 결정'을 내렸다. 화성경찰서 측은 16일 "지난 6일 집회에서 폭력사태(사격장 철조망 훼손 등)가 발생한 점으로 미뤄볼 때 17일 집회에서도 폭력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에 집회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성경찰서 정보과 관계자는 "윗쪽의 결정"이라고만 밝힐 뿐 정확한 배경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에 따라 17일 매향리 진입로에서부터 경찰의 봉쇄가 예상되지만, 현지 주민과 사회단체들의 입장은 단호하다. 주민들은 이날 경찰이 들고 온 집회금지 통보서의 수령을 거부했으며, 집회 주관단체인 민주노총과 '불평등한 소파 개정 국민행동'도 '예정대로 집회를 치를 것'임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의 손낙구 교육전선실장은 "지금 경찰은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앞뒤를 못 가리고 있다"며 "불미스런 사태가 예상된다면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해야지, 이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16일 오전 매향리 주민과 사회단체들은 매향리 사격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과 한국정부의 폭력재개 방천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주민대책위원회 최용운 위원장은 "이주를 원했던 매향리, 5리 주민들조차 매향리 사격장 폐쇄 취지에 동감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했다"며 "사격장 폐쇄는 매향리 주민 전체의 바램"이라고 밝혔다.

매향리 사격장 폐쇄운동은 이번주를

이다. 소파개정 국민행동은 17일 매향리에서의 결의대회 이후 오는 20일부터 한달 동안 '매향리 사격장 폐쇄와 소파개정을 위한 국민선언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22일부터 사흘간 '반전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중이다. [이창조]

<논평> 유득형의 완전한 승리를 바란다

1980년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은 삼청교육대를 만들고 그 후속조치로서 사회보호법을 제정했다. 이것이 청송교도소 및 청송보호감호소의 출발점이다. 5만 7천명이라는 수용능력을 자랑하는 이 고립된 '육지의 섬'은 20년 동안 '인간 쓰레기'들의 정신을 뜯어고치는 '역사적 사명'을 수행해왔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청송에서도 뜯어고쳐지지 않았던 한 '인간 쓰레기'의 강인한 정신에 주목하게 된다. 유득형. 극한의 폭력을 몸으로 견디다 살아 돌아와 그 지옥을 준엄하게 고발하는 그에게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는 87년부터 두차례나 '청송'을 드나든 폭력 전과자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그가 자신의 존엄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걸고 벌인 웅장한 투쟁 앞에서 한낱 왜소한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고립된 '육지의 섬'에서는 폭력, 억압, 비리 등 인간성에 대한 온갖 모멸이 고질화되고 기본적 인권 따위가 그림에 그려진 종횡화만도 못하는 장식물로 전락하게 마련이다. 유득형은 황당하게도 이런 곳에서 폭력교도관을 고소하고, 법무부 장관에 청원하고, 헌법재판소에 소원하기 위하여 처절한 투쟁을 벌인 것이다. 당연한 일로서 그의 소송서류 집필신청은 철두철미 묵살되었으며 다시 그에 대한 징벌조치와 무시무시한 고문으로 되돌아왔다. 그는 고통스럽게 묶인 채 6개월 동안이나 폐쇄독방에서 살아야 했으며 고문당하다 똥 오줌을 바지에 싸는 일은 예사였다. 그의 손목, 정강이 그리고 발목에는 지금도 흉한 쇠사슬 자국이 지워지지 않는 상흔으로 남아 있다.

얼마 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유득형이 출소 후 제기한 소송 102건 중 민사 42건에 대한 일괄판결을 내렸다. 요컨대 집필을 방해한 처사는 국가의 불법행위로서 유득형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교도관의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교도관의 부정한 행위를 고발하는 고소장을 방해받지 않고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은 획기적인 전진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유득형의 몸에 남아 있는 참담한 상처와 청송 재소자들의 증언까지도 광그리 외면하고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기본적으로 교도관 편을 드는 비겁한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 점잖은 법원의 비겁함이 유득형의 승리를 '질반의 승리'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유득형은 앞으로도 험난한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 우리는 그가 자신을 고문했던 교도관들, 그 중에서도 특히 박수현, 장원재, 김관부라는 이름을 가진 '인간 쓰레기'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함께 영원히 이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을 약속하고자 한다. <본보 6월 14일자 참조>

<특별기획>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② 단시간·임시직 노동자

“우리가 소모품도 아닌데...” 노동자의 긴 한숨

단시간노동자, 임시직노동자는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되어 있으면서도 노동시간이나 근로계약 기간의 차이를 이유로 정규노동자와 차별적인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근로자'의 정의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노동시간이 정규직에 비해 단 1시간이라도 짧은 사람은 모두 단시간 노동자에 해당하게 된다. '임시직근로자'에 대해서는 법률상 정립된 개념도 없으며 정확한 실태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다. 흔히 계약직·축삭직·아르바이트직 등을 말한다. 문제는 이들 대다수가 정규노동자와 동일한 노동시간을 거의 같은 시간 동안 하면서도 차별을 받는다는 점이다. 낮은 임금, 사회보장 혜택으로부터의 제외, 계약 갱신기마다 맞닥뜨리게 되는 해고의 위협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사실 한국통신에 입사할 때 1년짜리 계약직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평생직장이 되겠거니 했지요." 근무 경력 17년, 현재 동대문 전화국에서 일하고 있는 윤백희 씨는 말했다. 지난해까지 한국통신의 8천5백여 계약직 노동자들은 재계약이 언제 되는지도 모른 채 수년간을 일해왔다. "회사에서 아예 우리들 도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난 5월 31일 대전·충남지역에서 17명이 예고도 없이 계약해지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 중엔 함께 일하던 부부도 있었다. 이어 같은 지역에서 2백 여명이 6월 30일로 계약이 끝난다는 통보를 받았다. '실업'이란 단어가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이제껏 공휴일도 없이 일한 대가가 일방적 해고라니... 우리가 소모품도 아닌데 너무나 거 아니예요." 20년 넘게 계약직으로 일해온 구강희 한국통

신계약직 노조 위원장은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사실 그랬다. 계약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경제위기를 이유로 145만 원의 임금이 90만원으로, 85만원으로 툭툭 떨어지나갈 때도 '잘릴까봐' 속으로 한숨만 쉬어야 했다. "초등학교 다니는 자식이 둘 있는데, 그 돈으로 아이들 교육 잘 시키겠다는 건 아무래도 무리겠지요?" 구강희 위원장은 말을 계속 잇는다. "차별은 임금 뿐이 아니예요. 하루는 월차를 내겠다고 보고하고 나왔는데, 다음날 회사에 가보니 출근부에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있더군요. 주 평균 52시간이 넘게 일을 해도 초과근무 수당도 없어요."

한국통신, '계속근로' 인정 회피

한편, 한국통신 측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들어오든지, 한국통신 일을 도급으로 하는 업체에서 잠시 일하다 다시 들어오라고 권했다고 한다. 동대문 전화국에서 일하고 있는 고철운 씨는 "일거리가 없어서 계약해지하는 게 아닌 거죠. 신규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처럼 꾸며서, 사실상 '계속근로'해 온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지난 98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통신노동조합마저도 이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의 규약에는 계약직도 조합원 가입대상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지만 실상은 계약직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계약직 노동자들은 별도로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현재 '단일사업장 내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묶여

노조설립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법의 노조라 사측으로부터의 탄압이 심해요. 하지만 이제까지 차별 받은 게 억울해서 멈출 수가 없어요. 정규직원이 될 거라 생각하고 들어온 후배들을 생각해사라도 계속 싸워야죠." (허혜영, 이주영)

한국은 지금 거리청소 중?

대대적 노점상 단속 항의 집회

16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각지의 노점상인, 철거민, 빈민 등 3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백만 노점 투쟁대회'(주최: 전국노점상연합-이하 전노련)가 열렸다.

이 날 집회는, 전노련 의장인 소순관 씨(4월 15일 구속), 연대 사업국장 최인기 씨(99년 12월 구속)의 실형 선고와 근래에 이루어진 노점상 철거로 인해 매우 격양된 분위기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구속 동지의 석방 △경기도 일대 철거 전문 용역반의 해체 △노점 합법화 추진 등을 요구했다. 그리고, 전노련 지도부 6명은 정부 당국이 이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삭발 결단식을 가졌다.

전노련 관계자는 "현재 노점 철거 상황이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벌어졌던 84년의 대규모 '거리 정화 사업'과 유사하다"며 "당국이 서울 아셈(ASEM) 회의 개최를 앞두고 무차별적 노점상 철거를 본격화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2주전 서울시 당국과 면담시 "지금의 노점상이 너무 많으니 70%를 줄이겠다"고 했으며 이는 "생존권에 대한 대책 없는 철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건설관리과 관계자는 "10월 아셈 회의와 관련 5월에 주요 도로의 노점과 기업형 노점상을 철저히 단속하라는 지침을 내린 적은 있다"고 했으나, "그 구체적인 수를 밝힌 적은 없고 무차별적 단속의 취지 또한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건설교통부 관계자도 "5월에 국도 상의 노점상 단속에 대한 지침을 내렸다"고 인정했다. (심태섭)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6월 20일(화)

제 1638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중국인 용의자 고문수사 시비

안산경찰서, "거짓말 하니까 몇 대 쥐어박았다"

19일 오후 2시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소장 박천용 목사, 이하 센터)는 경찰의 고문수사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9일부터 나흘간 경찰은 한국인 여성 남모(25. 여)씨 살인사건(4월 발생) 관련 용의자로 중국인 노동자 위모씨(29. 여) 등 중국인노동자 4명을 차례로 연행했다.

센터에 따르면 경찰은 위씨 등을 구금하면서 ▲성기를 노출시킨 후 혀대 로 때리고 여성 용의자의 옷을 일부 벗기고 바지를 찢는 성고문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끼어 누르기 ▲스테플러로 손톱을 눌러 잡아 찢기 ▲몽둥이로 손바닥과 발바닥을 때리기 등 가혹 행위를 했다.

그러나 별다른 혐의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자 13일 오전 위씨 등을 귀가시키며 "(상처에 대해) 누가 묻거든 길에서 넘어졌다거나 난폭한 애인이 때렸다고 말하라"고 했다. 풀려난 위씨 등은 현재 센터의 보호를 받고 있다.

"마치 70년대 고문전문가들이 보여준 행태를 보는 것 같다"며 충격을 표현

한 센터의 노종남 사무국장은 "피해자들의 진술서와 가혹행위의 증거사진, 진단서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안산경찰서 관계자는 "(센터쪽의 주장이) 사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자체조사를 해보니 (형사들이) 용의자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거짓 말을 하니까 몇 대 쥐어박았을 뿐"이라며 "중국인 용의자들을 조사해봐야

타다다다! 매항리 폭격 재개

"저들이 사람이냐?" 진저리치는 매항리

19일 오후 4시 45분 매항리. 미군의 기총사격 세례에 40여일 간의 짧았던 평화는 깨졌다.

아침부터 폭격을 알리는 황색기가 사격장 입구에 흩날리고 미군기의 저공비행이 팽팽한 긴장을 유발하더니 기어코 폭격은 재개됐다. 폭격은 밤에도 이어져 밤 10시 50분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보통 자정까지도 폭격을 했다고 한다.

폭격에 항의하는 주민과 사회단체 회원들은 사격장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어김없이 한국 경찰이 이들을 막아섰다. 앞장섰던 문정현 신부(소과계정 국민행동 상임대표)가 경찰에게 떠밀려 주저앉았고 이를 말리던 학생들에게는 방패세례가 쏟아졌다. "저것들이 농약을 먹었지", "이렇게 폭격소릴 다 듣고도 모른척하는 인간들이 사람이냐?"

17일에도 경찰의 원천봉쇄와 돌팔매질에 경악했던 주민들은 폭격이 재개된 19일에도 변함없는 경찰의 폭력에

알렸다. 양쪽 주장이 거리가 있고 왜곡·과장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 "현재 경기도경의 감찰을 받고 있다. 우리 스스로도 진실을 모른다. 사실이 드러난다면 형사처벌·징계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도 경찰이 몽골인 노동자를 절도용의자로 몰아 신문하는 도중 얼굴에 총을 쏘아 중상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강제출국을 기도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가혹행위 사실을 전면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진상을 규명하느냐 은폐하느냐의 공은 경찰에게 던져졌다. (류은숙)

원성을 높였다. 한편 폭격이 재개됐다는 소식을 듣고 대학생 50여명이 저녁 7시 경 서울 광화문의 미대사관을 향했다. 이미 미대사관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던 경찰은 교보빌딩 앞에서 이들을 가로막았다. "살인적인 매항리 폭격 즉각 중단하고 미국은 떠나라"고 외치는 시위대와 경찰의 몸싸움은 격렬했다. 매가폰을 든 경찰 지휘자는 "여러분은 시민의 비웃음을 받고 있다. 더운 여름에 힘 자랑 하지 말라"고 비아냥거렸다. 경찰의 완강한 봉쇄에 결국 시위대는 미대사관으로 가지 못하고 종로 쪽 인도로 행진하다 명동성당으로 향했다. 하루종일 경찰과 매항리 사격장 철책을 상대로 씨름한 문정현 신부는 "죽으려 온건데 죽으려도 못간다. 총맞아 죽겠다는 데 죽을 자유도 없으니 착잡하다"며 한탄했다. 이러한 울분을 안고 20일 11시 매항리에서는 '매항리 사격장 폐쇄를 위한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류은숙)

- ▶ 한단석 교수(국가보안법) 6월 20일 오후 3시 서울지법 523호
- ▶ 양지마을 인권유린 피해자 민사소송 속행 6월 20일 오후 2시 서울지법 559호
- ▶ 신동훈(96년 건국대 프락치 구타사건) 6월 23일 오후 4시 동부지법 1호
- ▶ '한국사회의 이해' 결심공판 6월 26일 오후 3시 창원지법 315호

인 권
시 평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훈 (한겨레 기자)

요즘은 뭐가 뭐지 도대체 모르겠다. 분단 반세기만의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던 지난 13-15일. 난 롯데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꿈에도 상상해보지 못한 것이었다. 김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악수로 만났고 헤어질 때 포옹을 했다. 그리고 14일 밤엔 민족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연방제 통일방안 등에 합의했다. '우리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적어도 공식적으로.

그 뒤로 많은 일이 벌어졌다. 휴전선 양쪽에선 분단 반세기 동안 정말 집기에도 이어지던 상호비방방향이 끊겼다. 평양에 갔던 사람들은 '밭힐 순 없지만 놀랄만한 합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최악의 반민주주의인 국가보안법도 종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것 같다. 내가 보기에 적어도 국가보안법 개정은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장강의 큰 흐름인 것 같다. 그러나 안심하기 이르다. 어떻게 개정될 것인가, 폐지는 불가능한가, 인권운동가들은 이런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것 같다. 예상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개정의 방향은 우선 남북교류협력에 장애물이 되는 조항을 손보는 쪽일 것 같다. 인권의 관점보다는 남북관계의 관점이 개정의 주된 접근법일 것 같다는 예기다. 이것도 엄청난 진전이기는 하다. 그러나 인권의 외침이 경제적 요구와 정치적 요구에 묻힌다면 이는 불행한 일이다. 인권 운동가들에겐 갈 길이 멀어 보인다. 19일 기자회견에서 드러났듯이 남북의 화해와 국가보안법 개폐에 사실상 반대하는 한나라당을 축으로 한 보수진영을 제어하면서, 우왕좌왕 멈춰서려는 민주당을 견인하면서, 민주적 시민과 민주운동진영의 숙원인 국가보안법 개폐를 여하히 현실화 할 수 있을까.

고백할 게 한가지 있다. 13-15일 롯데호텔에서 일하면서 마음이 무거웠다. 호텔 앞마당에선 롯데노조가 비정규직원들의 정규직화와 임금인상을 내걸고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얼핏 보는데 대오는 감했다. 그러나 어느 신문도, 어느 방송도 한겨레는 이를 취재했으나 내부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겨 지면에 신지 못했다.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정상회담이 핵폭탄이라면, 롯데노조의 파업은 잣단 속의 태풍이었을까. 그냥 묻히고 말아야 했을까.

또 한낱 프레스센터에는 내외신 기자가 북적거렸다. 화장실이 당연히 붐빌 수밖에 없었다. 호텔 화장실은 웬만한 수준의 집 안방보다 깨끗하다. 끊임없이 청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롯데호텔 화장실에도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있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오가니 아예 출입문에서 서서 섬 없이 청소를 하고 있었다. 정규직원이 아닌 용역 회사 파견노동자였고, 하루 2교대 12시간 노동에 월 60만 원을 받는다고 했다. 난 '고맙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 말고는 달리 할말이 없었다. 요즘은 머리가 너무 아프다. 내 용감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주간인권호름

(2000년 6월 13일 - 6월 19일)

1. 7천만의 염원 안고 남북정상 첫 회담

분단 55년만에 처음 갖는 남북정상회담 열려 (13일)/ 김대중 대통령·김정일 국방위원장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에 관한 문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문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 △교류협력(경제·사회·문화등 다방면) 등 4개항에 합의하고 합의문에 서명 (14일)

2. 남북정상회담의 천덕꾸러기 '국가보안법'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서울대 등 전국 20여 개 대학구 내에 인공기 계양. 검찰이 주동자들을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혀 파문 (13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개폐논의의 다시 수면위로 떠올라 (15일)

3. 한반도는 평화로, 매향리는 어디로?

매향리 미군 사격장 폐쇄를 위한 범국민대회 경찰 46개 중대 병력에 원천봉쇄 (17일) 지난 5월 8일 오후사과 이후 40여 일간 중단됐던 미군 폭격재개 (19일)

4. 매카시 미군 상병 징역 8년 선고

한국인 여성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도 기소된 주한미군 크리스토퍼 매카시 상병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8년 선고 (16일)

5. 재판받을 권리를 지키자

대법원 판결,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을 검사가 재판이 끝난 후 다시 소환해 추궁한 끝에 법정증언을 바꾸는 진술을 받아냈다면, 그 진술조서는 유·무죄를 가리는 증거로 쓸 수 없다' (15일)

6. 남북어부 김성학 씨 폐소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 부장판사), 고문기술자 이근안씨의 고문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남북어부 김성학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며 원고패소 판결 (14일)

7. 용공몰이 더 이상은 안돼, 한국노동단 또 폐소

시민단체와 노동조합들을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좌익공공세력으로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9개 단체가 월간 <한국노동단>과 발행인 이도형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국노동단은 1억8천만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실으라"고 판결 (15일)

8. 외국인 노동자 가혹수사 서비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기자회견 갖고 안산경찰서의 중국인노동자 4명에 대한 고문수사 폭로 (19일)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사람이 있는데도 사격연습

신부·학생 등 매향리 폭격연습장 점거, 연행

분노는 계속된다.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향리 농성에 대한 미군의 폭격연습은 멈추지 않았다.

20일 오전 최홍수 신부(군산미군기지 우리평찾기 시민모임 집행위원장) 등 12인이 매향리 앞바다의 농성 진입을 시도했다. 대부분이 도중에 연행당하였으나 아침 일찍부터 갯벌에 몸을 숨기고 있던 최 신부와 대학생 1인은 오후 4시 30분 경 농성에 올라 전지에 그려간 대형 태극기를 펼쳤다. 주민대책위 사무실에서는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실에 전화를 해 "농성에 사람이 있으니 폭격을 즉각 중지하라"고

요청했다. 곧 경찰헬기가 전경을 농성에 실어 날랐고, 최 신부 등은 탈진상태에서 연행됐다.

최 신부 등이 농성에 오르는 동안 미군헬기에서는 공포탄을 쏘아댔고 끝내는 기총 사격이 있었다.

최 신부는 면회시 "공포탄은 참을 수 있었는데 사방에서 쏟아지는 기총사격의 섬광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웠다"며 "어떻게 사람이 있는데 사격을 할 수 있는지 놀라울 뿐"이라고 줄곧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최 신부는 기총사격으로 인한 충격과 분노로 단식을 하고 있다.

새로 나온 영화 여성노동자이야기 '평행선'

'평행선'은 정리해고가 법제화된 후 노사정 합의에 정리 해고된 현대자동차 144명 식당여성조합원들의 3년간의 투쟁을 고스란히 담은 작품이다. 98년 36일간의 파업, 1년 후인 99년 월직복직을 외치며 외롭게 시작한 투쟁과 2000년 노조 앞에서 해고자의 신분을 보장하라며 철야·단식농성에 들어가게 된 과정을 보여준다.

평행선의 초점은 정치·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사회적 약자인 여성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유형무형의 폭력이다. 여전히 남성은 생계중심자이고 여성은 생계보조자라는 인식이 팽배한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는 여성노동자문제가 바로 미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이 문제는 우리사회 단편을 압축해 드러내 놓은 것일 수밖에 없다.

평행선 제작팀인 노동자영상사업단 '희망'은 제1회 전주영화제 페미니스트 비디오 액티비즘부문에서 특별상영을 하였고, 얼마 전 서울에서의 시사회를 마치고 전국 상영회 일정을 잡고 있다. 지금까지는 노동영화가 비디오로 배포하는 배급방식이었지만 이번 평행선만큼은 관객들과 직접 호흡하고자 상영회를 준비했다. 비디오로 배포되면 저렴한 가격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영회를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제작여건에서도 디지털 시스템을 고수하면서 노동영화는 화질이 좋지 않아도 된다는 편견을 극복하려 했기 때문이다. 또한 상영회에 일정한 금액을 책정한 것은 이런 방식이 제작비 충당에는 턱없이 부족하더라도 이후 독립된 제작방식을 저변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전국 어디에서나 '희망'에 상영회를 요청하면 영화를 볼 수 있다. [희망 대표 이윤주/문의 02-831-8895]

2000년 6월 21일(수)

제 1639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화성경찰서에 연행돼 있는 사람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황기형, 김효연, 김영경, 김성진(이상 대학생), 구은주, 고원석(이상 다큐 A TV 작가), 양인철(시민) (류은숙)

오토론 구사대 폭력난무

경찰, 폭행 당한 해고자만 구속

한화 오토론 구로공장에서 구사대에 의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결과는 해고노동자 3인의 구속이다.

17일 오전 11시경 오토론 해고노동자들의 텐트 농성장에 구사대 40여명이 들어닥쳤다. 이들은 현수막과 대자보에 페인트칠을 하고 텐트를 질박이나 부렸다. 또한 구사대는 이에 항의하기 위해 모여든 지역의 노동자들과 대학생들의 머리를 휘어잡고 허리를 짓밟는 등 집단폭행을 가했다. 이로 인해 시립대 학생인 전광재 씨가 뇌각막 출혈로 전치 4주의 부상을 입는 등 많은 사람이 다쳤다.

18일에는 구사대에 이어 경찰이 등장했다. 경찰은 폭행을 가한 구사대에 대한 수사 요청을 묵살하고 오히려 72명의 노동자와 대학생들을 집시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연행하였다.

20일 오토론 해고 노동자 3인에게는 '업무방해·재물과괴·주거침입·집시법위반'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나머지 연행자는 불구속 입건(37명) 및 즉심(32명) 처리되었다.

구속된 이상희 씨 등 3인의 오토론 해고 노동자는 98년 회사의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관련한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후 재입사·재해고를 겪으면서 1년 넘게 회사 앞 텐트에서 복직농성을 벌여왔다.

이 사건에 대해 민주노총 해부투위 총무차장 박지연 씨는 "해고반대투쟁을 꺾으려는 사업주와 검·경의 합작품"이라 비난했다. (류은숙)

<특별기획>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③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노동자'

“작은 사장?” - “천만에, 우린 노동자”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다.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애니메이터, 학원강사, 전력회사 위탁수급원, 신문배달원 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 중 일부는 노동조합법 상의 근로자임은 인정받았으나 여전히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성'은 인정받지 못해 퇴직금·연월차휴가·초과근로수당·최저임금·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 등 기본적인 노동권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의 고용 계약형식이다. 사용자와 도급 혹은 위탁계약을 맺었거나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은 정기적으로 출·퇴근해 회사측의 지휘 감독에 따라 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받는 돈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이에 이들은 자신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4조 :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출근체크하는 개인사업자 봤나요?

6월 20일 점심 무렵 천호동 교보생명 앞. 한 여성의 목소리가 길가는 이들의 발을 붙잡는다. "우리는 개인사업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노동자예요" 마이크를 쥔 사람은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교보생명으로부터 지난 6월 1일 해촉당한 보험설계사 임미령 씨다. 보험설계사들은 말쑥과 다리뚱으로 보화를 '따내' 보험회사를 먹여 살린다. 하지만 노동자의 권리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장기근속수당도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 여성들이 대부분이지만 생리휴가·출산휴가는 먼 이야기일 따

름이다. 이러한 부당한 대우는 회사가 보험설계사들을 '개인사업자'로 규정하는 데서 비롯된다.

"출근 체크 받는 개인사업자 본 적 있어요?" 길가는 사람들에게 유인물을 건네주던 동료 보험설계사 이순녀 씨는 말이 안된다고 고개를 가로젓는다. "개인사업자라고 해놓고 되레 하루만 출근을 안 해도 기본 수당을 깎아요. 그뿐 아니죠. 회사 돈을 수급해주는 건데 임금 수수료는 우리더러 내래요" 즉, 겉테기뿐인 '개인사업자' 규정은 되레 보험설계사들을 오히려 해고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등록은 '합정'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는 이들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다. "아침·저녁마다 출퇴근 카드기 찍어야 하고, 회사에서 작업 감독 받으면서 일을 해요. 근데 사장 말로는, 너 현 소사장이고 우리랑 평등하다고 해요" 경력 16년의 애니메이션 노동자 유재운(전국 애니메이션 노동조합 위원장) 씨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이다.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애니메이터들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무렵. 당시 애니메이션 노동자들은 그것이 '합정'인 줄 몰랐다.

오늘날 '개인사업자'라는 규정은 애니메이션 제작회사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데 심본 활용되고 있다. "일 없는 겨울철엔 해고하면 그만이죠. 4대 사회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건 물론이며 퇴직금이나 유급휴가도 안 줘도 되죠. 사장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도예요" 유재운 씨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 결성에 적극 나선 계기는 3년 전 함께 일하던 선배가 위암으로 죽은 일이었다. 회사는 산재보험 혜택은 물론, 그의 가족들에게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 유재운 씨는 '에손'이란 회사를 다니다 그만둔 9명의 애니메이션 노동자들이 회사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낸 결과가 어떻게 나

올지를 주목하고 있다. 애니메이터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 마느냐에 이번 결정이 좌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영]

“빨간불”, 짓밟힌

정신지체여성장애인의 성

정신지체여성장애인의 성이 짓밟히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원장 조창영, 이하 센터)는 20일 밤배동 센터 사무실에서 '성폭력에 짓밟히고 있는 정신지체여성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5월 사이에 4건의 정신지체여성 성폭행 사건이 접수되었다. 정신지체여성에 대한 성폭행이 피해자의 특수한 조건상 잘 드러나지 않는 현실에서 볼 때 4건이라는 수치는 1달에 1번꼴로 보고된 것으로 정신지체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임을 드러내준다.

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에서 가해자는 친한 이웃주민과 직장간부 등 피해자를 잘 아는 주변인물들이다.

가해자들은 정신 연령이 초등학교 수준에 머무는 피해 여성들을 '닭뿔김이나 천 원' 등 사소한 물질로 현혹하여 지속적인 성적 노리개로 삼아왔다. 또한 목격자나 피해자의 부모들이 가해자들과의 유대관계 때문에 증언이나 고소를 꺼리는 가운데 가해자들은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고 있다.

센터의 김세현 간사는 "98년 성폭력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법에 저촉된 예가 없다"며 "최근 사회적으로 성추행, 성추문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건 비장애 여성에 대해서고 장애여성에 대한 대비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센터가 기자회견을 마련한 배경에는 마을 주민의 지속적인 집단 성폭행으로 충격을 준 '강릉 K양 사건' 재판이 있다. 센터는 이번에 강력하게 처벌하는 판례가 나온다면 현재 접수된 다른 사건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계기로 장애여성 성폭행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세워지길 희망하고 있다. [류은숙]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6월 22일(목)

제 1640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검찰 '청송' 폭력교도관 감싸기?

독직폭행고소에 시간만 질질 끌다 "무혐의"

청송제2교도소 수감당시인 93년 교도관들로부터 심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양만신(46세,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중) 씨가 작년 8월에 제기한 독직폭행 고소사건이 지난 9일 검찰에 의하여 무혐의처리 되었다.

양만신 씨는 93년 6월 14일 청송제2교도소로 이감되던 바로 그날 교도관들로부터 뚜렷한 이유없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양 씨의 항의는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었다. 10여명의 경비교도대와 교도관들이 달려들어 양 씨의 옷을 벗긴 채 위키발로 짓밟아 온몸에 피멍이 들고 피부가 벗겨졌다는 것이다. 한 교도관이 양씨의 목을 졸라 벌어진 입안에 흠을 퍼넣는 바람에 까무라치기도 했다. 다음날인 15일 오전에도 양 씨는 '제소자 준수사항'을 위유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시 심하게 폭행당했다고 한다.

16일, 양 씨는 순시하는 배병도 소장에게 이 사실을 호소했으나 오히려

"조사방에 넣으라"는 명령이 되돌아왔을 뿐. 교도관들은 즉각 양 씨를 수감과 포승으로 결박하고 온몸에서 피고름이 흐를 정도로 구타했다고 한다. 견디다못한 양씨는 9월 7일 성기 일부를 자르는 자해까지 감행했다. 이후 3백여일 동안 양 씨는 수감2개와 력수감에 묶인 상태로 생활해야 했다.

시효 5일전까지 시간 끌다 "무혐의"

같은 해 청송에서 광주교도소로 이감된 양 씨는 배병도 소장 외 폭력교도관들을 고소하려 온갖 노력을 했지만 광주교도소 당국이 집필을 허가하지 않아 6년이라는 세월을 허송했으며, 지난해 8월이 돼서야 비로소 고소장을 낼 수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담당검찰청은 지난 9개월간 의성지청에서 창원지청으로, 창원에서 대구로, 대구에서 창원으로, 창원에서 다시 의성지청으로 변경됐

다. 결국 의성지청은 지난 9일 공소시효를 단 5일 남겨둔 채 '무혐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노골적인 폭력교도관 감싸기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청송감호소 출신 윤치고 씨는 "93년 6월이라면 감호소에서 교도관으로부터 심하게 구타당한 어떤 감호자가 죽고 전 재소자가 단식투쟁을 하다 무참하게 진압당한 직후여서 매우 살벌한 시기였다"면서 "당시 분위기로 보아 양 씨가 당했다는 교도관의 폭행은 충분히 있고도 남을 일"이라고 말했다.

양만신 씨는 지난 12일 공소시효 말료 이들을 앞두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제 양 씨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방법은 거의 없다. 투쟁의 전망은 결코 밝지 않은 셈이다. [김보영]

"수용자 알권리 최대한 보장"

서울행정법원 판결

"수용자에게 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알권리의 행사이므로 국가는 원칙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김치중)이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정형기(28, 전 감총련 집행위원장) 씨가 <정보공개자료집2>라는 책자가 반입되지 않자 교정당국을 상대로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관련기사 본지 3월 25일자>

당시 교정당국은 이 책자에 대해 ▲발행인·저자·발행 목적이 불분명 ▲법무부 관련 문서를 무단 복제한 것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자신을 애국운동가이자 양심수로 표현해 동범으로 수용된 원고를 교무시키는 등 교화에 부정적 ▲수용자의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행위를 부추긴다는 등의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이유 없는 불법적 처사라고 일축했다. [김보영]

행사와 동정

- 군대내 사망사고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 때: 6월23일(금) 오후 2시 · 곳: 명동가톨릭회관 7층 강당
 - 주최: 천주교인권위원회 (02-777-0643)
- 월간 「말」 창간 15주년 기념식
 - 때: 6월 23일(금) 오후 6시 30분 · 곳: 마포 불교방송국 3층 대법당
 - 주최: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월간 말 (02-711-2552)
- 북한어린이돕기 교회여성연대 발족식과 기자회견
 - 때: 6월 26일(월) 오후 5시 · 곳: 예장 여전도회관 2층 김마리아 기념관 (703-3100) · 주최: 북한어린이돕기 교회여성연대 (708-4181)
- 민주화운동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 공개토론회
 - 때: 7월 3일(월) 오후 2시 · 곳: 국회 현정기념관
 - 주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02-764-1684)

매항리, 거침없는 폭격연습 대학생 6명 기총사격장 점거시도 또 연행

21일은 본격적인 폭격연습이 매항리를 감타한 하루였다. 그간 계속된 집회와 농성점거 투쟁으로 주춤했던 폭격연습이 이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0-60 차례 진행됐고, 야간사격도 3차례 정도 있었다. 폭격에 대한 저항 또한 멈추지 않았

다. 소과개정국민행동의 김종섭 조지국장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0분경 대학생 6명이 목에 태극기를 두르고 기총 사격장을 향해 뛰어 들었다. 이들은 사격장 표적 근방에서 뒤쫓아간 전경들에게 붙잡혀 연행됐다. 매항리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2

<토론회>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 정당방위 인정될 수 없는가?

'남편을 죽여놓고 웬 말이 많으나', '그냥 살인으로 몰고 가기에는 문제가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 '침해에 대한 정당한 방위를 했으니 벌하지 말아야 한다' 십 수년 동안 남편의 구타에 시달린 여성들이 남편을 살해한 사건들에 대해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놓여있는가? 한국여성전화연합(공동대표 이문자)은 21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긴급토론회를 갖고 '선처에 대한 호소'를 넘어선 '정당방위와 면책'의 논리를 고민했다.

발제에 나선 한인섭 교수(서울대 법대)는 "지금까지 법학의 논리는 가정을 평화의 장소로 보고 폭력이 좀 지나쳐도 참아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여기서의 '인내'란 일방적으로 여성에게 요구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남편에 의한 아내 살해가 대부분 폭행치사로 단기실형 내지는 기소유에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해 아내에 의한 남편살해는 어느 순간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지경에서 저질러졌음에도 대부분 살인죄가 적용되었고 '정당방위나 심신장애'를 인정할 사례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판례의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하는데 인색하여 '막 폭력이 행해질 때의 방어만이 인정된다'는 '현재성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고 있다. 이를 남편살해 여성들에게 적용시켜 보면 공격받을 때는 대항할 힘이 없으니 정당한 방어를 할 수 없고, 공격을 받지 않을 때(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다가 쉬는 중에) 생긴 일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남편의 휴식을 '폭력을 위한 충전기'로 보고 정당방위의 요건에서 '현재'라는 말 자체가 눈앞에 급박한 것만이 아니라 '상시적 폭력성'의 의미로 해석돼야 한다 ▲ '그날 그 순간'만의 폭력을 '점해'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십 수년간 자행된 폭력을 감안하여 '누적적 점해' 차원에서 남편의 폭력을 재해석해야 한다 ▲ 남편의 방어능력을 기준 삼아 '방위'가 상당한 이유를 가졌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관점에서 '다른 행위의 선택 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현미 교수(이대 법대)는 "기존 판례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살인사태에서 정당방위를 너무 제한적으로 해석할 뿐 아니라 면책사유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속적인 남편의 폭력 속에 살아온 여성들이 대부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정신과적 질환에 걸린다고 하나 이를 근거로 한 면책부분의 검토는 등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는 23일(금)에도 12년간 남편의 폭행과 성학대를 받은 끝에 올해 4월 순간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신모 씨의 결심공판이 있다. 이날 토론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재판에서만큼은 선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당방위이며 무죄임을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했다. (류은숙)

백여 명은 폭격이 계속되는 내내 사격장 입구와 마을회관 앞에서 함의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2일부터 2박 3일간 매항리에서는 반전박람회가 열린다. (류은숙)

에바다 새 이사진 구성 난항 다시 4년 전 '원점'으로

4년째 표류해온 에바다 사태가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3월 31일로 전 이사진의 임기가 끝났지만 6월 말인 지금까지도 새 이사진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사진 구성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비리 주범으로 지목돼 물러난 최성창 전 대표이사의 복귀 시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에바다 농아원의 권오일 교사는 "평택 시청은 최성창 전 이사를 이번 개편 이사진에 포함시키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며 "최씨 본인의 복귀는 절대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에바다비리재단퇴진과정상화를 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3일부터 평택시청 앞에서 최성창 이사 복귀를 반대하는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편 정채별명의 집단이 에바다 사태 해결을 바라는 강한 여론을 반영하여 새 이사 후보로 추천된 김철준 변호사(다산인권센터 소장)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21일 오후 1시 30분 경 수원지법 근방에 위치한 김철준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는 '에바다동참회'라고 주장하는 농아인 13명이 '김철준 에바다 이사 절대반대'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6월말까지 같은 장소에 집회신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권오일 교사는 "에바다엔 공식적인 동창회도 없고 그들은 에바다 출신도 아니다"라며 유령단체임을 주장했다.

96년 에바다 농아원생들이 비리 재단의 착취와 인권유린을 고발하는 농성을 시작하며 내건 첫째 요구는 '비리재단인 최씨 일가의 퇴진과 민주적 이사진 개편'이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4년 전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 (류은숙)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6월 23일(금)
제 164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이랜드 노조파업 7일째 비정규직 조직화에 회사측 폭력 대응

"여름에는 짬뽕같은 겨울에는 냉장고 같은 참고에서 한달 내내 8시간씩 박스 나르면서 받는 돈이 5십만 6천원이야. 15만원 더 줄테니 용역업체로 넘기겠다고 한다. 나는 물건이 아니다" (이랜드 비정규직 최모씨)

지난 3월 결성된 이랜드 노조 비정규직 부곡분회는 ▲임금인상(5십만 6천원에서 7십2만6천원으로) ▲불법도급 철폐 및 불법파견근로자 직접 채용 ▲일방적 계약해지 금지를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7일째 파업중이다.

(주)이랜드는 의류도매를 주로 하는 회사로서 상품을 입고 받아 각 매장별로 분배하여 출고하는 참고업무는 필수적인 업무다. 그런데 회사는 이 참고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일명 '아르바이트'라 부르는 비정규직과 도급제의 임시직 노동자로 채우고 있다.

이에 대해 홍윤경(이랜드 노조 교육실장) 씨는 "업무는 상시 필요한 업무인데 '업무가 단순하다'는 이유로 회사는 아르바이트로 왔다가길 원한다. 물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에게는 '생계'를 걸고 있는 직장"이라며 "상시적으로 1백 명 가까운 업무를 아르바이트로만 이용하는 것은 노동력의 착취"라고 말한다. 홍씨의 말처럼 기업은 적은 임금으로 쓰고 쉽게 자를 수 있는데다 조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비정규직에 대한 잘못된 '호감'에서 이들의 노동을 '아르바이트'로 치부하는 것이다.

저임금만이 아니라 불법파견근로와 일방적 계약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안케 하는 요소이다. <관련기사 본지 6월 16일자 2면> 그러나 교섭결과를 기다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난 5월 26일 회사는 "임금인상은 장기적 대안이 아니므로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노조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결국 지난 16일 파업에 돌입하자 회사의 첫 반응은 농성 천막을 찢고 쟁의물품을 내동댕이치는 폭력이었다. 그 뒤에도 회사측의 농성장 강제철거는 5차례 이어졌다.

그럼에도 즐기차게 이어지고 있는 이 싸움은 비정규직 노동자만의 것은 아니다. 이난주(이랜드 노조 사무국장) 씨는 "이랜드 노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하는 하나의 노조"라며 "부곡분회 비정규직 동지들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하자고 이랜드 노조 정규직 간부들은 결의했다"고 말한다.

회사가 IMF이후 핵심 관리직 외에는 정규직을 뽑지 않고 불법파견근로로 대치를 펴고 있는 현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전 노동자의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조는 회사측이 성실한 교섭에 임할때까지 파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류은숙)

매항리, 연행자 석방

지난 20일 매항리 농성 점거 투쟁으로 연행됐던 최중수 신부와 김성진 씨 등 8인이 22일 오전 10시 불구속 입건된 뒤 풀려났다.

최 신부는 "석방됐다고 기쁜 건 하나도 없다"며 "하루아침에 끝날 싸움이 아니다. 모두가 매항리 현장에 와서 봐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매항리에는 미군폭격이 없었다. 매항리 대책위측은 "연 이틀 사격장에 사람들이 진입한 일로 미군측이 여론악화를 의식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추측하고 있다. 또한 이날 전국각지의 대학생 400여 명이 매항리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류은숙)

만
화
사
랑
방



이동수

<특별기획>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④ (끝)

'21세기 노예', 비정규직의 사슬을 끊어라!

지난 1월 정부는 '1년 미만 단기계약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을 발표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좀 나아진게 있냐'는 질문에 한 노동자는 "그건 사기죠"라고 거침없이 말한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을 부채질하고 있는 판에,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이 나아질리 있겠느냐"고 오히려 그는 반문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일용·임시직 노동자의 비중은 지난 4월 52.7%에서 52.9%로 더 높아졌다. 신규 취업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근로자 파견제 철폐

해결책은 비정규직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우선적인 손질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3조다. 제23조는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일용직·임시직)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상용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임시직노동의 대상을 명확히 제한하지 않고 있어 사용주가 정규직을 임시직 노동자로 대체하는 추세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의 심동진 조직부장은 "임시직 결원이 생긴 경우(1년 이내), 일시적 업무가 생긴 경우(6개월 이내)를 제외하고는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해진 기간을 초과해 고용이 이뤄졌을 경우는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 예컨대, 1개월 혹은 3개월 단위로 계약이 갱신돼 적게는 1년 이상 많게는 십수년을 일해온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와 같은 경우 정규직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파견제의 철폐 또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은 2년 이상

된 파견노동자는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파견법 제정 2년이 다가오자 사용주들은 직접 고용은커녕 오히려 파견법의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파견기간의 1년 추가연장 △해고 후 파견노동자의 사용금지 기간을 현 2년에서 6개월로의 단축 등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파견근로가 정규직을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파견법의 개악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근로자파견제가 철폐되어야 한다. 근로계약을 맺은 업체와 사용종속되는 업체가 분리되는 파견근로는 필연적으

로 중간착취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위장도급 등의 불법적인 근로자 공급사업도 처벌 규정을 강화해 철저히 규제돼야 한다.

근로기준법 적용·단결권 보장

마지막으로 노동시간·휴일·임금 등 인간다운 노동의 최소 지표인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위탁계약직 노동자(골프장 경비보조원, 학습지 교사 등)부터 15시간미만 단시간 노동자까지 어느 누구도 제외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는 근로기준법의 보편적 적용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비정규노동자의 단결권 행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실현 가능하다. 이를 위해 비정규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은 필수적이다. (이주영)

<인터뷰> '울산인권운동연대' 창립인사 드립니다.

오늘(23일) 울산지역의 인권신장을 위해 일할 인권단체가 출범한다.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에 걸친 준비를 거쳐 출범하는 '울산인권운동연대(대표 최민식)'의 김창원 사무국장의 얘기를 들어보았다.

- 인권연대의 설립취지는? : 인류의 역사는 '사람답게 살기 위한 과정', 곧 '권리찾기'의 과정이라 생각한다. 인권이란 보편적 가치에 의해 다양한 부분과 영역을 포괄하는 단체의 필요성을 느껴서이다.
- 인권연대라는 이름을 붙인 까닭은? : '인권운동의 한 방식'으로서 '연대'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인류공동의 사회적 재부를 공유하고 나누려는 노력, 다른 사람에 대한 권리침해가 우리에게 대한 권리 침해로 다가온다는 사회적 책임의식을 지역에서 만들어나기길 원해서이다.
- 어떤 준비과정을 거쳤나? : 울산지역의 특성상 노동권에 중점을 두고 가능한 현장을 직접 취재해왔다. 언론에서는 주로 대기업 문제를 보도하기에 중소기업이나 하청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았다. 실제 조사를 해보니 70년대의 노동조건을 느낄 정도이다. 사회적 인식이 여기에 미치지 않는 것이 안타까웠고 이런 부분에 힘이 부치더라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노동문제 외에 울산지역의 특화된 인권문제가 있다면? : 도시가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교육권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 또한 관이 주도하는 개발공사에 의해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20년 이상 피해를 보고 있으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 앞으로 주로 할 활동은? : ▲'주간울산인권소식' 발간을 통한 지역 인권상황 보도 ▲ 대학생 인권강좌, 여름방학 청소년인권교실 등 인권교육 ▲구속자 지원사업 ▲사상·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자유권 확보를 위한 활동 ▲노동권, 생존권 등 사회권 확보를 위한 활동 등이다.

(문의: 052-242-1119) (류은숙)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6월 24일(토)

제 1642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19살짜리 범직자 만들기 '식은죽'

수배자 오인, 진실 밝혀지자 보안법 씩씩

남북정상회담 바람을 타고 국가보안법 개폐분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한편에서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덮어씌움으로써 'خن수'를 올리는 경찰의 수사관행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3일, 경찰은 명동의 한 PC방에서 서일대 99학번 황선동(19세) 군을 체포했다. 이 날 경찰은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천막농성 중인 정치수배자들의 부탁을 받고 농성소식을 컴퓨터 통신망에 올리려고 PC방에 들른 황 군을 미행 끝에 붙잡은 것. 황 군을 면회한 이상희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이 황 군을 붙잡으면서 "너 지명수배자지?"라고 했다고 한다. 즉 사발한머리로 농성장에서 나오는 황 군을 영낙없는 정치수배자로 찍고 미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황 군은 정치수배자도 아니었고 그가 다니는 서일대 총학생회가 한총련 소속인 것도 아니었다. 이런 사실은 곧 밝혀졌지만 경찰은 황 군을 풀어주지 않았다. 장안동 보안수사대에서 국가보안법을 덮어씌우기 위한 '별건 찾기'에 골몰한 경찰은 결국 그를 집시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송치하는 '개기'를 올린 것이다. 황 군이 노동절 집회, 범민족대회, 한총련 대의원대회에 참가했으며, PC방에서 가지고 있던 디스켓에는 그가 통신망에 올린 농성소식 외에도 한총련 관련 파일들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 그의 '범직사실'이었다.

이상희 변호사는 "황 군이 그 당시 가지고 있던 디스켓은 다른 사람 것이었을 뿐 아니라 그 속에 한총련 관련 파일이 들어 있다고 하지만 이는 그가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며, "19살 소년

을 대공분실에 데려다가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다니,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서일대학교 학생회의 한 임원은 황 군이 "독방에 며칠 동안 갇히기도 하고 계속되는 신문에 정신적·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심태섭]

<논평> 상호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남북정상의 만남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다시 화려하게 물위로 떠올랐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대남 혁명전략을 수정할 뜻을 내비침으로써 국가보안법 대폭개정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상호주의'는 바야흐로 가장 손쉽고도 설득력 있는 국가보안법 개폐론이 되고 있는 셈이다. 과거 북한이 어차피 대남 혁명전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본 수구기득권세력이 국가보안법 개폐 주장을 동맹기 위하여 애용했던 논리가 바로 상호주의였다. 사실을 상기할 때 역사의 아이러니를 실감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상호주의가 국가보안법의 운명을 결정하는 듯한 이 상황이 불안하다. 상호주의가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흥정에 다름이 아니며, 흥정은 때로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일정한 타협점을 찾아 '안정대'에 들어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려되는 상황은 국가보안법 중 북한을 직접 겨냥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겨냥하는 7조, 특히 7조 3항이 흥정 대상에서 빠져 어떻게든 살아남는다는 시나리오다.

돌이켜보면 상호주의는 반드시 수구세력의 전유물만은 아니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운동도 과거에 알게 모르게 상호주의에 침투당해온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가져보곤 한다. 예를 들어 "조국통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주장 또한 상호주의로 귀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형식논리로 "북의 국가보안법"도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는 조잡한 대항논리를 필연적으로 낳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통일운동과 강하게 결부된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우리의 어슬픈 정치논리가 우익의 조잡한 상호주의 논리를 강화시켜왔고 우리는 그렇게 강화된 상호주의 논리를 넘어서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 운동의 '업보'이다.

상호주의의 주술에서 해방되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의 중심에 '남·북'의 관점이 아닌 철저한 '인권'의 관점을 세워야 한다고 믿는다. 국가보안법이 '북한의 존재' 때문에 유지되어야 한다는 말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애당초부터 언제나 국가보안법의 본질은 '북의 위협'을 빙자한 남한 내 진보세력과 민중에 대한 폭력이었다. 굳이 말한다면 우리는 북한과 화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하고 있는 이 암담한 인권침해를 분쇄하기 위하여 보안법을 철폐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상호주의가 끼어들 여지는 없다.

쉽게 눈에 들어오는 지름길을 버려야 한다. 차분한 발걸음으로 모든 이웃에게 '인권'을 전도해야 한다.

매향리에 대한 입장 밝혀라 미 국무장관 방한 맞아 기습시위

23일 오후 3시 10분 경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방한을 맞아 인권·사회단체 회원 20여명이 세종로 종로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미군이 벌인 각종 살인 폭력 범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공식 사과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20여분간 시위를 벌인 후 해산하였다. 이날 집회에서 김종섭 (소과개정국민행동 조직국장) 씨는 "이제껏 50여 차례가 넘게 항의서한을 미국측에 전달했지만 무응답이었다"며 "미 국무부 장관은 매향리 사적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중국을 거쳐 24일 방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하루 앞당겨 방한, 이날 오후 김 대통령을 면담하였다. 이날 면담에서는 '주한미군의 위상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류은숙)

안산경찰서 규탄집회

중국인 노동자 고문수사 진상 규명 요구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회장 이정호) 회원 50여명은 23일 오전 안산경찰서 앞에서 지난 9일과 13일 사이에 안산서에서 자행된 중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고문수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보상 ▲책임자의 구속·처벌 ▲안산경찰서장의 직위해제를 요구하였다. <관련기사 본지 6월 20일>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의 노종남 사무국장은 "사건 발생 이후 안산 경찰서는 어떠한 자체 조사 결과도 내놓지 않고 무조건 축소하려고만 들고 있다"며 "현재 피해자들은 불면증과 계속되는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경 감찰과는 22일 위모 씨 등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23일에는 가해자와의 대질 진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은숙)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주최 토론회 변경 알림
때: 7월 3일(월) 오후 2시
곳: 국회 헌정기념관

<특별기고> 매향리, 비로소 'NO'라고 말하는 한국 땅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학)

60대의 아버지 뺨 신부와 30대의 아들 뺨 신부가 덥석 부둥켜안았다. 한동안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붉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문정현 신부와 최중수 신부는 이렇게 화성경찰서 면회실에서 생환의 기쁨과 설움을 나눴다. 불과 하루만의 재회였지만 참으로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6월 20일 오전 11시, 최 신부는 죽음을 무릅쓰고 폭격연습이 진행중인 농섬을 향해 몰래 길을 떠났다. 그때부터 문 신부의 가슴은 바짝바짝 타들어갔다. 때 순간을 기도하며 견뎌지만 가슴 속 깊은 곳에서 통탄과 울분이 덩어리째 넘어왔다. 최 신부는 6km 떨어진 곳에서 배를 내린 후 뺨발을 걸었다. 때로는 무릎까지 빠지면서 피약별 속을 마냥 곁었다. 농섬에 다 왔을 때 미군 헬기가 두 번이나 정찰을 돌았고 결국 발견되었다. 죽기를 각오했지만 막상 미군 헬기가 농섬에 기총소사를 뿌려대자 두려움이 엄습했다. 같은 시각 문신부는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미군헬기의 움직임을 분 단위로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 끝에 두 신부님은 또 우셨다.

최신부는 자신을 찾아낸 후 겁을 줄 목적으로 5백 미터 떨어진 농섬에 유유히 기총소사를 퍼붓고 돌아간 미군헬기의 모습이 "바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대하는 태도이자, 매향리의 원인이고 미군범죄의 뿌리"라고 단언했다. 한 젊은 평화운동가는 그날 오후 집회에서 "바로 그 순간 미국은 한국의 양심에 기총소사를 가한 것이며,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서 이미 죽은 몸이 되었다"고 절규했다. 그렇다. 주민 2500명이 살고 있는 마을의 코앞에 사격훈련장과 폭격연습장을 운영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미국에는 물론 미국이 주둔한 어떤 다른 나라에도 없다. 집회 때의 단골 구호처럼, "클린턴 대통령과 미군사령관은 매향리에 와서 3일만 살아봐라!" 그리하여 "고막이 찢어지는 소음과 창자가 떨리는 진동"을 온몸으로 느껴봐라. 실제로 A10기와 F16기가 마을 어귀의 두 나무 사이를 초저공으로 날아들며 표적을 향해 발사하는 "찌덕덕" 소리는 내장을 울렸다. 얼마나 낮게 날면 헬멧을 쓴 조종사의 뺨이 보일까. 전방대에 부딪힐 듯 아슬아슬하게 날아와 기총소사를 내뿜고는 급상승한 후 좌측으로 타원을 그리며 다시 돌아오는 1분 남짓한 시간은 굵고 깊은 굉음이 온마을을 짓누르는 시간이자 통탄과 분노가 가슴을 찢는 시간이다.

매향리에서는 이런 끔찍한 광경이 하루 평균 200번 되풀이된다. 50년 동안 한결같이. 그것도 눈떠서 눈감을 때까지. 추서에도, 설날에도 쏘아댄다.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에는 멈춘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서양속담도 있건만, 안하무인이요, 오만방자의 극치다. 매향리는 팔레스타인이자 로마가 아닌 것이 틀림없다. 이런 매향리에 한국 정부는 있었던 적이 없다. 요즘에도 정부측 인사는 보이지 않는다. 애꿎은 동네 의경들만 방패막이로 동원될 뿐이다. 때로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방패를 사이에 두고 몸싸움을 벌인다.

매향리에서 한국은 주권국가가 아니다. 이미 미국 정부의 비공개자료를 단순 추종해서 폭탄피해가 없다고 발표한 못난 나라다. 매향리에서 미국은 인권국가의 허울을 집어 던졌다. 매향리의 미국은 강대국가(rogue state)일 뿐이다. 한미간의 진정한 선린관계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매향리에 가서 반미 구호를 외치고 못난 정부를 꾸짖어야 한다. '강대국가'와 '비공개국가'의 그릇된 유착을 인권과 평화의 바른 연대로 이겨내야 한다. "미군 손에 죽지 못했으니 이제 항의단식해서 자진할 생각"이라는 최 신부님의 단단한 각오로, 또한 심장병을 앓으면서도 민족의 자존과 자주를 위해 동조단식을 결행할 생각이라고 담담히 말씀하시는 문 신부님의 흔쾌한 용기로!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6월 27일(화)

제 1643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유서대필'사건 검사 대법판된다.

시민단체, 강신욱 서울고검장 임명제청 논란

'유서대필'사건 지휘검사는 과연 '인권의 마지막 보루'에 임명할 수 있을 것인가?

23일 최종영 대법원장은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대법관 6명의 후임자 속에 강신욱 서울고검장을 포함시켜 김대중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강신욱 서울고검장은 지난 91년 서울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른바 '유서대필'사건의 지휘를 맡아 강기훈(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총무부장) 씨에게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이 내려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유서대필'사건 치명적 사법불신

명지대 1학년이었던 강경대 군이 시위도중 '백골단'에게 맞아죽은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범국민적 항의운동이 65만명의 시위대를 동원하면서 정점으로 치달던 91년 5월 18일, 검찰은 '유서대필'사건을 발표했다. 정권에 대한 잇따른 분신행위를 '재야가 배후조정하고 있다'는 악성 루머가 유포되는

가운데 검찰은 5월 8일에 서강대에서 분신·투신한 김기철 씨 유서를 강기훈 씨가 대신 써주었다고 단정했다. 이 사건은 수사과정, 재판과정 모두가 상식을 초월하는 억지와 의혹으로 점철되어 있다. 강기훈 씨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풍부한 증거들은 거의 다 "조작된 것"이라는 한마디로 배척되었지만 그것을 "조작"했다는 범인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감정실장 김형영 씨가 검찰의 희망대로 감정을 해주었다는 충분한 정황이 제시되었으며, 김형영 실장이 제출한 '감정서'는 결론만 있고 이유설명은 거의 없는 이상한 '감정서'였다. 더구나 1심재판 후 그가 오랫동안 돈을 받고 허위감정을 해온 사실이 밝혀지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결국 "돈은 받았지만 감정은 허위가 아니었다"는 못지 못한 논리가 그를 보호했다. 또한 검찰이 재판 결과를 좌우할 결정적인 김기철 씨 필적자료를 숨겨온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요컨대 이 사건은 당시 노태우 정권의 '위기탈출용' 조작사건이라는 강한 의혹을 낳은 사건이며 국민 사이에 치명적인 사법불신풍조를 조장한 사건이었다.

'유서대필'사건 치명적 사법불신

명지대 1학년이었던 강경대 군이 시위도중 '백골단'에게 맞아죽은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범국민적 항의운동이 65만명의 시위대를 동원하면서 정점으로 치달던 91년 5월 18일, 검찰은 '유서대필'사건을 발표했다. 정권에 대한 잇따른 분신행위를 '재야가 배후조정하고 있다'는 악성 루머가 유포되는

"끝까지 범인으로 몰고 갔다"

그로부터 9년, 강신욱 검사는 승진을 거듭하다 드디어 대법원의 문턱에 서있으며 그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벌써부터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94년 만기출소하여 현재 모 외국어학원에 근무하는 강기훈 씨는 강신욱 검사가 대법관에 임용제청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그는 조사 도중에 내가 범인

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지만 끝까지 나를 범인으로 몰고 간 사람"이라며 "정말 한심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당시 용의자의 한사람으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임 아무개(학원 경영) 씨도 강신욱 검사에 대해 "기훈이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검사들이 제 혐의로 쓰는 1회용 종이갑을 임 씨의 얼굴에 던지는 등 "거의 정신병자처럼 날뛰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강신욱 검사 임용제청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민주사회를위한연호사모임 사무총장 윤기원 변호사는 "이대로 지나칠 수 없다"며 27일 내부 회의에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참여연대 역시 강 검사를 부적격자로 규정, 임용반대운동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다.

대법관 임용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7월 6일과 7일에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류은숙)

'한국사회의 이해' 구형 2년 7월 24일 드디어 선고

26일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창원지법 형사합의 3부, 이재철 판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하였다.

이날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유동열 경찰대학 부설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은 '한국사회의 이해'를 이적 표현물로 감정했던 장본인이나, 신변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발언을 요청하여 방청객이 퇴장한 가운데 증언을 했다. 지난 94년 검찰은 검상대 교수들이 집필한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를 이적표현물로 수사하여 장상환, 정진상 교수 등 집필자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7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류은숙)

인권 시평 **“포스트 냉전시대의 인권운동”**
 조효제 (성공회대 시민사회단체학과 교수)

남북한 화해가 우리 곁에 기정사실로 자리잡았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실질적·상징적 변화가 물결처럼 출렁인다. 이 변화에 대한 정치적 분석은 많이 나와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인권의 입장에서 보는 남북 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한반도 긴장완화가 남한의 인권운동에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또는 남한의 인권운동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을까? 하는 최소한의 질문도 거의 들리지 않는다. 남북화해는 한국 인권운동사의 새로운 차원 변화를 뜻한다. 즉, 민주화 운동과 동의어였던 인권운동 제1세대와 남북대결 유산인 국보법으로 상징되는 인권운동 제2세대를 뒤로 하고, 포스트 냉전시대로 가는 인권운동 제3세대가 개막된다는 말이다.

포스트 냉전시대 인권운동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선 인권 담론의 정치화를 들 수 있겠다. 인권운동 제1, 2 세대의 본질적 과제는 인권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 인가였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인권의 알파요 오메가는 인권의 법치화 담론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념의 압력을 인권규범이라는 보편성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법의 지배에 호소하는 편이 제일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이념적 압박 요인이 줄면 줄수록, 인권가치의 효과적 배분과 정례화, 자유권과 사회권의 통일적 추구 등을 위한 정치적 감수성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게 마련이다. 이 말은 인권의 법치화가 소멸된다는 뜻이 아니라, 법치화의 토대 위에서 정치화의 필요성이 증대된다는 말이다.

포스트 냉전시대 인권운동의 두 번째 특징은 통치와 인권 사이의 인과관계가 역전된다는 점이다. 솔직히 말해 지금까지의 인권운동은 큰 틀의 통치 구도 아래에 놓인 종속변수에 지나지 않았다. 체제가 인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인권운동이 거기에 대응하기도 바빴다. 이른바 치료적 인권운동의 현실이 그러했다. 그러나 향후 인권운동은 한반도 공존의 전제조건을 제공하는 하나의 독립변수가 될 것이다. 정치적 이념의 공백을 채울만한 담론으로서 인민의 삶의 질과 인권만큼 호소력 있는 주장도 드물다. 인권이 통치 양상을 좌지우지하고 예방적 인권운동을 펼치며, 국정에 함께 참여하는 공치(共治)의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된다.

끝으로 포스트 냉전시대 인권운동의 마지막 특징은, 남북한 통치체력의 정-정 연합에 대한 남북한 민중의 민-민 연대의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되겠다. 민족화해의 기쁨 앞에서 정-정 연합의 경제 우선적 접근, 국가주의의 무비판적 수용과 같은 문제가 묻히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분석과 입장정리가 인권운동 차원에서 언젠가는 필요하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민-민 연대의 필요성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탈냉전 시대의 우리 인권운동은 정치에 대한 감수성이 강화된, 공치의 한 주체이자 남북 민-민 연대의 한 고리로서 새 시대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20일 - 6월 26일)

1. '건강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정부의 의약분업 시행에 반발해 전국 병·의원들 전면 파업에 들어가, 진료마비로 잇단 인명사고와 고발·집단 손해소송·항의방문 이어져 (20-25일)

2. 매향리, '저항'은 멈추지 않는다
 미군의 사격연습 재개에 대학생 등 12인 맨몸으로 사격장 점거 나서, 이 중 최중수 신부 등 2인이 농성에 올라 대형 태극기 펼쳐, 한편 이들의 진입 도중 공포탄과 기총사격 이어져 총격(20일) 대학생 6명 기총사격장 점거시도로 연행(21일) 농성 진입으로 연행된 8인 불구속 입건된 뒤 풀려나(22일)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방한 회견, "주한미군 철군이냐 잠복은 시기상조다. 논의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23일)

3. 한국전쟁은 학살전쟁
 '한국전쟁 직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모임', '전쟁과 인권' 심포지엄 갖고, 50년만에 처음으로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 학살의 전모와 구체적 해결방안 모색, 무려 100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희생된 배경과 '학살단행이 북한 쪽 소행이었다'는 선입관과 달리 남한과 미군에 의한 희생자가 서너 배 이상 많다는 사실 등 발표(21일)

4. 빨간불! 정신지체여성장애인의 성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기자회견 갖고 '성폭력에 짓밟히고 있는 정신지체여성장애인의 인권보장' 촉구, 센터에 따르면 지나 2월부터 5월 사이에 4건의 정신지체여성 성폭행 사건 접수(20일)

5. 경총, '주 5일 근무제' 깰데기만 수용
 경총, 월차 및 유급 생리휴가 폐지 등의 전제조건이 수용된다면 주5일 근무제를 수용하겠다고 결정(22일) 이에 노동계는 '주5일 근무제 수용을 빙자한 근로기준법 전면 개악기도'라고 비난하고 '주5일 근무제는 노동조건 후퇴 없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

6. 고용승계 불이행에 조각나는 노동자의 삶
 금속산업연맹 '고용승계 투쟁과 노동자 삶의 질 연구' 발표회 갖고 지난 96년 포천에 분리매각된 후 고용승계를 요구하다 97년 해고된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삶 해부, 복직 투쟁 3년에 '빈곤화 가속화·가족해체·사회적 고립·건강악화'로 고통받는 것으로 드러나(21일)

7. 가난한 세계, 그 많은 것은 누가 다 가졌을까?
 국제노동기구(ILO) 연례보고서, 전세계 60억 인구 중 1/4인 15억 명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밝혀(21일)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베트남? 입 다물어!”

고엽제 전우회 한겨레 난동, 베트남 캠페인 위축 우려

27일 오후 7시경 만리동 한겨레 사옥 앞, 길바닥은 은통 짓이겨진 한겨레신문과 구독료 청구 지로용지로 뒤덮여 있었다. “베트남이 양민이면 한겨레 기자는 빨갱이다”는 붉은 글씨의 피켓이 눈에 확 들어왔다. 전투복 차림의 중년 사내들이 얼굴이 벌건 채 곳곳에서 경찰을 상대로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30만 명의 참전이 잘못된 보도로 물거품이 됐어”, “몸 아파도 보상도 못 받고 있는데 양민학살 했다고 까발리면 어찌겠다는 게야”, “그렇게 썩대지 못하게 정부하구 국방부가 나서서 자제를 시켜야하지, 국가명예에도 문제가 있다구”

무전기를 든 경찰 지휘관들끼리 말을 주고받았다. “술들을 원체 마셨어요. 그러니 어쩔 수가 있었어야지”, “길바닥에 앉아서 계속 마시더라구” 7시 50분, 길이 뚫리면서 신문수송 트럭이 사옥에서 빠져 나왔다. 언뜻 보이는 1면 기사 제목은 ‘고엽제 전우회, 본사서 난동’.

남아있던 몇몇 시위대가 전경버스로 연행되고, 경찰대열 일부가 철수되자 드러난 한겨레 사옥 곳곳에선 ‘힘의 과시’로 인한 상처가 입을 벌렸다. 마포서에 낸 고엽제전우회의 집회신고에는 원래 ‘80명’만이 집회를 할 것으로 신고되어 있었다. 하지만 “저기

고개 위부터 큰길가까지 꼭 차게 와서 는 군가를 부르더라구. 2천명은 됐을 거야”라며 경비원이 유리가루를 털어 내는 수위실은 빼대만이 남아 있었다. 주차장엔 유리가 박살나고 지붕과 문이 찢그러진 차량들이 어처구니없다는 듯 서있었고, 그 앞에서 불에 탄 한겨레신문을 쓸어내는 작업이 시작됐다. 오후 2시경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회장 양상규)’의 시위는 그렇게 끝나고 있었다.

“전쟁의 광기를 느꼈다”라고 현장에 있던 한 인권단체 활동가는 몸서리쳤다. 꽤 규모있는 베트남 문화제를 준비중인 그는 똑같은 일이 공연장에서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베트남전에 관한 기사를 썼던 한겨레 21기자는 급히 가족들을 대피시켰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처럼 과감한 어조로 베트남 문제를 발언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다시 보는 책 ‘대법관 후보 강신욱 검사를 청문한다’
‘유서사건’ 총자료집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편, 가격 10만원

대법관에 임명예정인 강신욱 검사를 청문할 그 모든 자료가 여기 있다. 재판 결과를 좌우할 김기설 씨 필적자료를 숨기고, ‘내가 범인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지만 끝까지 나를 범인으로 몰고 간(인권하루소식 6월 27일치, 강기훈) 강신욱(91년 서울지검 형사1부장) 검사가 인권을 지키는 최후보투라는 대법관으로 제청돼 곧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91년 노태우 정권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이 일어나던 때 검찰은 강기훈 씨가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필했다고 기소하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유서사건’ 총자료집! 1991년 5월 ‘유서대필’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상식과 편견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백서다. 1992년 7월부터 1년 여에 걸친 편집 작업을 거쳐 1993년 6월에 발간된 ‘유서사건’ 총자료집은,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그리고 관련자료까지를 이처럼 완벽하게 망라. 수록하여 간행하는 예는 국내에서는 일찍이 없었던 일(총자료집 격려사, 한승헌)’로, ‘검찰과 법관의 궤변집, 그리고 거짓말의 집대성(총자료집 발간사, 함세웅)’이다.

수사기록 798쪽(1권), 공판기록 876쪽(2권), 기타자료 950쪽(3권) 등 모두 2624쪽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집은 이제 강신욱 검사를 향해 묻는다. 당신은 상식대로 수사했느냐고. 그래서 당신은 인권의 최후보투라는 대법관의 자격이 있느냐고. (문의:02-741-5363) (심보선)

어느 정부든 ‘용사’들에게 ‘정의의 전쟁’을 독려하면서 전쟁터로 내몬다. ‘정의의 전쟁’이라는 허구는 국가가 전쟁시대의 가장 비참한 피해자들이 그 상실감과 죄의식을 견뎌 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부여하는 ‘신앙’이다. 그들은 그 ‘신앙’에 매달리며 살아간다.

물론 그들에게도 그런 ‘신앙’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기 위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있다. 그러나 이날 벌어진 상황은 분명 언론의 횡포에 맞서는 약자의 자기 표현도 아니었거니와 당당한 주장의 개진도 아니었다. ‘냉전시대의 주인공’은 ‘정의의 전쟁’을 비웃는 ‘방자한 언론’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그것은 테러였다. <한겨레>에 대한 테러가 아니라 오랜 냉전시대를 통해 죽은 듯 엎드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약자들의 가녀린 목소리에 대한 테러에 지나지 않았다.

고엽제 전우회의 폭력은 바로 약자의 희망인 언론 자유의 싱그러운 나무에 뿌려진 ‘고엽제’였다. (류은숙)

청송 교도관, '머리카락 보일라'

윤치고 씨 재판에서 오리발잔치

청송감호소 출소자 윤치고 씨의 무고(誣告) 사건 재판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윤 씨는 자신이 기소된 이 사건에서 오히려 10여명에 이르는 당시 교도관들을 법정에서 끌어내어 신문할 계획을 세웠다. 27일 서울지법(재판장: 배준현)에서 열린 5차 공판에는 그 세 번째 증인인 당시 관구주임 전재관 씨가 '끌려' 나온 것.

93년 윤치고 씨는 청송 2감호소에서 여광석 당시 소장과 교도관들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결과는 물론 '기각'. 그는 바로 재정신청을 냈지만 그것도 감감무소식이었다. 그런데 96년 가출소한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재정신청이 취하돼 있는 것을 알았다. 교도관들이 취하서를 조작했다고 판단한 윤 씨는 98년 교도관들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 역시 기각되고 그는 오히려 검사로부터 무고혐의로 기소당했다.

이날 법정에 선 전재관 증인은 임영화 변호사의 질문에 무조건 "모른다"고 우겨댔다. >재정신청 취하서 작성을 위해 윤 씨가 냈어야 할 집필허가권이 왜 없는지 >취하서를 윤치고 씨 본인이 작성한 것인지 >재정신청을 한 지 하루만에 취하할 만한 사유가 윤 씨에게 있었는지 등등. 핵심적인 질문에 모조리 "모른다"로 맞섰다. 심지어 당시 소장 이름, 함께 근무했던 교도관들 이름도 "모른다"였다.

이른바 '악질 교도관'의 모습이 매우 초라해 보이는 날이었고, 역설적이게도 교도관의 "모른다" 속에 바로 청송의 실체적 진실이 숨어 있음을 실감케 하는 재판이었다. 네 번째 교도관이 '끌려' 나오는 6차 공판은 7월 25일. (김보영)

의정부시-환경미화원 분쟁 '타협'

23일 의정부 환경미화원들은 90일의 파업투쟁 끝에 의정부시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관련기사 본지 4월 22일자).

합의서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59세로 정년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지난해 해직했던 시설관리공단 소속 미화원 11명 중 59세 이하인 자들은 복직시켜야 한다. 또한 청소대행업체 (주)의정환경개발은 우선 소속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11만원 인상하고, 2001년부터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 수준으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사가 협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조병신 경기도 노동조합 사무차장은 "이번 합의가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는 △계약직 환경미화원이 정년연장과 임금인상에서 제외된 점 △시청으로의 원직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정부의 민영화방침에 따라 의정부시는 가로청소반 환경미화원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직시키는 과정에서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 그 결과 환경미화원들의 평균 임금이 40만원 가량 삭감되고, 61세였던 정년이 57세로 단축되어 11명이 해직된 바 있다. 또한 (주)의정환경개발의 환경미화원들은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도 지급받지 못한 채 저임금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희)

민중의 '건강권'과 의약분업

최용준 (평등사회를위한 민중의료연합)

지난주 내내 신문과 TV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의약분업, 그리고 의사들의 폐업, 파업. 현장을 떠난 양심적 의사들을 고민하게 하고 아프고 괴로운 민중의 불안을 자아냈던 의사들의 파업, 폐업사태만큼 떠들썩한 '권리'의 상처받은 일찍이 없었던 것 같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의권', '진료권'. 약사들이 주장하는 '약권', '조제권'. 언론과 시민단체, 심지어는 정부마저 입을 한 데 있었던, 결코 답보 삼을 수 없는 '환자의 권리'.

이 짧은 글에서 이렇듯 상처려진 권리들이 터져서 '의약분업' 제도의 잘잘못을 일일이 따지는 것은 줄이기로 하자. 그러나 과연 이 혼돈 속에서 과연 민중의 '건강권'이 각각각색의 권리들의 상처된 속에서 어떻게 빛이 바래고 있는지를 되새겨 보는 것은 필요하리라 본다. 우리 나라의 의료체계가 지극히 민간자본에 의존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민간자본은 당연하게도 이익의 논리를 좇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약값에 따르는 상거래의 마진을 누가 차지하느냐 라는 문제가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사와 약사의 싸움의 근본원인 중 하나다. 이미 약값 마진의 거품이 상당히 견여지기는 했으나 의사의 처방권 범위나 약사의 독자적 조제권 범위를 서로 넓히려는 시도는 이러한 이윤 동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상대적으로 이윤 동기에서 자유로운 공공의료의 우리 나라에서는 매우 취약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의료대란'에 직면하여 공공의료체계의 소중함을 깨우쳤다는 정부 당국자들의 얘기는 결과적으로 번지수를 제대로 찾기는 했으나, 문제의 근본원인에 비켜섰다는 점에서 오히려 부차적인 인식인 셈이다.

그러나 민간이든 공공이든 의료체계가 완비되어 있으면 무엇이냐? 의약분업 제도가 제 아무리 완벽하다면 무엇이냐? 이 모두가 민중이 아플 때 치료받기 위해 경제력 장벽을 넘어서고 없는 시간을 쪼개어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할 때, 비로소 제 나름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아파도 병원갈 수 없는 민중, 몸과 마음이 힘들어도 치료를 위해 대가를 치를 수 없는 민중이라면 이 모든 제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의권'도 좋고 '약권'도 좋고 '환자의 권리'도 좋지만, 아플 때 치료 받고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돈' 때문에 의료에 대한 접근권, 건강에 대한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것이 민중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보혈료가 아니라, 노동자를 부리는 기업주의 재정 부담 확대, 국가가 앞장선 재정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제도의 경제적 토대가 더욱 확고하게 구축되어야 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이기도 하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6월 29일(목)

제 1645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에바다, 다시 구판 짜나 평택시, 새 이사진 후보에 구재단측 핵심 포함

평택시가 에바다 사태 초기 당시 핵심인물로 사태 발생 원인 제공자인 최성창(53, 목사)씨를 새 이사진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져 지역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에바다복지회의 이사진 선임권을 쥐고 있는 평택시(시장 김선기)는 28일 이사 후보 13명에게 취임승낙서를 발송했다. 이들 13명 중에는 김철준 변호사, 김종인 나사렛대 교수 등 개혁적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으나, 최씨를 비롯해 최씨의 동생인 최성호(50, 목사)씨를 비롯, 최씨 일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6명도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공동대표 단병호 등)의 소속단체들은 최씨 일가가 배제된 민주적 이사회의 구성을 통한 사태 해결을 평택시에 촉구해왔으며, 특히 지난 3일부터 에바다전국대학생연대회의(의장 최동엽)는 평택시청 앞에서 이를 주장하며 천막농성을 전개해왔다.

이날 오후 1시부터 평택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던 대학생, 지역단체 회원 등은 이 소식을 접하고 평택시에 격렬하게 항의하고, 거리 연좌농성 및 시청 진입을 기도했다.

집회에서 민주노동당 평택지구협의회 김은찬 사무차장은 "오늘 드러난 명단은 그동안 에바다복지회의 정상화와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들과 공대위 측의 투쟁과 배치되는 것이며, 최씨 일가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에바다전국대학생연대회의'의 김도현 정책국장도 "이번 이사진 구성은 3년 6개월의 에바다 투쟁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사태 초기 에바다 학교장과 이사장을 지낸 최성창 씨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인물로 당연히 배제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 노동장애인야간학교 교사 양현준씨가 갈비뼈 4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평택 박애병원으

로 후송되었으며 이외에도 시위 참가자 1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한, 대학생연대회의 최동엽 의장은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경찰은 대학생들의 농성장 천막을 부수기도 했다. 평택지역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대학생들은 이날 밤늦게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단식농성과 식발투쟁을 결의했으며, 오는 7월 1일 오전 11시 평택시청 앞에서 대대적인 항의집회를 열기로 했다. (박래군)

우리는 사망신고를 했다

매항리 주민 3백여명, 주민증 반납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는 것은 사망신고와 다름없다. 이미 사망신고를 냈으니 두 번 세 번 죽더라도 사격장을 폐쇄하겠다"

28일 매항리 주민 3백여 명의 주민등록증을 화성군청에 반납하면서 최용준 주민대책위 위원장은 이렇게 심경을 밝혔다.

이날 주민증을 반납하기에 앞서 매항리 주민 3백여 명은 "근조 매항리"라고 쓰인 상여와 상복 차림의 대표들을 앞세우고 화성군청 앞에서 '매항리 장례식'을 치렀다. '주권국가라 할 수 없는 곳에 살고 있으니 국민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이날 장례식에서 울려나온 통곡이었다.

주민대표들이 군청에 들어간 사이 군청정문을 사이에 두고 경찰과 매항리 주민들간에 몸싸움이 벌어져 주민 박성민(43, 매항2리)씨가 부상을 입고 입원하였다.

한편 주민들이 장례식을 치른 이날도 미군기의 폭격은 어김없이 진행됐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폭격연습은 최근 들어 가장 심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류은숙)

행사와 동정

- 북한 주민의 북한 사회·경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조사 발표회
 - 때: 6월 29일(목) 오후 3시
 - 곳: 프레스 센터 19층
 - 주최: (사) 좋은벗들(02-587-8996)
- 산재노동자 합동추모제
 - 때: 7월 2일(일) 오전 11시
 - 곳: 마석모란공원
 - 주최: 2000년 산재추방의 달 사업 공동추진위원회(02-468-4925)
- '민주화운동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 공개토론회
 - 때: 7월 3(월) 오후 2시
 - 곳: 국회 헌정회관
 - 주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02-764-1684)
- 평화문화제 '사이공, 그날의 노래'
 - 때: 7월 6일(목) 오후 7시
 - 곳: 숭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
 - 주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위원회(02-3675-5808)

공권력 투입될지 모를 특 1급 호텔 롯데호텔 등 호텔 3사 노동자 파업

호텔 롯데, 스위스 호텔, 힐튼호텔 노동자의 파업에 공권력이 투입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불법 폭력업단'을 강조하고, 곧 이어 검찰에서도 파업중인 호텔 롯데에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호텔 롯데(사장 장성원)는 28일 이후 단체예약을 제외한 체크인을 하지 않고 있고 연회예약을 취소하는 등 공권력 투입으로 인한 특 1급 호텔의 모양새를 고려하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전국 관광노련(위원장 조천)과 함께 29일 오전 11시 호텔 롯데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폐업과 소외계층인 노동자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파업을 똑같은 불법 폭력 집단이기주의로 엄벌'하는 것은 '정반대 성격의 사회현상을 동일시하는 잘못된 판단'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호텔 롯데 노동조합(위원장 정주익), 힐튼 호텔 노동조합(위원장 김상준), 스위스 그랜드 호텔 노동조합(위원장 이성중)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직접인력 확보 ▲봉사로 임여금 책정 등의 공동요구안을 내걸고 파업을 하고 있다.

이들 파업에는 비정규직과 비조합원들도 동참하고 있다. 전국관광노련이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호텔 롯데와 스위스 그랜드 호텔 비조합원들이 몇백만원에 이르는 투쟁성금을 모아 노조에 기탁했고, 힐튼호텔 연봉계약직 노동자가 파업에 참가했다.

전국관광노련의 박진희 사무차장은 "비정규직, 비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호텔 3사 노동자들의 요구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관광노련이 28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호텔 롯데는 일방중재 조항을 악용, 공권력이 투입되기만을 기다리며 교섭에 임하지 않고, "힐튼

호텔과 스위스 호텔은 호텔 롯데의 눈치만 보며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호텔 롯데 정주익 위원장 등에게는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고, 힐튼호텔과 스위스 호텔은 28일 각각 노조원 30명, 10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힐튼호텔은 28일 일회 노동자들의 회사출입을 금지하는 부분 직장폐쇄 조치를 취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사무차장은 "IMF 이후 환차이으로 호텔의 매출과 이익이 오히려 증가했는데도 비정규직을 늘려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호텔 롯데의 경우 1997년 매출액 6,028억7천6백만원, 당기순이익 7백억1천4백만원에서 1999년에 매출액 8,434억8천만원, 당기순이익 813억4백만원으로 증가했다. 또 3월 말 현재 전체인원 3,404명 중 비정규직이 1381명으로 40.5%를 차지하고 있다. 박 사무차장은 "특히 이들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규직과 평균 30-40%의 임금격차를 보인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 "특급호텔의 예식업도 가능해지는 등 업무가 더 늘어 필요한 인원이 더 증가해야 하나 오히려 인원이 감소해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처지"라고 밝혔다.

이용 요금에 10%의 봉사를 부가하여 노동자에게 쥐어 하는데도 이들 호텔은 봉사의 일부(봉사로 임여금: 편집자 주)로 비정규직의 임금을 지급하고 호텔 증축자금 등으로 사용해 왔다. 이에 대해 박 사무차장은 "봉사로 임여금을 노동자에게 돌려달라는 것"이라며 "봉사로 임여금 지급 문제는 호텔업계 노동자의 생계문제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봉사는 건설교통부가 1979년, 이용 요금에 10%를 부과하여 전역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전국관광노련은 28일 "(정부는) 봉사

료가 전액 노동자에게 지불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노사간 자율교섭을 보장하고 사용자들이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도록 정부가 나서라"고 요구하였다. (심보선)

불잡아 남긴 '깡패' 구속수사요구 오트론 연대투쟁위 집회

한화정보통신 오트론 구로공장의 해고노동자를 석방하고, 폭력을 행사한 '구사대원'을 구속수사 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가 28일 오후 5시 남부경찰서 앞에서 열렸다.

오트론 연대투쟁위, 남부지역 연대회의(의장 윤창식) 등 100여 명은 지난 20일 구속된 이 회사 해고노동자 이상희, 장병남, 정미정 씨의 석방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또, 지난 17일 한화구사대가 이 회사 해고노동자 농성단에 폭력을 행사하는 중, "전광재(서울시립대) 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심용섭, 박00 씨 등 2명을 불잡아 남부경찰서에 넘겼으나 박씨만 불구속 입건하는 데 그쳤다"며 이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을 강조했다.

집회에 참가한 최명숙 씨는 "(한화에서) 입사한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남자 사원을 구사대로 동원한 것 같다"고 안타까워 했다. <관련기사 본지 6월 21일> (심보선)

함세환 씨, 보안관찰법 무죄

27일 대법원 1부는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세환(69, 전쟁포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 씨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북한송환을 호소하고 다른 보안관찰대상자와 회합했다는 이유로 지난 97년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함 씨는 99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검찰이 대법원에 항고했으나 이번이 기각된 것이다. (김보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6월 30일(금)

제 1646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특공대 새벽नि입 노동자 난타

"인간대접 받고싶다"...호텔 롯데 파업 강제 해산

경찰이 호텔 롯데 파업을 해산하면서 퇴로도 남겨놓지 않는 '토끼몰이식 작전'으로 일관, 수십 명의 노동자가 부상당했다.

29일 새벽 4시 경찰은 호텔 롯데에 서울시경 기동대와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연막탄 등을 쏘고 곤봉을 휘두르며 노동자들을 해산시키고, 정주익 호텔 롯데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1천 9십여 명의 노동자를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은 김병철 씨 등이 백병원, 강북삼성병원, 국립의료원, 경찰병원 등에 후송돼 있다.

지하의 방재실과 변전실을 확보한 경찰은 2층 크리스탈 룸으로 진입, 노조원들을 36·37·38 층으로 '토끼몰이 하듯' 몰았다. 결국 2층과 37·38 층으로 동시 진입한 경찰에 의해 퇴로

가 막혔다.

"자욱한 연막탄에 앞도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 36·37·38층은 아수라장이었다"고 최영희(33, 조리부) 씨는 증언했다. 36층에 있었던 노조원 김지영 씨의 남편은 "현장에서 전화가 왔는데 '울음소리가 가득하다. 임신부가 하혈을 했다'고 비명 지르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다급한 목소리로 인권운동사랑방에 전화를 해오기도 했다.

민주노총 교신실장 손나구(38) 씨는 "핸드폰으로 전해지는 현장상황이 너무도 다급해, 퇴로도 없는 완전진압 작전으로 인명사고 위험성이 격정돼 '우리(민주노총)가 평화로운 해산을 설득하겠다. 작전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농성이 해산된 후 명동성당에서 만

난 호텔 롯데의 한 직원은 "우리는 돈 문제보다 인간대접을 받고 싶은 것이다. 새벽 2시에 일을 마친 후 (회사)가 당일 새벽 5시에 출근하라고 하면 우리는 출근해야 한다. 졸면서, 며칠씩 잠을 못 자 뷔페식당 테이블 밑에 기어 들어가 잠들었다가 아침에 식당에 온 손님이 깨우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의사폐업에는 협상으로 답하고, 호텔노동자에게는 경찰을 보낸 이유를 모르겠다. 아니 이해할 수 없다"고 울먹였다.

한편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이날 오후 긴급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전국 롯데관련 시설에서 정부와 롯데제별 규탄대회 개최 ▲이우영 경찰청장 퇴진 요구 ▲롯데제품 불매 ▲단위노조별 조합원 보고대회 등을 행동수칙으로 정했다. 또한 민주노총 등 30여 시민단체가 참여한 '민중대회 위원회'는 30일 오전 11시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공권력 투입에 대한 입장과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관련기사 2면> (심보선)

파견법 개악 절대 안돼

직접고용 요구 농성 돌입

근로자파견제 시행 2주년을 앞두고 제계의 근로자파견법 개악 시도에 대한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사회진보연대 등 20여 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파견·용역노동자노동권쟁취와 간접고용철폐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아래 파견철폐 공대위)는 29일 낮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제계의 파견법 개악 시도를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서 파견철폐공대위의 윤애림 씨는 "일시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2년 이내의 기한으로 파견노동자" 기사 2면으로 이어짐



이동수

롯데 노동자, 성희롱 고통 호소

호텔 롯데 여성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호텔 롯데의 면세공함점 주차장이 회식자리에 참석하게 하고 새벽까지 술을 따르게 하는 등 접대를 강요했다. 회식에 참석한 노동자에게는 식권25장(7만원 상당)을 줬다" 호텔 롯데 노동조합(위원장 정주영)이 올 6월 <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한 '호텔 롯데 노동조합 성 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여성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밝혀진 한 사례다. 여성노동자 3백82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승진(98.4%), 임금(85.6%), 배치(83.0%), 모집·채용(74.1%) 부문에서 차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치 않음에도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는 이유로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55.6%), 주위의 강요(22.5%)순으로 응답했다. 직장내 성폭력(성희롱)이 고용조건, 근무환경에 영향을 준다(98.0%)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응답자는 직장 성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구나 단체협약으로 가해자 처벌(71.2%), 성폭력 고발센터 설치(70.4%) 등을 주요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호텔 롯데 노조는 ▲1992년, 1993년 겨울 직원회식에서 사수가 부르스를 추면서 특정부위를 상대 여직원의 허벅지에 밀착한 것 ▲잠실 식음료부서 부과장이 올 4월 북한에술공연단에게 여직원을 '현대관 기생'이라고 소개 ▲월드 키친 부과는 특정 여직원에게 '애인이 되어달라. 돈을 주겠다'고 강요한 사실을 밝혔다. (심보선)

기사 1면에서 이어짐

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은 유지조각이 되었다"며 "제계는 한술 더 떠 파견노동자를 낮은 임금으로 영구적으로 부려먹기 위해 파견법을 개악하려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전국노동단체연합의 김해진 씨는 "제계는 장기간 일해온 파견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달 초 대한상공회의소는 파견허용업무에 대한 제한이나 파견기간에 대한 제한을 완화 내지 철폐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비슷한 입장을 내비치며 정·관계에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8년 7월 1일 시행에 들어간 근로자파견법은 일시적으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는 분야 혹은 전문적인 지식·기술이 필요한 분야로 파견근로허용업무를 제한하고 있으며, 파견노동자의 근무기간이 2년을 넘길 경우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파견노동자의 정규직 대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파견근로 2년 만료로 해고되는 노동자들의 항의 농성도 잇따르고 있다. KBS에서 6월 30일자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파견노동자 30여명은 28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민주노동당사 안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의 요구는 근로자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 및 정규직화이다. 앞서 26일엔 인천 길병원의 잡무직 파견 여성노동자 87명이 파견업체인 제니엘(前)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은 데 항의해 서초동 제니엘 본사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이주영)

인권의 눈으로 바라본 인간지능 프로젝트

김병수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위원회 회원)

인간 유전체 지도의 초안 완성 발표로 세간이 떠들썩한 것 같다. 각종 질병의 정복과 수명연장에 대한 기대가 있는 한편 그것이 몰고 올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 글에선 인간 유전체 지도 완성의 과학적 의미나 사회적 함의에 대한 논의는 접어두고 당장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인권적 측면 특히 유전적 차별과 유전적 프라이버시에 관해 논해 보기로 하겠다. 인간 유전체 지도의 완성과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의 유전정보를 활용하는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예전에는 검사조차 할 수 없었던 많은 질병들을 사전에 검사할 수 있게 되었고 범죄자 식별·신원확인·천자확인 등에 유전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국내에서도 일반화된 방법이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는 이같은 긍정적 측면을 압도하는 많은 위험 요소를 안고 있으며 이런 우려는 이미 외국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에서는 개인의 유전 정보를 이용한 보험가입의 불이익과 고용 및 승진에서의 차별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사회적·법적 논의들도 활발히 진행되어, 실제로 30여 개 이상의 주에서 고용과 보험가입에 있어 유전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연방법도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 논의되고 있다. 고용 및 승진에서의 유전적 차별은 노동자의 현재의 능력과 건강상태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이는 노동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작업장의 환경이나 조건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을 유전적 요인으로 돌리게 만든다. 또한 유전적 차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은 보험의 사회적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유전적 검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유전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일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미 미국, 영국 등은 국가기관에서 범죄자 식별과 신원확인을 위해 개인의 유전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범죄자와 개인식별을 목적으로 구축한 이러한 유전적 정보 수집은 그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고용이나 보험의 정보로도 이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범죄자 식별이라는 이름 하에 일반 개인에게 강제적인 유전자 검사를 강요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기관이나 병원 등 사적 기관에 의한 유전정보의 수집과 보관은 새로운 통제와 감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는 데다 도·감청 및 사생활 보호 개념과 제도가 미약한 우리 현실을 돌아볼 때, 유전 정보의 수집과 보관으로 생길 문제들의 심각성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이제 국내에서도 유전적 차별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논의들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인권하루소식 합본 14호 색인

감옥인권	/258	학원	/271
경찰폭력	/258	기타	/271
고문·가혹행위	/259		
교육	/259		
국가보안법	/259		
국제	/260		
군인권	/261		
난민	/261	논평	/272
노동	/261	만화사랑방	/272
농민	/265	인권간행물	/273
베트남학살대책위	/265	인권시평	/274
보안관찰법	/265	주간인권호름	/274
불처벌	/265		
비전향장기수 복송	/266		
빈곤	/266		
사법	/266		
사형	/266		
사회권 일반	/267		
사회복지	/267		
사회복지시설	/267		
아동	/267		
양심수	/267		
여성	/267		
이주노동자	/268		
자결권과 미국	/268		
장애인	/269		
집회·시위의 자유	/269		
참정권	/270		
평화	/270		
표현의 자유	/270		
프라이버시	/270		